

2008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8. 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2008년도에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생산 및 유통체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부문 구조개선과 인재육성 연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정 전환 연구, 농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연구, 농촌의 구성원 다양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 연구 등 5가지 연구기본방향을 설정하여 108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요약집은 2008년도에 완료한 연구사업의 핵심 결과만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연구내용의 요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연구보고서가 더욱 많은 관계자에게 읽히도록 하는 데 발간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요약집은 2008년도 연구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9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농산업경제연구 분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1/2차 연도)」 외 19과제, 식품정책연구 분야에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외 12과제, 농촌발전연구 분야에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차 연도)」 외 22과제, 농업구조·경영연구 분야에는 「전업농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외 19과제, 국제농업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 연도)」 외 15과제, 농업관측정보연구 분야에는 「농업전망 2009」 외 10과제, 산림정책연구 분야에는 「목재의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외 9과제, 그 밖에 동향분석연구 분야의 「세계농업정보」, 기획조정실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요약·수록하였다.

연구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분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9.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차 례

1. 농산업경제연구

1.1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2차 연도)	3
1.2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8
1.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12
1.4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방안	16
1.5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19
1.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22
1.7 고객지향적 농산물유통 사례 연구	25
1.8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27
1.9 농자재가격의 변동요인과 정책과제	29
1.10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평가	31
1.11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36
1.12 지역 단위의 순환농업시스템 개발	41
1.13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용경매장 건축 타당성 조사	45
1.14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 발전방안 연구	48
1.15 농협 김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53
1.16 경남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타당성 연구	57
1.17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63
1.18 식량안보문제의 발생가능성과 대비방안	66

1.19 사료곡물 안정적 확보 및 곡물가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방안.....	71
1.2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	75

2. 식품정책연구

2.1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 연구.....	81
2.2 농산물 수출유망시장 분석과 대응방안.....	85
2.3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88
2.4 농식품 감모 및 폐기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92
2.5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요인 분석.....	96
2.6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	99
2.7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103
2.8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105
2.9 미래의 농수산물 유통 전망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 연구.....	109
2.10 농식품 안전성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112
2.11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115
2.12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118
2.13 2007년도 식품수급표.....	122

3. 농촌발전연구

3.1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127
3.2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132

3.3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차 연도)	135
3.4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139
3.5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142
3.6	농촌지역통계DB 구축을 위한 연구.....	145
3.7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위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	149
3.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153
3.9	농작물 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155
3.10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158
3.11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	160
3.12	약용작물 지역전략사업 육성방안.....	163
3.13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평면정 모니터링 및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립.....	166
3.14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170
3.1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중간평가.....	172
3.16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2차 연도)	176
3.17	해외농업개발 지역별·대상작물별·유형별 연구.....	179
3.18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183
3.19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188
3.20	‘창조적 광역발전시대 농식품부 사업의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연구.....	192
3.21	초·중등학교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교과서 개정 방안 연구	196
3.22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198
3.23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개최.....	204

4. 농업관측정보연구

4.1 KREI-COMO 개발 및 축산분기모형 업데이트.....	209
4.2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2
4.3 화옹간척지 밭조성 사업의 경제성 분석.....	215
4.4 파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	217
4.5 농업전망 2009	221
4.6 농업·농촌경제동향.....	232
4.7 농업관측월보 채소.....	234
4.8 농업관측월보 과일.....	237
4.9 농업관측월보 과채.....	240
4.10 농업관측월보 축산.....	243
4.11 농업관측월보 쌀·콩	247

5. 농업구조경영연구

5.1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 분석.....	253
5.2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2차 연도)	256
5.3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259
5.4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2차 연도)	262
5.5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265
5.6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268
5.7 신기술과 농업경영의 비전 사례연구.....	271

5.8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274
5.9 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279
5.1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282
5.11 FTA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발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285
5.12 새만금 농업지역 개발방안 연구.....	288
5.13 대구광역시 도시근교농업 종합발전대책 연구.....	292
5.14 평택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295
5.15 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297
5.16 회생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 연구.....	301
5.17 농협중앙회 자회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04
5.18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308
5.19 KREI-ASMO 2008 운용·개발 연구.....	314
5.20 OECD-Aglink 2008 운용·개발 연구.....	317

6. 국제농업연구

6.1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 연도)	323
6.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327
6.3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331
6.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334
6.5 2008 OECD 농업분야 논의 대응.....	339
6.6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42
6.7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344

6.8 한·GCC FTA 협상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47
6.9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349
6.10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355
6.11 DDA 농업협상 쟁점과 대응방향.....	359
6.12 대북 식량지원 효과와 정책과제.....	365
6.13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368
6.14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영향 및 대EU 수출가능성 분석.....	373
6.15 KREI 북한농업동향.....	376
6.16 중국농업동향.....	379

7. 산림정책연구

7.1 목재의 수급 모형 구축 및 전망.....	385
7.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387
7.3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보급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	391
7.4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권/3차 연도)	393
7.5 임업분야 FTA 협상 대응 방안 연구(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걸프만협력체(GCC))	405
7.6 2008년 재정사업 모니터링 연구(산림보호국)	409
7.7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재정성과 모니터링.....	413
7.8 2008 임업관측(밤)	415
7.9 2008 임업관측(표고버섯)	418
7.10 2008 임업관측(대추·뽕은감)	421

8. 동향분석연구

8.1 세계농업정보.....	427
-----------------	-----

9. 기획조정실

9.1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조사.....	433
---------------------------------	-----

1. 농산업 경계 연구

1.1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2/2차 연도)

연구자: 김명환, 권오복, 조영수, 이대섭, 김태훈, 박상미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용되어 온 한국 농업 부분균형모형인 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갱신하여 한국 농업거시지표들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실험 능력을 개선
- 새로운 모형을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로 명명

2. 연구개발 내용

- 시계열자료 갱신, 품목별 수급방정식 재추정 및 탄성치 조정
- 모형구조변경
 - 품목군별 경지배분모형을 개별품목별 재배면적반응함수로 변경
 - 주도가격구조를 수입수요함수구조로 변경
 - 균형가격 발견을 축차(recursive) 방식에서 수급동시균형방식으로 전환
 - 농가인구 전망을 계량적 방정식에서 코호트방식으로 전환 등
- 모형의 적합도 검정
- 모형의 감응도 테스트
 - 환율 쇼크
 - 한미 FTA 쇼크

3. 연구결과

KASMO는 ASMO의 기본틀인 거시경제, 농업요소, 재배업, 축산, 농업총량의 5개 부문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수정하였다. 첫째, 재배업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품목군별 경지배분모형을 개별품목별 재배면적반응함수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의 89%를 차지하는 45개 품목에 대한 수급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품목별 수급 탄성치 추정치들을 장기전망과 정책실험에 합당하도록 조정하였다.

둘째, 1990년대 중반의 ASMO 개발 당시 수출입실적 자료제약으로 수입수요함수가 추정되지 못하여 품목별 수급모형을 국산청산가격과 수입가능가격 중 낮은 가격이 국내가격이 되는 주도가격구조로 구축하였다. KASMO는 수입실적 통계가 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도가격구조를 수입수요함수구조로 전환하여 국산과 수입품의 이질성 내지 대체성을 고려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품목들은 주도가격구조를 유지하였다.

셋째, ASMO에서는 총공급량이 역수요함수에 대입되어 전량 소비되는 청산가격이 도출되며, 이 가격이 차기 재배면적을 결정하는 축차(recursive) 방식이었다. KASMO에서는 이를 수급동시균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ASMO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였다. KASMO에서는 곡물과 과일을 유통연도 기준으로 전환하여 수급함수의 설명력을 높였다.

다섯째, 농업요소와 농업총량부문에 있어서, 농가소득과 농가인구 등이 국제유가, 환율, GDP 성장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방정식 구조를 개편하였다. 특히 농가인구는 계량경제적 모형에서 코호트 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KASMO의 재배업부문은 곡물, 채소·과채, 과일, 특용·기타작물의 하부모형으로 세분류되고 축산부문과 함께 품목 간 재배면적 경합성 및 수요 대체성 등의 관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이들 하부모형을 연결하는 변수값 등을 외생화함으로써 각각의 하부모형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역으로 연결변수 값을 다시 내생화함으로써 손쉽게 전체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품목 전문가들은 필요에 따라 해당 품목이 속한 세부모형만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정책실험 등의 작업을 하고, 총괄팀

에서는 세부모형 연결변수들의 내생화, 외생화를 피드백하여 전체 모형의 균형을 찾고 모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KASMO는 운용프로그램으로 기존의 EViews 대신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할 경우 부문별 하부모형을 분리하거나 연결하기 용이하고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을 스프레드시트화함으로써 사용자가 모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용이하며, 그래프와 수급표 등을 통하여 결과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수정을 통해 구축된 모형의 적합도 또는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에 대한 사후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거시경제 및 농업요소부문의 RMSPE(root mean square percentage error)는 2%로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부문의 적합도는 일부 수입수요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을 보면 쌀, 보리, 대두, 옥수수, 고구마는 RMSPE가 5% 이하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요함수는 수입 옥수수의 수요함수를 제외하고는 10% 이하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는 보리, 대두, 옥수수는 3% 이하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밀과 감자 수입수요의 적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채부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양배추, 배추, 쪽파의 수입수요, 풋고추 재배면적, 그리고 가지의 1인당 소비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RMSPE가 10% 이하로 양호한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과일부문의 적합도는 재배면적의 경우 포도와 감귤을 제외하고 RMSPE가 10% 내외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함수를 보면 배, 복숭아, 뽕은감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품목 간 소비대체관계를 함수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을 다소 희생했기 때문이다. 수입수요함수의 경우 오렌지와 열대과일의 적합도는 10% 미만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포도와 뽕은감은 적합도가 낮게 계측되었다. 두 품목은 수입실적이 미미하고 시계열이 짧아 추정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용·기타작물의 적합도는 일부 수입수요함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은 대부분 RMSPE가 10% 내외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녹차는 적합도가 낮게 계측되었다. 수요함수는 화훼를 제외하

고는 모두 5% 미만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녹차, 버섯의 수입수요함수는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 품목은 각각 다양한 수입품목으로 구성되어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격과 물량에 오차가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축산부문은 사료가격, 인공수정, 사육두수 등과 같은 공급관련 함수들과 가격 함수들의 RMSPE가 대부분 5% 미만으로 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함수는 원유, 조제분유, 계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가 낮는데, 이는 축산물 수요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축질병 발생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수요함수는 특히 원유와 버터의 적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의 경우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가격과 물량에 오차가 존재하고, 버터는 최근 수입량 진폭이 매우 커 추정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부문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전망하였다. 전망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로써, UR 농업협정문 상의 농산물 관세율과 관세할당이 불변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대미 환율과 국제 유가는 각각 2008년 1~10월의 평균치인 1,050원/\$와 105\$/배럴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망 결과, 농가인구는 2007년 327만 명에서 연평균 3.0% 감소하여 2018년에 23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고 농가호수는 연평균 1.7% 감소하여 2018년에 101만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명목 농업생산액은 2007년 34조 7천억원에서 연평균 0.8% 증가하여 2018년에 37조 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생산액에서 중간투입재비를 뺀 농업부가가치는 2007년 20조 6천억원에서 연평균 0.1%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조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쌀 생산 감소가 지속되면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의 성장동력이 출현하지 않는 한 농업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부가가치는 감소하나, 농가호수의 감소가 더 빨라 호당 명목 농업소득은 연평균 1.1% 증가하며,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외소득은 연평균 3.5%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8년의 호당 농가소득은

4,3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이용면적은 2007년 186만ha에서 연평균 0.9% 감소하여 2018년에 169만ha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 이후의 대미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베이스라인 전망치에 비하여 모든 부류에서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회율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량과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율이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4.3% 변한 데 비하여 2018년 농업생산액 베이스라인 전망치 37조 8,510억원에서 39조 3,140억원으로 3.9% 변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농산물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이 경우 역시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업부가가치 증가율은 1.7%로 더욱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재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원자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 비중이 큰 채소·과채는 부가가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수입 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축산의 경우도 부가가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환율 쇼크에 따라 KASMO는 기대되는 방향과 폭으로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가 2010년부터 발효되어 농산물 관세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전망치보다 3.5% 감소하고, 농업부가가치는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가가치 감소율이 생산액 감소율보다 큰 것은 중간재비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KASMO와 ASMO의 한미 FTA 시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2018년 농업생산액 전망치는 KASMO가 ASMO보다 5% 크게 예측되었다. 이는 KASMO가 ASMO보다 이행발효시기를 1년 뒤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업부가가치 전망치는 KASMO가 ASMO보다 6% 작게 예측되었다. 이는 유가, 환율, 국제곡물가 등의 외생변수 적용치가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ASMO 모형이 KASMO로 전환되면서 두 모형의 연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자: 강창용, 이동연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친환경농자재는 기존의 각 연구마다 정의와 분류 범위가 다르고, 법적 근거도 친환경농자재의 종류별로 다방면에 분산되어 있어 비체계적이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기본인 『2006~20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세부 사업들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내에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내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친환경농자재의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적 이용,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그리고 농가의 이용 측면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측면에서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①적절한 품질 규격, 표시 등에 대한 기준 미흡, ②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 저품질 자재 공급, ③

연구개발자금, 운영자금 등의 지원 미흡, ④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이 밖에 친환경농자재 종류에 따라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및 이에 따른 원료가격의 불안정성, 사용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곤란 등의 문제점도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유통 측면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으로는 ①정보 전달의 왜곡 가능성 ②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수준 미흡, ③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 ④사용방법 등 표시 상태에 대한 불만족, ⑤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등이다.

농업인 차원에서의 친환경농자재의 이용 실태 파악과 애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조사된 친환경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며, 학력도 모두 고등학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주된 동기는 소득과 시장성이며, 이것은 향후 친환경농업 규모 증감 계획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③주로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농자재는 퇴비, 유기질비료, 토양 개량제, 미생물제제, 목초액 등이다. ④친환경농업은 보통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도 인근 농가로부터 주로 제공받는다(34.7%). ⑤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6%), 교육 내용과 시기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친환경농자재는 관련 단체 및 조직을 통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44.5%)와 인근 시판상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34.9%)가 대부분이다. ⑦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이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다. ⑧친환경농자재의 선택과 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35.3%)과 효과(23.4%)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다. ⑨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⑩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와 같은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제도적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주된 문제점은 크게 관리 체계와 내용상의 문제로 구분된다.

친환경농자재 관련 제도의 관리 체계상으로는 ①친환경농자재 관리 법규의 체계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어 생산, 유통, 이용의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한다

는 점과, ②친환경농자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이다.

관리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대한 문제와 개별법 및 품목별 관리에 대한 문제로 세분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의 경우, ①현재 농촌진흥청의 관리체계 하에서 민간 관리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된다. ②상위법의 개념 규정도 없이 하위법인 목록공시제에 의해 친환경농자재로의 등록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장에서 혼란을 발생할 소지가 크다. ③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통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④목록공시제는 서류심사 기반이며 사후관리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 개별법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①친환경농자재에 적합한 표시제도의 부재, ②친환경농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등이 있다. ③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는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비체계적이다. 친환경농자재 개별 품목과 관련해서는 키토산 및 천적, 미생물제제 및 생물농약이 문제가 된다. 키토산과 천적은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에 규정되어 문제가 되며, 미생물제제와 생물농약은 유사한 성격의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제도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CODEX와 IFOAM의 경우 유기농업의 원칙과 방법, 사용 가능한 자재 및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미국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법,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물질과 자재를 관련된 법, 규정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③법에서 규정된 자재와 물질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유기농업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④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물질 기준에 따라 독일의 법 내에서 농자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연구결과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이

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먼저 친환경농자재의 개념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립해야 하며,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별로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①친환경농자재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②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 ③집행 시 상충되는 정책들 간의 조정, ④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관리수준별 차등 지원, ⑤친환경농자재 표시제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와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경우에는 ①자체적인 원료 수입창구의 일원화 강구 ②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③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일부 업무를 위임 및 시행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개별기업은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과 유통의 공급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①친환경농자재 산업의 당면 문제의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 ②전문인력의 육성과 제품의 품질 개선 노력, ③제품의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유통업체는 생산된 친환경농자재를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①전문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②친환경농자재 전문 매장의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이용 시 발생하는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지식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농자재의 가격과 효과에 대한 관리 강화, 이용 피해 및 사고 사례 신고센터 설치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연구자: 김창길, 박현태, 이상민, 주현정, 권오상, 로버트멘델존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심층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코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농업계 인지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비모수·준모수 모형을 이용한 농업생산성 분석, 기상-작물통합모형을 이용한 작물생산성의 장기전망, 리카디언 모형(Ricardian model)을 이용한 농업경제 분석 등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파악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분야 전문가(정책담당자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요인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계측을 위해 기후-작물반응함수를 설정하고 비모수적 커널회귀분석과 준모수 추정방식을 적용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의 장기적 전망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벼 생육 모형(CERES-Rice)을 통한 생산성 예측치 결과를 이용하였다. 기온상승에 따른 작물의 장기전망과 재배적지 변동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로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변화가 농가자산 및 농업총수입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2단계의 특성함수 추정방식인 리카디언 모형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C(겨울 1.9°C, 여름 0.3°C) 상승하였고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며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배지대가 북상하고 월동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는 미래농업의 비전 및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장기적인 지역농업발전계획과 농가의 영농계획 수립 등 적응대책 수립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심층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년 과제로 진행되어, 금년에 수행한 1년차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2년차 연구에서는 영향 분석을 기초로 대응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30년(1971~2000년 평균치) 대비 평균기온의 경우 2020년 1.5°C, 2050년 3.0°C, 2080년 5.0°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2020년 5%, 2050년 7%, 2080년 1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재배적지가 이동되고 새로운 병해충을 발생시켜 이로 인한 작목전환과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갈색여치에 의한 사과, 복숭아, 포도, 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수도작의 경우 바이러스병인 줄무늬잎마름병의 피해지역이 북상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를 보면 농업인의 경우 대체로 5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경우도 상당수가 5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이상기상과 물 부족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시하면서 온난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성 분석을 위해 쌀, 배추, 무, 사과 네 작목을 대상으로 1975~2007년까지 주산지별 농산물 생산 및 기상자료를 기초로 비모수적(non-parametric) 및 준모수적(semi-parametric) 방법인 커널 회귀 분석(kernel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작물인 쌀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인자 변화의 영향으로 재배기간의 평균기온이 19℃ 이하인 경우 1℃의 기온상승은 단보당(10a) 수량을 약 24.4kg 증가시키나, 기온이 20℃ 이상인 경우 단보당 수량이 6.2kg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추와 무 및 사과 등은 품목별·지역별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12.4℃)이 1℃ 상승하면 모형에 따라 ha당 농지가격이 1,455~1,924만원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평균농지가격의 5.7~7.5% 하락에 해당된다. 한편 월평균 강수량(110.8mm)에서 1mm 증가는 ha당 농지가격을 33~36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리카디언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4월의 온도 상승은 농업총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8월과 10월의 온도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 상승하는 경우 농업총수입은 ha당 260~4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당 평균 농업총수입인 1,700만원의 약 15~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농업부문에 대한 리카디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요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기온과 강수량을 동시에 고려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 품종개량과 신품종 도입, 재배방식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개발 및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전략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1.4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방안

연구자: 전창곤, 최병옥, 김동훈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최근 세계 각국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DDA 협상, FTA 타결 및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국내 농산물과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시장구조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특정 품목의 산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식품소비에 대한 구조변화와 함께 소비자 니즈(needs)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자조직, 지자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우수 브랜드 육성이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전략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산물 브랜드 추진주체는 대부분 개별 생산자나 소규모 생산자단체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허울뿐인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 브랜드의 기본조건인 재배기술 및 품질의 균일화, 지속적인 연중 공급 체계, 마케팅 수단 등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세규모의 브랜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브랜드가 네이밍, 포장개선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수립·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농산물 브랜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마케팅 핵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브랜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농산물 브랜드자산(Brand Equity)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먼저 브랜드와 브랜드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농산물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농산물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는 1단계 브랜드 개발 및 추진, 2단계 브랜드 포지셔닝과 가치구축, 3단계 통합 브랜드마케팅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그리고 4단계 브랜드 자산의 성장과 유지로 구분된다.

국내 농산물 브랜드화 현황과 추진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브랜드의 일반적 문제점과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국내 시장구조가 공급과잉 구조로 급변하면서 차별화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량공급, 효과적인 사후관리 등 브랜드화의 필요조건에서 개별브랜드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동브랜드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동브랜드화는 필요한 기반구축과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광역단위의 포장 표시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 포장화 측면에서 전시적이고 형식적 공동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분석하고 소비자 및 유통업체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농산물 브랜드 구매패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소비자가 속한 커뮤니티 공간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축제 및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쌀과 과일 브랜드 속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쌀 브랜드를 구매할 때 원산지 및 안전성(유기농, 친환경)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과일 브랜드를 구매할 때에는 신선도와 당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중 약 69%는 쌀 브랜드에 관하여 특정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과일류 브랜드는 약 67%가 특정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를

먹어보고 싶어서”가 쌀 44%, 과일 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성공적인 우수브랜드 및 세계적인 우수브랜드 육성 전략에 대한 현지 조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육성주체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농산물 우수브랜드 사례인 프랑스 브레타뉴와 일본 유바리 메론을 사례로 국내 농산물 우수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 햇사레, 썬플러스를 평가한 결과 국내 농산물 우수브랜드가 생산자 조직화 및 조직관리, 목표시장에 따른 마케팅 전략, 체계적인 생산·품질·판매관리, 추진주체의 일원화된 통제 시스템, 생산자 교육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농산물 우수브랜드의 전략적 육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탄탄한 브랜드 추진조직 및 관리조직 구축, ②적합한 브랜드 추진 유형과 적정규모 결정, ③합리적인 추진형태 도출, ④차별적인 브랜드 개발, ⑤품질관리 및 통제시스템 구축, ⑥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및 통합관리 능력과 시스템 확보, ⑦관련 조직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농산물 우수브랜드의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5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자: 우병준, 이형우, 채상현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 이 보고서는 아직까지 정책당국 및 학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특수가축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함.
- 이를 위해 특수가축에서 대표적인 축종인 오리, 꿀벌, 산양, 사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방안을 도출함.

2. 연구개발 내용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특수가축에 대한 유일한 공식통계인 “기타 가축통계”에 의하면 마필, 면양, 오리, 메추리 등과 같은 소수의 특정 가축을 제외한 대부분 특수가축의 사육호수와 사육마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오리, 꿀벌, 산양, 사슴 농가의 사육호수를 소, 돼지, 닭과 같은 주요 축종의 사육호수와 비교할 경우 아직까지 이들 축종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호당 마릿수의 경우에는 산양, 면양, 사슴 등은 모두 20두 이내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평균 사육규모가 주요 축종과 비교해서 영세한 수준임.
- 특수가축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나 소비(구매)행태, 육류 및

부산물 생산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시장규모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주요 축산물 소비량에 비해 이들의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에 이들 특수가축 육류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일반 육류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수가축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다양한 장점을 지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우리나라 기후와 품토 및 제반여건에 비교적 잘 부합하며, ②외식산업의 확대와 신규제품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③축산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④농촌사회의 유지와 농촌관광의 한 분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소득원으로서 활용 가능함.
- 특수가축이 주요 축종으로 성장하는 데는 제약 요인 또한 존재함. ①특수가축의 경우 사육경영 및 사양관리 기술의 정립과 체계화가 미흡하며, ②체계적인 질병 방역 시스템과 가축개량 문제가 있고, ③산업의 영세성에 의해 자구적이고 결집력이 있는 생산자 공동체의 형성이 미약하며, ④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식품이 아닌 계절적 단순 보양식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배적이며, ⑤일선 농가의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3. 연구결과

- 특수가축에 해당하는 모든 축종은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음. 이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산업이 처한 여건, 생산물 종류에 따른 다양한 시장, 소비자의 반응도, 국내시장 개방과 관련한 영향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 함.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생산기반, 시장규모, 시장개방의 영향, 소비확대 가능성, 정부지원 유·무 등에 대해 각각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성장산업과 정체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이들 4가지 축종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면, 먼저 오리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보양산업에서 기존의 주요 축종(육계)과 유사한 산업형태로의

성장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 꿀벌산업의 경우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규모화)과 신시장 개척, 식품안전성 등 비교우위 획득을 통한 산업기반 유지에 주력해야 함. 산양산업의 경우 식육중심의 생산·유통구조 개편으로 산업의 성장을 추구해야 함. 사슴산업의 경우 가공·유통구조의 합리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산업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해야 함.

1.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연 구 자: 김창길, 이용선, 이상건
연구기간: 2007. 12 ~ 2008. 2

1. 연구의 목적

최근 농산물 시장은 브랜드화, 대형유통업체나 전자 상거래 등 소비자 지향적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기초로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농업전망 2008』에서 농산물 시장의 새로운 여건변화와 관련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수시과제이다. 친환경농산물 시장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출하동향·가격동향·유통실태를 제시하였고, 향후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거래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2008~2020년까지의 시장 규모를 전망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과 구매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구매계층별 전략, 산지출하전략, 유통업체 대응전략, 판로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등 부문별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친환경농산물 시장현황과 전망

친환경 인증농산물 출하량은 1999년에 3만 5,406톤이었으나 2007년에는 약 67배 증가한 178만 5,874톤으로 연평균 약 69% 증가하였다. 2007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1조 8,989억원으로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약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조 3,541억원, 2009년에는 2조 8,905억원, 2010년에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어 2조 808억원, 2020년에는 6조 1,445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친환경농산물 소비 성향과 구매 행태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주요 소비계층은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40~50대 중산층과 20~30대의 고소득 계층이며, 친환경농산물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점이 45.8%,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21.8%,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10.8%, 직거래단체 6.7%, 백화점이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가격이 비싸서’가 45.5%, ‘생산·유통 등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가 31.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59.9%의 소비자는 브랜드를 고려하고, 40.1%는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학교급식 확대 58.1%,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9.5%, 홍보활동 강화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싶은 경로로는 TV·라디오가 27.3%로 가장 많고, 유통매장(24.0%), 인터넷(20.3%), 신문·잡지(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

친환경농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마케팅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구매계층을 분류(시장 세분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신뢰도 제공, 브랜드와 준거가격 등의 포지셔닝, 소비자 중심의 쇼핑 편의성 증대,

가격프리미엄 인하 등으로 설정하였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표적계층(수도권에 거주하는 40~50대의 중산층과 20~30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를 확대하려면 우선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를 갖도록 해야 하고, 전문매장, 백화점 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구색을 갖추으로써 일괄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 인하를 위해서는 생산·출하 단위를 조직화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법 표준화를 통해 상품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재 공동 구매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규모화 등을 통해 출하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급처(유통업체)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고 대형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연합조직으로서의 산지농협과 소비지 농협매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 친환경농산물 취급의 전문성, 쇼핑의 편의성 등의 조합에 의해 업체 간 상호보완 형태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제도 관리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가격프리미엄을 20~30% 정도 낮출 수 있는 생산 및 유통 부문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신뢰도 제고 및 도·소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지와 소비지에서 적절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 유지와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이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재 활용에 대해 학부모들의 경우 10% 정도를 초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 상당하므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7 고객지향적 농산물유통 사례 연구

연구자: 국승용, 최병옥
연구기간: 2007. 12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지향적 유통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농산물유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체들이 각자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고객지향적 유통 사례 분석을 통해 6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발견되었다. 첫째, 많은 투자를 통해 개발한 신기술을 접목한 상품을 고객이 선호할 것이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생산자 중심의 시각이다.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단순한 가공만으로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고객의 필요는 경제·사회·문화와 함께 변화하므로 이 변화 과정은 기존 상품에 대한 위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필요와 시장 사이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될 수 있다.

셋째, 농산물의 가치를 차별화할 수 있다면 높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어렵고 가격 수준이 낮은 농산물의 경우 고객은 단가보다는 가격 자체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고객의 선호에 맞도록

품질을 다각화하고 그에 따라 가격 수준을 차별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고객의 정보를 생산 및 유통에 활용하여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방법은 물론 생산 및 유통 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고객에게는 상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보 전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이나 제품의 정보와 시장 동향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고객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유통경로를 선택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고객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와 연계하여 판매한다면 수많은 상품들이 경쟁하는 소비지 시장보다 효과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인터넷과 같은 양방향 통신수단을 활용하면 고객의 주문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시기와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

여섯째,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성공 사례로 주목받던 경영체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객 지향적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결과

최근 농업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식품소비패턴과 가치가 변화하면서 생산위주의 농업만으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주체가 되는 산지조합, 생산자 단체 등에서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가치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생산이나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성을 지속·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고객지향 마케팅의 주요 과제로 나서고 있다.

1.8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연구자: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이정민, 김진년
연구기간: 2008. 5 ~ 7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질병 방역체계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HPAI 발생에 따른 가금 산업의 피해 규모를 계측하고, 2)HPAI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금 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가금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496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HPAI 발생이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국내 HPAI 발생사례와 방역체계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 또는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질병 발생 시 가금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피해 수습 방안을 검토했다.

3. 연구결과

국내에서 HPAI는 3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1차 HPAI 발생은 1,126억원, 2차 발

생에는 582억원의 방역비용이 소요되었다. 금번 3차 발생의 경제적 피해는 살처분보상금 등의 방역비용으로만 3,094억원이 소요되었다. 이 외에 기타 유통 및 음식점 등에서의 피해액까지 모두 합산하면 피해액은 총 6,488억원을 넘어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체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①유입경계상황, ②의사환축 발생상황 및 발생확인상황, ③발생확산 상황, ④종식단계 및 청정화 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HPAI 방역체계의 최상위 부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에서 총괄하며, 의심농장에서 시료 채취와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직에서 담당하고, AI 확진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행정체계상 최종 진단과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검역원, 대책본부의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최초 발생 이후 적어도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추가 확산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HPAI와 같은 급성 전염성 질병의 경우 발생초기 대응과 확산방지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방역체계에 있어 초동방역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으로는 농가등록제 및 의무적인 사육기록 유지, 방역선 설정의 현실적인 재조정, 살처분 및 매몰 관련 규정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상시방역체계가 설정될 경우 질병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 농자재가격의 변동요인과 정책과제

연구자: 강창용, 권오복, 이용연
연구기간: 2008. 8 ~ 12

1. 연구의 목적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 주요 농자재의 사용 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농업경영비에서 약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농산물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자재 가격이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농자재 가격 변화로 인한 농업경영비의 변화를 단순 계측한 후 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농자재가격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0년 이후의 가격 상승 폭이 과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료 가격은 2003~2007년 사이 25% 상승했으며, 그 중에서도 낙농 및 비육우의 사료 가격이 다른 축종에 비해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요 농자재 산업의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것은 농자재 사용증가를 의미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자재비용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농자재의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원료 가격과 환율이다. 대부분의 원료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약은 최근

사용량이 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 원재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최근 환율 변화에 따라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농자재 가격의 변동이 농업생산비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료비, 광열동력비, 종자종묘비가 생산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율, 유가,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10%, 30%, 50%)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환율 상승 시에는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 상승 시에는 영농광열비, 비료, 농약, 농기계 순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육우 사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다른 축종도 유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

농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농자재 상승, 연료비 상승에 대응한 부담 완화, ②농기계면세제도를 국제유가 수준과 연동하여 운영, ③비료가격 과다 상승 시 농가 보조 마련, ④시설원에 농가에 시설비 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강한 농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①농기계 생산업체의 대형화와 전문 기업화, 규모의 경제 실현책 마련, ②계열화 추진 등을 제안한다. 또한 농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①농자재의 국내 수요 정체에 따른 자재 생산 기업의 채산성 개선책 마련, ②시장별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수출 확대, ③농자재 수출기반의 구축(주요 수출국별 수요 경쟁관계, 기호도 조사 등)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①밭농사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지원, ②수입원재 의존 탈피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③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개발 지원, ④지역 및 작목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 시설 개발 보급, ⑤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 개발, ⑥토양검정 확대 실시를 통한 적정 시비 및 방제 유도 등을 제안한다.

1.10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평가

연구자: 김창길, 김태영, 주현정, 이상건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 OECD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작업을 착수하여 그동안 합동작업반 회의,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2008년에 발간함.
- 개발된 OECD 농업환경지표는 향후 회원국의 농업환경실태에 대한 진단과 농업환경정책의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등에 활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농업환경지표로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농업환경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모델을 제시하고 농업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의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연구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JWP 회의에 참석(2000년 7월 제12차 JWP 회의부터 2006년 6월 제23차까지 12차례 JWP 회의 참석)하여 최근의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동향 파악
- OECD JWP에 제시된 농업환경지표와 정책연계성 분석모델 검토
- 농업환경지표 분야별(양분, 물이용, 수질, 온실가스, 경관 등) 전문가 협의회와

워크숍을 통해 OECD 지표개발 전반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시사점 도출

3. 연구결과

- 농업환경정보(agricultural environmental information)는 농업계를 구성하는 토양, 물, 공기 등 환경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각 구성요인의 유기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결합체를 농업환경정보시스템(Agri-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AEIS)이라 할 수 있음. AEIS는 다양한 농업환경자원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분석하며, 농업환경변화의 예측 및 해석을 통해 예방 및 경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효과적인 농업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임.
-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생태계의 토양, 물, 대기 등 환경요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세부지표로 구성됨. 농업환경지표의 유형화에 있어서 편의상 농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연자원 스톡과 관련된 지표로 토지, 토양, 물, 생물다양성 지표로 그룹화 할 수 있고, 농업으로 환경부하와 관련 양분수지, 농약이용 및 위험, 대기 및 기후변화 지표 등을 들 수 있음. 이밖에도 농업에너지 사용, 농장관리 지표, 토지보전과 농업경관, 경지이용과 관련 농경지 회복 등의 지표가 있음.
- 농업환경지표는 1994년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전문가 회의에서 20개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 이래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쳐 1996년 JWP 회의에서 13개 지표로 확정되어 지표개발을 추진해 왔음. 농업환경지표는 각 부문별로 상당한 세부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므로 매우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각 지표는 회원국의 국가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각 지표개발의 필요성 및 지속성 여부에 관해 상당한 논란과 협의가 계속되어 왔음.
- 농업환경지표의 활용도 조사를 위해 농업인과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농업인의 농업환경자원정보에 대한 활용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친환경농가와 영농지도자의 농업환경지표 활용도가 일반농가나 비지도자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담당자의 평가기준별 농업환경지표 평가 결과 정보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농장관리 정보만이 4.1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그 외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평균 3.0~3.4점 정도로 정책담당자의 정보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보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3.8~4.3점으로 정책담당자의 농업환경지표의 필요성은 높은 수준임.

- 농업환경지표개발 종합보고서 제4권에 제시된 주요 농업환경지표를 종합하여 국가별·지표별 농업환경실태를 파악함. 경지면적의 경우 미국 4억 975만 ha로 가장 넓고, 다음이 멕시코 1억 730만ha, 호주 4,474만ha 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93만ha로 매우 작은 수준임. 양분수지지표에 있어서 질소수지의 경우 농경지 ha당 기준으로 한국 240kg, 네덜란드 229kg, 룩셈부르크 199kg, 벨기에 193kg 순으로 나타났고, 인산수지의 경우 룩셈부르크 57kg, 일본 52kg, 한국 48kg 순으로 나타남. 농약사용량의 경우 농경지 ha당 기준으로 일본이 14.86kg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한국이 9.32kg, 이탈리아 5.44kg 등의 순으로 일본과 한국의 농약사용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농경지 ha당 기준으로 네덜란드 2,076kg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이 1,924kg로 나타남. 물이용량은 농경지 ha당 기준으로 일본이 11,935m³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이 3,778m³로 나타남.
-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 진안군 사례를 활용함. 진안군의 농업환경여건에 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기준 양분수지지표를 산정한 결과 특정 읍면에 양분 투입이 집중되고 있어 양분이 과다 투입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지표수 오염이 우려되며, 지역 내에서 적절한 양분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추진 방안으로 지역단위 양분수지지표 산출, 지역단위 양분관리 방식,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시행체계, 지역별 양분수지 모니터링 및 관련정보 공개, 양분관리 감축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벌칙,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함.
-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정책평가모델 개발을 위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기법, 정형화된 농업환경정책영향모델, 일본의 SAPIM 적용사례, 네덜란드의 STONE 모형, 유럽연합 IRENA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함.

- 향후 추진과제로 농업환경지표의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 보완, 국내 농업여건에 적합한 지표개발과 해석, 농업환경지표에 관한 통합지표 개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지표개발 및 정보제공, 전문가·정책담당자 간의 지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함.
- 농업환경지표의 지속적 보완과 관련하여 양분수지 지표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 및 효과적인 자료 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농약 사용지표의 경우 기초자료 확보 및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위해성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에너지지표의 경우 실제로 농업부문에 이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식별과 에너지 효율성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함. 토양지표와 수질지표, 생물다양성지표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농장관리지표는 통합지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지표산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함.
- 농업환경지표의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업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OECD 양분수지 지표는 전국 농경지 평균인 관계로, 실제 논농사의 낮은 양분수지, 밭 및 하우스 농사의 높은 양분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양분수지 지표의 국가 간 비교에서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농업환경지표의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 토양, 농약, 물 사용에 있어서 국가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회원국을 그룹화하여 지표작성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환경지표의 수요자는 농업인,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지표별로 관심도와 활용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농업인들의 농업환경지표 활용에 있어서 애로요인은 접근성 문제와 정보제공 시기의 부적절성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제공처로 선호도가 높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접근성 제고와 관련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 정책담당자의 경우 농업환경지표가 농업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 담당 공무원 교육 시 농업환경자원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은 향후 OECD 농업환경지표 관련 국제적인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과학적인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표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11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연구자: 성명환, 김수석, 승준호, 김태균, 손미연, 지현서
연구기간: 2006. 4 ~ 2008. 4

1.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일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농업부문의 지적재산관련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그 관리도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의 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 유전자원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와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연구 내용은 국내 농업과 농산물의 차별화와 직결된 지적재산관련제도(품종보호,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표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농가소득의 제고와 지역특산 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기여하는 것임.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형태별, 분야별 특성 요인을 파악하여 각각의 요인이 지적재산권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용이하도록 기술 방향을 제시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지적재산 관련 국제협약 및 논의 동향, 제Ⅲ장 지적재산 관련 법체계와 관리

실태, 제IV장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제V장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제VI장에서는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을 제시함. 부록에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록함.

3. 연구결과

- 세계 각국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그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기구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WTO/TRIPs에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함. TRIPs는 지적재산권을 크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을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으로 세분함.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세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세분함.
- 현재 국제적으로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동식물에 대한 특허와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보호이고,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것임. 식물종자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란 특별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함(국제협약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새로운 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TRIPs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임. 식량농업기구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을 제정하여 2004년에 발효시킴.
- 식물유전자원 중 농업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와 영양체를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음. 농업식물종자는 등록체계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의 저온저장시설에서 중장기 보존·관리되고 있음. 현재의 보존관리 용량은 154,000점임. 현재의 관리체계는 주로 식물영양체 유전자원의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정됨.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함. 이 보

고서에서는 농업과 관련해 지리적표시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함. 성주참외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소비자 가치 평가 결과 21,596.5원/15kg로 base 가격의 144%로 나타남. 반면 상표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5,607.1원/15kg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소비자들은 성주참외의 다른 속성에 비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장미와 딸기를 선택함. 분석결과 장미 국내품종 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1주당 615.6~740.5원으로 추정되어, 외국품종의 가격이 1주당 2,500~3,000원임을 감안할 때 진선미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됨. 딸기 국내품종 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꺾트묘 기준으로 160.0~179.7원으로 추정되어, 외국품종의 가격이 200~300원(로열티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향에 대한 가치도 낮게 평가됨. 국내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가격과 생산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생산농가들의 국내 품종 사용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일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농림수산업이 앞으로도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정보의 창출을 통해 차별화를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함.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적극적·전략적인 활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하에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전략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 보호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식품·신소재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실용화연구, 원료가 되는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시설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와 기업이 연대하면서 실용화·사업화를 추진해야 함. 생물연구 분야에서는 품종 육성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유전자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유용한 유전자의 해명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품

-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지속적인 유전자의 기능규명과 활용의 연구 및 특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특허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로 정비함.
- 품종육성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과 체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즉, 종합적인 중·장기 종자 정책수립,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조정, 예산확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시설 및 자금지원 등이 종자분야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지원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낮음. 개인 또는 소규모 종자회사들도 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기술이 우수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우선 선정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함. 지원기간도 종전보다 장기로 연장해야 하고 지원금액 또한 인상해야 함.
 -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인의 노력에 의해 많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권리화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속에 공유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의 전략적 작물 재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농업에의 기업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농업기술의 특허화 움직임이 진행되는 한편 생산현장에서의 의식차이에 의한 의도치 않은 침해가 발생됨. 따라서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관련 종사자가 농업기술이나 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농가 또는 지역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농촌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가치 있는 지역자산으로 이해하고 농업이나 지역의 활동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서의 농산물이나 식품을 발굴·개발하고 상품화·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
 - 앞으로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농산물, 식품, 종자 등의 상품을 개발·생산하고 생산기술과 같은 지적재산을 보호하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짐. 특히 육종 기술 등 높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식물신품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량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함.

지역에 의한 식물신품종 육종, 신기술의 개발, 권리화, 권리의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들 신품종, 기술 등의 지적재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산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1.12 지역 단위의 순환농업시스템 개발

연구자: 박현태, 김연중, 정은미, 한혜성
연구기간: 2006. 4 ~ 2008. 4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작, 축산, 전작, 특작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에 서의 유기물 순환을 통한 생태계 보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순환농업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 순환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직접교환 또는 자원화를 통한 제품이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순환농업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자원화 모델은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을 이용하여 각 작물에서 생산되는 주산물, 부산물 등의 발생량과 이들 주부산물이 다시 생산 투입재로 변환될 때 기술계수를 도출하여 개발하였다.

연구보고서는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은 물질순환 시스템과 순환농업의 개념, 사회·경제적 의의, 순환농업 추진의 전제조건과 관련주체의 역할, 순환농업 관련 정책 동향 등 지역단위 순환농업의 개념과 정책동향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산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과 일본, 중국의 순환농업

현황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정읍지역을 대상으로 자원화 실태분석과 자원화 과정에서의 제약 요인 및 개선 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읍시를 대상으로 농축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순환시스템을 모형화하였고,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 자원의 배분과 결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순환농업시스템의 구축 방향과 추진 과제 및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순환농업은 축산, 경종, 일반 생활,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액비화)함으로써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경종 및 임업부문의 부산물을 가축의 조사료나 깔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종에 필요한 양분을 퇴·액비로 공급함으로써 지력증진과 건강한 토양 개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밖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환경오염 방지, 환경개선 비용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순환농업의 한 가지 특징은 친환경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소개한다.

충남 아산지역은 친환경적 경종농업의 부산물을 유기축산용 사료로 이용하며 이 사료로 육성되는 유기축산물의 축분을 퇴비화해서 다시 경종농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순환형 농업을 이끄는 가공 및 유통주체와 생산자조직(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천안/아산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의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산은 농촌 지역 생산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순환 농업의 추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야마가타현 나가이시는 ‘레인보우 프랜(Rainbow plan)’이라는 유기물 자원의 지역순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즉 지자체와 농협, 시민(소비자단체)의

3주체가 물적·인적 순환을 통해 자원순환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사카미지역은 상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까지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산지와 소비자가 물품거래뿐만 아니라 환경보존형 농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태양에너지, 생물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순환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시스템 중의 유기찌꺼기를 퇴비화해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지력을 높이는 등 순환농업시스템을 통한 고생산성, 고품질, 고효율의 농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환경적 관점보다는 농촌 주민의 생활개선과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읍지역을 대상으로 경종, 축산, 원예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모델을 구성하고,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5개 유형의 작물결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수도작과 양돈을 결합시키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수도작과 한우, 시나리오 3은 수도작, 한우, 답리작(보리), 시나리오 4는 수도작, 한우, 과수, 시설채소, 시나리오 5는 수도작, 양돈, 과수, 시설채소의 결합이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1은 지역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면 수도작 재배면적을 10% 증가시켜야 하는 반면, 양돈 사육두수는 60% 감소해야만 균형이 이루어진다. 양돈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하므로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양돈 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2는 수도작 재배면적과 한우 사육두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수도작의 유기질비료도 부족하고, 한우의 조사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작 규모와 한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3은 수도작과 한우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고, 답리작 재배면적이 확대된 경우이다. 한우의 조사료는 지역 내에서 과부족 없이 확보되었으나, 수도작과 답리작 재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우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4는 사과와 시설상추 재배 시 유기질 비료는 과부족 없이 해결되었으나, 한우의 조사료가 부족하여 답리작 재배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5는 수도작, 과수, 시설채소의 유기질 비료가 과부족 없이 만족되었다. 그러나 양돈의 사육두수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돈 분뇨처리시설의 확보 및 자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순환농업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부산물의 수집 및 자원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이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물 발생주체, 자원화주체, 이용주체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농림부산물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수집이 어렵고 자원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부산물의 수집 및 운송체계를 확립하고, 규모의 유리성을 살릴 수 있는 가칭 부산물자원화 센터가 해당 지역에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순환농업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역의 지역농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지도자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 내의 모든 관련 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복합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1.13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용경매장 건축 타당성 조사

연구자: 조명기, 전창곤, 조경출
연구기간: 2007. 11 ~ 2008. 3

1. 연구의 목적

대전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지 20년이 경과되면서 시설물이 노후되어 부분적인 시설물 보수만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저온·포장시설 등 새로운 시설수요의 증가로 부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시설개선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정도매시장이 대전 중부지역의 증추적인 도매유통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미래의 역할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문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후되고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첫째로 대전시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의 도매시장 역할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둘째로 오정도매시장의 기능과 편리한 쇼핑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부족 시설물의 확충과

노후된 시설물 개선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셋째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대책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3. 연구결과

농산물도매시장은 산지 유통여건의 변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세계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수입 증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의 변화를 포함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한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오정도매시장은 1987년 개장한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청과물 거래물량은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노은시장이 개장된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취급규모의 변화 추이, 주변지역의 도시화 정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오정도매시장은 성장 단계에 있는 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정도매시장 운영의 문제점은, 첫째 교통 및 주변여건의 문제이다. 오정도매시장은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접근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주변지역은 대전시 위생처리장, 도축·도계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식품환경은 물론, 시장주변 도로는 대형차량의 왕래가 빈번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상의 장기주차로 시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안정적인 물량수집의 문제이다.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오정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수집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출하선도금 비율이 2006년도 총 거래금액의 2.2%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산지수집 노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물량분산의 문제이다. 오정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의 46.4%가 연간 5억원 미만을 취급하는 영세한 상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1인당 연간 최소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중도매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래제도의 문제이다. 트럭단위 거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상품 구색을 위해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정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보면, 2006년도 청과물 거래량의 6.8%인 13,705톤을

취급함으로써 매우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물류의 문제이다. 오정도매시장의 하역체계는 주로 하역노조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역작업은 거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하역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유통정보의 문제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와 수급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심하여 시장 및 출하시기에 따른 유통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관리의 문제점이다. 오정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관리사무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1~1.5년으로 도매시장 관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이에 따라 일관적이고 전문화된 시장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정도매시장의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의 집하 및 산지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거래물량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영업실적이 부실한 중도매인은 퇴출하고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하며, 중도매인을 규모화하며, 도매시장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시장 유통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정도매시장 시설의 문제점은 우선 저온유통체계 도입을 위한 건축적인 고려가 전무하며, 중도매인 점포가 경매장 통로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격자형 임시매장으로 소비자의 각 점포에 대한 인지성이 낮아 쾌적한 쇼핑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공·포장시설, 물류동선, 주차시설, 건축구조물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오정도매시장 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저온유통시스템 등 신 유통기능을 접목한 시설개선계획, 효율적 물류흐름을 위한 물류체계 및 교통개선 계획,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14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 발전방안 연구

연구자: 김연중, 이용연
연구기간: 2008. 1 ~ 7

1. 연구의 목적

기후 변화로 농작물의 주산지가 바뀌고 있다. 마늘은 북방한계선이 전남, 경남 일원에서 현재는 충남, 강원 강릉까지 북상하고 있고, 사과·배 등 과일은 일교차가 심하고 연평균 기온이 13℃ 이하에서 착색 등 품질이 좋으므로 주산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등 작물재배지역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라 화천지역의 농업, 축산, 임산, 산천어 축제 부문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기후변화가 과거 100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정리하고, 향후 100년 동안 온도, 강수량 변화를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 기후대의 변화, 사계절 시작일과 종료일의 변화, 기상재해 발생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으로 화천군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는 작목, 현상 유지 작목, 축소 작목, 신규 작목 등을 제시하였으며, 축산부문에서는 조사료포 재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화천군에서 기후온난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산천어 축제이다. 산천어 축제

의 문제점은 기온상승으로 얼음 두께가 얇아져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응책으로 결빙상태 보완, 유속감소, 축제 내용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 지구 온난화 정도는 과거 100년 추세치보다 향후에 더욱 상승
 - 세계적으로 산업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1906~2005년까지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추세는 0.74(0.56~0.9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기상청 분석에 의하면 과거 30년간(1971~2000) 한반도 기온은 1.04℃ 상승하였으며, 향후 30년간(2001~2030) 1.79℃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로 강수량도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
 - 기상청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거 30년간(1971~2000) 한반도 강수량은 변동 폭이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30년(2001~2030) 후에는 과거 30년 동안의 기간보다 5%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100년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4℃ 정도 상승하여 기후대가 아열대로 변화
 - 트레와다 기준에 의하면 2071~2100년에는 서해안의 강화 지점을 제외하고 동해안과 남해안의 모든 지점이 아열대 기후구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내륙지역인 임실, 거창, 금산, 보은, 안동, 의성 등과 같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주변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까지 아열대 기후구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100년에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
 - 기후 온난화로 봄 시작일은 위도가 낮을수록 빠르며, 여름 시작일은 위도가 낮고 내륙 지역일수록 빠르며, 가을 시작일은 1970년대 이후 점차 늦어져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지점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되며, 향후 10월 중순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 겨울이 점차 늦게 찾아와 강릉, 목포, 부산 등 남해안과 동해안 부근에서는 2100년에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 온난화로 기상 재해발생 빈도가 급증

- 기후 온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상기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폭설, 우박, 고온해, 저온해, 폭풍우, 태풍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기상재해 건수를 1904년부터 2000년까지 계산해보면 호우, 강풍, 대설 순이고, 이상 기후 1회당 지속일수를 고려하면 가뭄이 5,164일로 가장 많고, 호우 905일, 대설 512일 순이다.

□ 기후 온난화로 작물기간 및 유효적산온도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1971~2000)에 비해 온도가 2℃, 3.5℃ 상승할 경우에 평균 작물기간은 216.7일에서 각각 232.3일, 249.3일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 유효적산온도가 현재 3,750℃인 화천은 CO₂가 두배 증가할 경우 유효적산온도는 4,7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온난화 대응책으로 화천군의 농업인은 작물선택,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을 요구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의 요구사항은 신규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교육, 마케팅교육, 병충해 방제 교육, 재배시기 조정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다.
- 화천군은 군민을 위해 겨울철 영농교육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화천군민의 의식 전환, 확대 가능 작물, 쇠퇴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신규로 도입 가능한 품목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 기후 온난화에 따라 화천군에서 재배 가능품목의 선택과 육성, 축소될 품목의 대체 품목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부서를 설치 운영

- 우리나라 전체 수도작은 기후 상승으로 단수가 감소하고,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화천 지역은 현재 조생종에서 중만생종으로 전환되어 단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화천군 기술센터는 화천지역에 적합한 수도작 품종을 미리 선정하여 시험재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재배면적 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사과, 배 등 과일류이다. 화천의 겨울철 기온이 현재보다 1℃ 상승하면 화천지역은 과일 산지로 주목받을 것이다. 과일 산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일 품목별 재배지역을 미리 선정하고, 규모화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기후변화 적응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화천지역은 축산 조사료로 볏짚을 이용하고 있으나, 겨울철 기온이 1~2℃ 상승하면 청보리, 밀 등 동계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품종과 재배방법에 대한 시험연구가 필요하다.
- 시설채소의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 절약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재배면적 확대 가능성이 있다.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 고랭지 배추, 무, 당근, 감자 등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재배의 유리성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던 품목 대신 멜론, 브루벨리, 산채류 등을 시범 재배할 필요가 있다.

□ 산천어 축제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필요

-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는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라 얼음 두께가 얇아져 입장인원을 제한하거나, 천공수를 제한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생활오폐수의 유입 차단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여 결빙여건을 개선
 -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차단하여 화천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축제장의 결빙 강화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으로서의 장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하천에 생활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정화 처리하여 방출한다면 환경적인 편익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하천의 유량과 유속을 감소시키면 결빙강화 예상

- 하천에 일정량 이상의 물이 흐를 경우 외부 수로로 물이 방출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로를 조성해야 한다.
- 하천바닥을 평탄화하고 수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속을 감소시켜 결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 화천군의 주체별 역할 강화

- 화천군의 농민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센터 또는 군청의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화천군기술센터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향후 재배 가능한 품목을 미리 선정하고, 시범재배를 통해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 군청은 가칭 ‘기후변화 적응단’을 설치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응시험재배, 향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시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1.15 농협 김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자: 전창곤, 조명기, 최병옥
연구기간: 2008. 1 ~ 6

1. 연구의 목적

- 현재 농협 김치사업은 수입김치의 급증 등 급격한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지역조합별 개별브랜드 중심의 독자적인 김치사업이라는 경영의 특수성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 신뢰성 제고, 시장개척이나 수출증대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 연구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급증, 국내 김치사업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와 김치시장의 구조재편 요인 증가, 농협 김치사업 경영의 특수성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사업 활성화의 한계성 노출 등 다양한 김치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협 김치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국내 김치시장의 현황과 김치의 국제교역과 국제화 과제, 배추와 김치의 수급모형 설정을 통한 김치생산 및 소비량 추정 등 전반적인 국내 김치산업의 전망
- 농협김치 생산 현황, 농협김치 생산 하부구조 실태와 전망, 농협김치 생산 능력과 전망, 농협김치 유통실태 및 마케팅믹스 전략, 농협김치 유통전략의

- 문제점, 농협김치 공동브랜드 실태와 문제점, 농협 김치사업 경영실태와 진단 등을 통해 현행 농협 김치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의 분석과 진단
- 농협 김치사업의 합리적 방향 설정을 위하여 농협 김치사업의 SWOT 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방향 설정, 농협 김치사업의 방향 설정, 농협 김치사업의 부문별 경쟁력 제고 방향, 농협 김치사업의 차별화 방향 설정, 농협 김치 공동브랜드화 전략 방향을 제시
 - 농협 김치사업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농협 김치사업 경쟁력 제고 전략, 농협김치의 차별화 브랜드 구축 전략, 농협김치 브랜드의 마케팅 프로그램, 농협김치의 수출전략, 농협 김치사업의 물류합리화 전략을 제시
 - 농협 김치사업 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에서 김치사업 관련주체별 역할 분담과 사업부문별 역할 분담, 지역농협 김치사업 연계방향 등을 제시

3. 연구결과

- 국내 상품김치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시판용 공장김치가 공장 매출액 기준 7,840억원 내외, 유통업체 즉석김치가 점포 매출액 기준 780억원 내외, 수입김치가 수입가 1,10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김치 생산주체별 생산량 비중을 보면 일반 소비자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 김치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56.0%, 시판용 공장김치가 39.0%, 요식(급식)업체의 직접 조제김치 5.5%, 유통업체 즉석김치 3.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말 기준 11개 농협 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생산량과 매출액은 각각 34,596톤과 72,650백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김치를 포함한 전체 시판 김치 시장에서 차지하는 농협김치의 생산량 및 매출액 비중은 각각 5.1%와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협김치는 조합별로 15~30종류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합별 특화나 차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조합에서 생산제품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50여 종류의 농협김치 중 포기김치, 맛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절임배추 등 6가지 대중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 정도임.

- 농협 공동브랜드 김치인 ‘아름찬’ 김치는 영세한 유통규모로 농협김치 브랜드화 효과 저하와 시장개척의 한계성, 낮은 시장점유율로 시장교섭력 미흡,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화 대응능력 미흡, 이원적 조직체계와 적극적·공격적 마케팅 전략의 어려움, 통합물류시스템의 미구축과 물류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농협김치의 유통경로는 조합마다 주류 경로와 경로참여자가 서로 달라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농협김치공장 → 대리점(영업소) → 대량수요처 경로로 나타나고 있음. 농협김치의 유통 경로별 판매비중은 계통판매 31.6%, 일반판매 56.3%, 군남 7.9%, 수출 4.2%로 나타남.
- 농협 김치사업의 경영실태는 매출액의 지속적 성장 추세,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원가 비중, 농협 김치사업 영업이익의 불안정성, 영업 외 수익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을 들 수 있음.
- 농협 김치사업의 합리화 방향은 농협 김치사업의 통합을 통한 규모화, 통합 농협김치의 명품브랜드화, 규모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 및 시장지배력 강화, 통합 농협김치의 수출 주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기존의 농협 김치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2개 농협의 김치공장 신축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생산능력(28,900톤)과 9개 기존 공장의 HACCP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능력(7,500톤)을 포함하면 2009년 이후 기존 농협김치 생산능력에 추가되는 생산능력은 36,400톤 정도로 추산됨.
-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수입김치를 포함한 전체 국내 시판김치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농협김치의 잠재적 시장점유율이 12.2%으로 전망되며, 국내산 시판김치에서 차지하는 잠재적 시장점유율은 17.1%까지 전망됨.
- 농협김치가 브랜드화를 통해 선도기업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쟁업체에 상대적 경쟁력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판김치 시장에서 차지하는 농협김치의 상품화 물량 규모가 최소한 10%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앙회가 직접 김치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농협김치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영세·개별적인 농협김치를 대규모 공동브랜드화하여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농협 김치사업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공동브랜드 농협김치 창출, 제품의 고급화·명품화를 통한 차별화,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농가소득과 연계된 경영의 안정화, 농협김치 수출증대와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로 요약될 수 있음.
- 농협 김치사업의 부문별 방향은 생산부문의 경우 전체 농협김치 생산의 규모화 및 조직화, 대규모 명품 공동브랜드 창출, 농가와 연계된 생산체제 구축, 제품의 다양화 추구하고 소비자 니즈 충족 등임. 유통부문에서는 유통전략의 통합화와 계층 브랜드화, 브랜드마케팅 전략 중심의 유통시스템 전환, 적극적 시장개척 전략, 통합물류 추진과 물류효율화 등임.
- 농협김치 경쟁력의 원천은 대규모로 통합된 공동브랜드 ‘농협김치’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협김치 브랜드화의 핵심과 차별화 논리는 브랜드 구축의 차별화 → 브랜드마케팅 프로그램 실행의 차별화 → 브랜드자산 구성 요소의 차별화 → 농협김치 브랜드자산의 차별화 →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음.
- 농협김치 브랜드의 차별화 방향은 ‘고급화’, ‘명품화’, ‘대중화’를 모두 통합한 ‘농협김치 브랜드의 대중적 고급명품화’ 또는 ‘농협김치의 대중적 명품화’(mass + prestige = masstige)로 표현할 수 있음.
- 농협김치 물류합리화 방향은 기존의 농협김치 개별물류체계에서 통합물류로의 전환이 필요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농협김치’ 물류센터의 설립·운영이 필요함. 그러나 산지 개별조합 중심의 다양한 소규모 농식품 사업을 고려하면 ‘농협김치’ 사업의 전용 물류센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농협식품의 종합물류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6 경남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타당성 연구

연구자: 조명기, 전창곤
연구기간: 2008. 5 ~ 11

1. 연구의 목적

-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농산물의 생산·유통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영세 소농구조의 우리 농업·농촌은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치열한 시장 경쟁 하에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1990년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유통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소비 지에서의 다양한 유통주체, 유통경로 간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산지의 변화와 새로운 공급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품목별·주산지별로 규모화하고,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제고를 위하여 현재 소규모 분산, 배치되어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권역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품의 브랜드화 및 시장교섭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품성 제고 및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 이 연구는 경남지역의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을 배치하고,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남지역의 농산물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상품성 제고 및 시장교섭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이 연구는 첫째, 경남지역의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통환경의 변화와 경남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의 사업여건 분석 및 건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셋째,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의 효율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물량을 추정하여 적정규모 및 시설을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관리·운영 방안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가.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

- 농산물 산지는 재배기술의 발달, 우량품종의 보급, 수입농산물의 증가, 생산의 전문·단지화, 산지 출하조직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농산물 소비성향 및 구매패턴의 다양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 산지 직거래 증가 등 소비지 유통시장 또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농산물 생산·유통주체는 조직화·규모화되고, 농산물은 규모화된 시설로 상품화되며, 시장구조는 브랜드 상품의 대량 거래시장화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직거래가 급증하며, 정가매매, 예약상대매매 등 거래방법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나. 경남 농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 경남 2006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379,794명, 농가호수 153,251호, 경지면적은 170,530ha로 전국 농가인구의 약 11.5%, 농가호수는 12.3%, 1인당 경지면적은 약 1.11ha로서 영농규모의 영세성은 출하규모 영세성으로 나타나 단위당 유통마진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표준규격화의 저해 요인이 됨.
- 경남 농산물 부류별 생산량은 2006년 말 현재 채소류 929,323톤, 과일류 254,677톤, 총 1,18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수박 191,350톤, 양파 153,325톤, 감(단감 포함) 135,953톤, 배추 100,258톤 등임.

- 2006년도 경남 농림수산물의 총 수출실적은 421.5백만 달러로서 전국 총 수출실적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류별로는 농산물 10.8%, 축산물 14.4%, 수산물은 16.1%임.
- 산지유통의 특징은 소규모 생산자가 거래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물량의 규모화, 대량거래의 유리성 확보, 시장출하 공동 대처, 시장교섭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출하가 정착되어야 하나, 공동출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산지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산물 표준·규격화의 미흡, 소비자 신뢰도 저위, 거래 효율성 저하 등이며,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중간이윤과 물류개선을 통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 경남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정부지원과 개별시설 포함 산지유통센터 54개소, 간이 및 경매식 집하장 포함 집하장 151개소, 선별장 80개소, 예냉시설 및 개량저장고 포함 저온저장고 927개소가 있음.
- 54개 산지유통센터의 권역별 주요 취급품목은, 동부권은 감(단감 포함) 등 과일류, 양파, 마늘, 풋고추 등 채소류와 서부권은 감, 사과 등 과일류, 양파, 마늘, 토마토 등 채소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음.
- 산지유통센터의 문제점은, 시설규모의 영세성, 지역적 편중 지원, 운영주체의 관리·운영의 미숙 등 상당수 산지유통센터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특히 시설활용의 계절성으로 가동율 저조, 물량확보의 어려움, 경영능력 부족 등 경영부실 문제가 표출되고 있음.

다.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건설 기본계획

- 복합전진기지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유통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영세 분산적인 산지유통체계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제고하며, 다원화, 다양화된 거래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경남 농업인을 위한 복지·문화·교육·교류의 동기 제공 및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에 기여함.
- 경남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는 농업관련 기능이 일정 장소에 집중됨으로

- 써, 농업의 정체성, 구심점, 원동력이 되는 농업을 테마로 하는 종합지역개발 사업임.
- 주요 기능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상품화·물류·교역기능, 농산물 가공·판매기능, 복지 및 문화 창달기능, 행사광장 기능, 종합 소매기능 등임.
 - 주요 시설은 집하시설, 선별·포장시설,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직판시설, 정보처리시설, 농자재 판매시설, 농업인 복지시설, 회의장, 사무실 등임.
 - 주요 사업은 농산물의 종합상품화 사업, 수출 및 교역사업, 전자상거래 사업, 도매 및 도매 배송사업, 직판사업, 가공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 상품화 대상품목은 사과, 배, 감(단감 포함)등 과일류와 마늘, 양파, 수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등 채소류
 - 경남 복합전진기지 건설 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농림예산의 지원이 가능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부터 시작하며, 복지·문화시설, 농산물 저장·판매시설, 농업행사 및 체험시설 등은 자체예산을 확보한 후 건설하도록 함.

라. 산지유통센터 적정 취급물량 추정

- 경남 동부권 8개 시·군, 서부권 12개 시·군을 농산물 주요 산지, 지역적 여건, 교통 여건 등을 고려, 6개 유통권역으로 구분하여 동부권의 밀양권역은 감(단감 포함)과 풋고추, 창녕권역은 양파와 마늘, 서부권의 거창권역은 사과, 남해권역은 마늘, 진주권역은 감(단감 포함), 함양권역은 양파로 설정
- 2006년 기준 권역별 총 취급물량을 보면, 밀양권역 270,574톤, 창녕권역 276,193톤이며, 거창권역 96,301톤, 남해권역 45,478톤, 진주권역 326,362톤, 함양권역 235,452톤으로 나타남.
- 권역별 산지유통센터의 취급물량 추정은, 농산물 산지유통 여건, 기존 산지유통센터 취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주 취급 품목은 전체물량의 50%, 기타 농산물은 권역별 생산물량의 20%를 취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권역별 연간 총 취급물량을 추정한 결과, 밀양권역 91,478톤, 창녕권역 79,878톤, 거창권역 29,845톤, 남해권역 19,651톤, 진주권역 79,644톤, 함양권역 74,314톤으로 나타남.
- 권역별 산지유통센터의 필요 시설물량을 추정해 보면, 동부권의 밀양권역

- 12,478톤, 창녕권역 24,878톤, 서부권 거창권역 2,845톤, 남해권역 1,651톤, 진주권역 21,644톤, 함양권역 19,314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창녕권역의 양파, 마늘을 처리할 수 있는 25,000톤 규모의 시설 수요와, 진주권역의 감(단감 포함) 및 채소류를 처리할 수 있는 22,000톤 규모의 시설은 신규시설을 필요로 함.

마. 복합전진기지 적정 시설규모 산정

- 제1단계 진주권역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의 부지면적은 68,626.56㎡(20,759.53평), 건축 연면적은 32,005.97㎡(9,681.81평), 총 주차 대수는 751대로 나타남.
- 제2단계 창녕권역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의 부지면적은 75,940.02㎡(22,971.86평), 건축 연면적은 37,114.16㎡(11,227.03평), 총 주차 대수는 760대로 나타남.
- 제1단계 진주권역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사업비는 총 45,737,453,181원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 창녕권역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 사업비는 총 52,286,962,121원으로 나타남.

바. 관리·운영 방안

- 복합전진기지 사업 수행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경상남도이며, 공공기관 사업 운영형태는 직접경영, 간접경영, 위탁경영 등 3가지 형태가 있음.
-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의 재정·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사 직영 형태(제1안), 지방공사형 제3섹터 운영 형태(제2안), 생산자단체 위탁경영 형태(제3안)가 있음.
- 관리·운영 주체의 대안별 특성을 점수화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제3섹터(제2안) 운영 방식, 생산자단체 위탁(제2안) 운영 방식, 지방공사(제1안) 운영 방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함.
- 사업의 운영 주체, 복합전진기지의 건립 목적,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민관공동투자 형식인 제3섹터 운영방식을 채택하며, 사업의 경영형태는 독립채산제, 경영 책임자 선정은 공개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용함.
- 복합전진기지의 경영 초기에는 조직, 인원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구성은 총무, 구매, 판매 등 3개 부서로 하며, 경영책임자를 포함 총 인원은 30명 수준으로 함.
 - 복합전진기지의 1차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하고 여기에 집하 시설, 선별·포장시설, 예냉, 저온저장시설, 품질검사실, 창고, 사무실 등을 배치하며,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출전진기지, 도소매 판매시설, 교육·전시 시설, 지역주민의 편의·서비스시설, 문화·휴식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남의 농산물 유통을 테마로 하는 유통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것임.
 -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는 경남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선진 유통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경남의 20개 기존 시·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선도적 역할 수행함.

1.17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연 구 자: 김창길, 우병준, 이상건
연구기간: 2007. 12 ~ 2008. 3

1. 연구의 목적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양축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 연구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추진을 위한 직불금 지원단가 산정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검토함. 또한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조사를 실시하여 한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주요 축종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단가 산정과 시나리오별 직불금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제시함.

3. 연구결과

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실적 및 시장규모

2007년 유기 축산물의 인증실적은 한우 331두, 젓소 848두, 돼지 684두, 산란

계 46,955수, 육계 160,200수로 나타남.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실적은 한우 25,852두, 젓소 295두, 돼지 62,950두, 산란계 7,518,520수, 육계 9,740,761수로 나타남.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한우, 젓소, 돼지, 한우 등의 축종을 대상으로 한 시장규모는 약 2,821~3,728억원으로 추정됨. 이중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시장규모는 연간 총 2,720~3,627억원, 유기는 101억원으로 추산됨.

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대상 양축농가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 무항생제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의 인증을 기본요건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거나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

직불금 지급기준은 농가의 사육규모가 아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과 사양방식에 따라 지급토록 함. 한우의 경우 비육우·번식우 구분 없이 두수당 직불금을 산정하고 젓소는 착육우를 대상으로 우유 생산실적에 따라 직불금을 산정함. 돼지·산란계·육계는 기본적으로 두수당 직불금을 지원하되 사양방식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 직불금 지급 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함.

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지원단가 산정

축우와 돼지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금 지원단가는 관행 대비 추가적인 생산비 요인과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축종별 두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한우의 경우 무항생제가 3~5만원 수준, 유기가 25~35만원 수준으로 산정됨. 젓소의 두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생제의 경우 7~10만원 수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50~60만원 수준으로 산정됨. 돼지의 두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생제의 경우 1~2만원 수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3~5만원 수준으로 산정됨. 산란계와 육계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금 지원단가는 관행 대비 추가적인 생산비 요인과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산정함. 산란계의 1수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생제가 100~200원 수준, 유기가 1,000~2,000원 수준으로 산정됨. 육계의 경우 1수당 직불금 지원단가는 무항생제가 50~100원 수준, 유기가 200~300원 수준으로 산정됨.

1.18 식량안보문제의 발생가능성과 대비방안

연 구 자: 김명환, 김태곤, 김수석
연구기간: 2007. 12 ~ 2008. 8

1. 연구의 목적

세계적인 금융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한 생존을 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식량 생산능력, 비축능력, 수입능력 제고의 정책대안 제시

2. 연구개발 내용

- 식량안보의 개념 / 식량위기의 사례와 유형
- 국제 곡물가격 추세와 최근 상황 / 국제 곡물가격 결정요인과 전망 / 국제 곡물시장과 곡물 메이저 / 중단립종 쌀 국제시장의 특성
- 국내 곡물 자급률 / 수입의존 곡물 관련제품의 가격 상승 / 쌀 자급의 단기적 효과 분석 / 국내 곡물 수급 전망
- 식량안보 기본방향 / 농지확보 방안 / 해외수입선 다변화 / 비축제도 확대

3. 연구결과

Why 식량안보?

- 식량위기란 개인, 가정, 지역, 국가 또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총량적으로는 충분하더라도 접근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식량안보란 개인, 가정, 지역, 국가, 또는 세계가 항상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의 공급이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 국가 차원에서의 식량안보란 국민의 안전한 생존을 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식량 생산능력, 수입능력, 비축능력이 중요하다.
- 1973년의 국제적 식량위기는 구 소련의 단기적 감산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생산과 재고가 늘어나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곡물 가격 상승은 생산의 정체에도 요인이 있으나, 그보다는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 증대, 미국의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수요 증가, 국제적 헤지펀드의 투기수요 등 수요 측면에 더 기인한다.
- 이들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국제 곡물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다. 반면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우리나라도 1980년의 쌀 대홍작과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곡물수입중단 등 몇 차례 식량위기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위기 등에 의한 일시적 국가신용도 하락 및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일시적 접근성 부족, 대홍작 또는 연속 흉작, 전쟁 발발이나 급작스런 통일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2008년의 곡물 파동을 겪으면서 EU는 휴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칼로리 자급률 목표를 종전의 45%에서 50%로 올리기로 하였다. 중국 역시 식량 자급률 목표 95%를 과거의 선언적 목표에서 구속적인 목표로 전환하였다.

□ 동계답 이용 제고로 국내생산 확대

- 국제 곡물가격이 낮았던 시절에는 국내산 가격이 수입 가격의 4~5배에 달하여 가격경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 차가 2배 이하로 좁혀졌으며, 이 같은 국제가격의 강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소비자들은 국내산 곡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격을 더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으므로 더 이상 국내 생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다.
- 곡물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여 2007년에 27.2%이었으며, 계속 하락할 것으

로 전망된다. 가용 농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계답 이용율이 낮은 현실에서 맥류와 사료작물의 이모작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30%의 곡물 자급률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2000~2020년 기간에 38만 5천ha의 도시 및 산업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2006년 기준으로, 농지를 제외한 개발 가능지는 67만 8천ha로 소요면적을 능가하여 총량적으로 볼 때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시 및 산업용지에 대한 수급은 충분하다. 즉 식량안보 차원에서 도시개발은 가급적 농지 대신에 임야와 도시의 녹지 및 나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정적인 수입선 구축

- 국제적인 곡물 메이저들은 곡물가격 등락에 따라 합병, 사업연합 등을 통하여 규모화, 과점화되어 왔다. 이들은 생산단계부터 집하, 저장, 수송, 가공, 하역까지 일관된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점차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 수요업체들은 곡물 메이저가 독과점력을 발휘하는 현물시장에서 곡물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나 무역상사 등도 일본의 젠노, 미츠이, 미츠비시, 마루베니, 이도쥬와 같이 국제적 곡물유통기업을 조성하여 과점적인 국제곡물유통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이나 생산자단체이므로 외환위기 발생 시에 곡물 매입이 중단되는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국내 기업이나 생산자단체가 곡물유통기업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은 유통망 확충에 많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곡물 메이저와 그 자회사 등의 지분을 매입하고 확대해가는 방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하려는 곡물유통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수입의존 곡물의 국제선물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효율적인 시장이다. 지구의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투기성 자금의 유동이 커지면서, 향후 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곡물수입 기업이나 사료협회, 농

- 협중앙회 등의 구매 담당부서의 재량권과 실력 향상이 필요하며, 경영자들의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국영무역기구 역시 대두 등에 대한 선물 거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선물거래를 하는 무역상사 등에게 수입쿼터를 공매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단립종 쌀은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며, 가격 변동이 심하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수출국들의 수출회사들은 독과점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자급기반 유지와 규모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품질 제고를 지속하여 중국, 일본, 미국 시장에서의 고품질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비영리단체 중심의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해외농업개발은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국제곡물유통회사가 성장한 후에 해외농업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에 종자,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의 생산요소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WTO 체제는 '예외 없는 관세화'라고 하는 자유무역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에 의한 일체의 수입제한이나 수출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에 대한 내용이 UR 농업협정문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엄격하면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DDA 협상이 재개되면 수출규제를 금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수입국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비축제 확대

-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과 해외 조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물량을 비축하여 단기적 공급 부족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 쌀은 연간 소비량의 16% 내외를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속 흉작 등으로 긴급수입할 확률과, 반대로 과잉재고가 될 확률의 적절한 분포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입과 방출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단기적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정부가 매입과 방출을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에 대한 공공비축제도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시 수개월간 곡물 수입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밀, 대두, 옥수수의 일정량(연간 소비량의 10% 내외)을 식량안보용으로 무역상사 등이 비축하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일본 등과 가칭 ‘동아시아 곡물 비축기구’ 창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별 식량위기를 분산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9 사료곡물 안정적 확보 및 곡물가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자: 성명환, 김태훈, 우병준, 채상현, 승준호, 박지은
연구기간: 2008. 5 ~ 11

1. 연구의 목적

-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내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임.
-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중장기 국내 곡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 국제곡물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의 사전 대처를 위한 식량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 곡물가격 및 수급 불안정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음.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제2장 ‘국제 곡물시장 동향’에서는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선물가격의 안정성 검토, 국제 곡물가격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제3장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에서는 국내 곡물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평가 후 생산 및 수요측면에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제4장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방안’에서는 신호접근법에 의해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와 종합선행지수를 산출하여 그 선행성을 분석한 후 조기경보의 단계별 대응수준을 제시함. 제5장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서는 국내 및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국제곡물유통업 진출 방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하였음.

3. 연구결과

- 세계 곡물의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비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생산은 연도별 변동이 상대적으로 큼. 2000년대 이후 국제 곡물의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2017/18년도까지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 곡물의 수급 여건이 악화되어 최근 세계 곡물재고율이 17%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반해, 앞으로 곡물의 생산 여력이 크지 않고,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국제 곡물가격은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곡물 소비 증가와 생산의 불안정으로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은 2006년 후반부터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국제 곡물시장의 여건 속에서 세계 쌀, 밀, 옥수수, 대두 생산과 가격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동안 세계 쌀, 밀, 옥수수, 대두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불안정 요인이 나타남. 밀, 옥수수 및 대두의 국제 선물가격 역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개년 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주식용자급률은 2005년을 제외하고 70%에 미달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도 매년 30% 미만 수준임. 2015년 주요 곡물의 자급률 분석 결과, 쌀과 맥류의 사료용 수요를 제외한 주식용자급률은 62.1%, 사료용 수요를 포함한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24.1%로 추정됨. 2015년 주식용자급률 추정치는 목표치보다 8% 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곡물자급률 추정치는 목표치보다 약 1% 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소비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를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강화가 필요

함. 생산측면에서는 농업생산기반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농경지 면적의 감소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휴경농지와 답리작 이용 증대를 통해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할 경우 생산기반 감소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곡물수급은 대외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국제 곡물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알려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 대응으로 식량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조기경보 모형을 개발하였음.
- 위기에측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다. 식량관련분야로서 1970년대 초 FAO에서 설립한 조기경보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작황, 식량수급, 수출가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생할 식량위기를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외부문, 금융부문, 부동산부문, 원자재부문, 노동부문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 중임.
- 신호접근법에 의해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와 종합선행지수를 산출하여 그 선행성을 살펴본 결과, 종합선행지수가 약 1~6개월 시차를 두고 위기지수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에 따라 곡물부문 식량위기 조기경보 모형은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발된 곡물부문 조기경보 시스템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곡물부문 조기경보의 단계별 특징과 전체적인 대응수준을 보면, 1단계에서는 곡물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 2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3단계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4단계에서는 대응태세를 강화하며,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함.
- 국제 곡물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과거부터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시행착오를 거듭했음. 따라서 직접적인 해외농업개발에 앞서 국제곡물유통업으로 우선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개발수입에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국제곡물유통업 진출은 곡물도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앞으로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함. 해외농업개발은 소규모 경작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고 난 후 자금투자 및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식의 단계적 발전 방안이 바람직함.
- 국제곡물유통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물량확보나 도입가격 면에서 크게 불리한 입장이므로 선물과 현물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정착 단계에는 수입시기에 관계없이 해상운임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점에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국제곡물유통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사업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하여 컨트리 엘리베이터, 서브터미널 엘리베이터, 터미널 엘리베이터 등을 확보해야 함.
- 국제 곡물시장에서 기존업체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들의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적 제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대응방안이며,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유통설비, 가공공장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일관물류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의 정책방향을 해외농업생산기지 건설보다는 해외곡물유통업체를 지원·육성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외사료곡물 확보 방안이 될 것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곡물확보를 위하여 해외산지에서 직접 반입해야 함.

1.2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

연구자: 김창길, 정학균, 이상건
연구기간: 2008. 7 ~ 11

1. 연구의 목적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단지별로 2년간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2006년에 1차로 시작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3개 선발지역과 2007년에 2차로 시작된 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등 6개 후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6~2008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추진 진도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실태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2. 연구개발 내용

- 이 연구는 첫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사업추진 방향,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시행요령,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둘째, 사업추진성과 평가 및 실태진단을 통해 단지별 성공 또는 실패요인 도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도출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평가 자료를 기초로 건설한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지구단위의 핵심모델 개발, 광역단지의 연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광역단지 마케팅 활성화 기반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 2006년에 시작된 선발지역 사업은 2007년 말에 종료되어야 하나, 당초 사업이 늦게 착수되어 2008년까지 연장되어 현시점에서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조사됨. 2007년에 시작된 후발지역의 경우 현재 산청, 성주, 장흥을 제외하고는 사업진척도가 50% 이하로 조사됨.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시설물의 계획 변경과 경축자원화센터 부지 선정 지연 등을 들 수 있음.
- 2006년에 사업이 착수된 선발지역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주체를 보면 고산은 고산농협, 울진과 순천은 영농조합법인이 맡고 있음. 또한 2007년에 사업이 착수된 후발지역의 경우 장흥, 익산, 양구, 성주는 농축협이, 옥천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음.
- 단지별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선발지역인 고산과 울진 단지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계약, 한살림 등 생협과의 MOU 체결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후발지역인 장흥, 옥천, 양구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 계약, 인터넷쇼핑몰 운영, 학교 급식 등의 판로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단지사업 수주를 위한 당초 계획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의 실제 추진계획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단지별 농업환경자원을 기초로 한 양분수지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혐오시설로 간주한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광역단지사업 전반의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하향식의 관 주도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정책담당자 모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광역단지 내 농업인의 사업 참여도가

- 저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광역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의 경우 사업추진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효과성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표달성이 미흡하고 특히, 익산 단지의 경우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단지조성 사업기간에는 시설물 설치 및 관련 장비구입 등에 주력하고 있어 효과적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축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지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 종료 후 단지 사무국의 운영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과 전문가 컨설팅 및 전담책임자 지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매년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비료 공급원으로 유기질비료 사용 및 유기질(축분퇴비) 비료 살포의 의무화 추진과 농협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유기질(퇴비)비료 공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활용토록 함.
 -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구조가 건실하고 운영경험과 조직을 갖춘 확실한 운영주체가 선정되어야 하며,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려면 원재료인 축분(우분, 돈분, 계분) 및 수분 조절제(톱밥, 팽연 왕겨) 등 우수한 원자재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조사됨.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의 사후관리는 시설물, 품질, 수익성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수익성이 핵심관리 사항인 것으로 분석됨.
 - 광역단지가 수익이 창출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축분퇴비가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별로 조성된 광역단지가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핵심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탄소농업생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지역별로 조성된 광역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단지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연합협의체(가칭)’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합협의체는 광역단지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전국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연합마케팅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합협의체는 광역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 노력과 농업부문 녹색성장 클러스터 구축 등에 관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식품 정책 연구



2.1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 연구

연구자: 이용선, 김동훈, 최윤영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급증하는 외국 청과물의 수입 및 유통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그 체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수입 청과물의 유통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청과물 수입이 증가하는 특징을 파악하며, 수입업체의 청과물 수입·판매 실태와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입 청과물의 유통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 청과물의 유통관련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실태와 유통관련 제도의 운용 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결과

청과물 수입 및 유통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과일류 수입은 고급화·다양화되고 있으며, 채소류는 중국으로부터의 냉동·반가공(1차 가공)된 양념 채소류와 김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입업체는 과일 취급업체가 채소 취급업체에 비해 적은 반면, 업체당 취급

규모는 과일 취급업체가 3~5배 크다. 청과물 수입업체의 취급규모는 평균적으로 규모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은 영세 규모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의 규모는 매우 큰 이중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수입 과일류는 생과로서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수입 업체-도매시장-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 채소류는 주로 외식·급식업소의 식재료나 가공업체의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도매시장뿐 아니라 일반시장, 가공공장, 납품·급식업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청과물의 3할 내지 4할 정도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유통되고 있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마진은 출하 단계가 도매 단계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수입 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입 과일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반면, 수입 채소 취급 중도매인은 한 두가지 품목에 대해 국내산과 국내산 비수기의 수입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중도매인이 수입 청과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 규격·가공·(문제발생 시의) 사후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 대형유통업체는 수입 과일의 40% 이상을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하며, 최근 자체 수입팀이나 계열사를 통해 20% 가량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은 수입 청과물의 26%가 경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수입 채소의 30% 정도가 이들 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시장에는 방앗간 등 소규모 가공시설이 있어서 이 곳에서 냉동고추 등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 청과물 유통상의 문제점은 영세하고 불안정한 수입업 구조, 시장 내 과당 경쟁, 검역·검사의 비효율성, 도매시장 취급 구조, 불법적 유통 등이다.
- 관세청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업체의 사업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또는 그 이하이며, 5년 이상 사업지속 업체수는 그 비율이 4.7%에 불과하다. 수입업체나 중도매인 등의 수입 청과물 취급 규모가 대체로 영세한데다 경쟁이 심하여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CR4와 HHI 등 집중도 계수를 계측한 결과, 특히 냉동고추와 냉동마늘, 당근, 양파, 파속 채소 등 채소류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청과물에 대한 검역·검사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장기화에 의한 상품 가치 하락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유통이 비효율적이다. 도매법인이 결제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일부 중도매인은 불법적인 장외거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매시장을 거치면서 하역비 등 물류비가 추가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양념채소류는 주로 외식·급식업소의 식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은 냉동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건조·분쇄 등의 재가공 과정을 거쳐 유통되고 있다. 양념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품목으로 국영 무역에 의해 수입이 관리되고 있다. 이들 세 품목의 총수입량 중 15~30%가 국영 무역으로 수입되며, 국영무역으로 수입된 물량은 공매, 상장, 직배(직접 분배·배급) 등의 방법으로 판매된다.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 농산물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는 괴리가 있어 주로 외식업소나 가공공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양념 채소류는 냉동품 등 유사 및 대체 가공품들의 관세가 매우 낮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TRQ 관리에 의한 생산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 저가신고나 밀수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류 검사 위주의 검사 과정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관리 부처가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다. 누구나 등록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업의 영세화를 부추길 수 있다. 검사·검역을 위한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가 매우 부족하며 기술 수준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검역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관련법 간 처벌 규정이 다르며, 원산지 단속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등의 소규모 점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어려워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도 미흡하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통관 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가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 모형을 개선

하고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여야 하며, 밀수 방지를 위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 검사·검역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류검사의 비중을 낮추는 반면 정밀 검사와 무작위 표본 검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검사·검역 담당 기관을 일원화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국제 규격에 일치시켜 네거티브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선진국과 같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 수입관리 방식은 수입 청과물의 규격을 국내 규격에 준하여 세분화하고 수입권 공매 등 시장지향적인 TRQ 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신용 등급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도매시장에서는 수입 청과물에 대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되 부대비용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가수의매매에의 의한 전자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관 간 표시 처벌 규정을 통일하거나 단속 기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비제도권 시장이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가공업체의 수입 청과물 취급 관리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2 농산물 수출유망시장 분석과 대응방안 -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구자: 김경필, 김연중, 한혜성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농산물 수출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극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농산물 수출실태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시장 개척 및 확대의 애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농산물 수출은 시장개방 확대 시대에 국내 농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극동러시아는 한국에서 선박으로 1~2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산 농산물의 품질이미지 및 선호도가 높아 주로 고소득 계층에서 구입하고 있으므로 한국산 농산물 수출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다.

한국산 농산물 중에서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극동러시아에서 최고급 상품으로 상위 10% 이내의 소득계층이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점 등에서 구입하고 있다. 반면, 감귤, 장미 등은 중간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이다. 대체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는 약한 편이지만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극동러시아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조사결과 수출과정의 주요 애로사항은 과실류의 경우 국내가격 변동에 따라 물량확보의 불안정성과 저운수송컨테이너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과채류는 마케팅 활동이 부족하고 판촉 및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신선도 및 상품성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훼류에서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어려움, 저운선별 및 유통시설의 부족,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러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데 발생하는 손익은 시장 진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큰 편이다. 시장 진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수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파악, 단계적인 수출물량 확대, 시장 소비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수출물량 규모 결정,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지 기후 및 풍토를 고려할 경우 잠재시장 발굴가능성 증대, 신선도 및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필요, 현지 수입 도매업체 및 대형판매업체와 연계하는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 국내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및 판촉활동의 지속적인 수행, 수출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극동러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품질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가격경쟁력 향상을 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시설 개선, 기술개발, 물류체계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서 수출조직의 조직화와 규모화, 창구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추진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셋째, 국내 수송 및 물류단계에서 저운선별, 저운수송, 저운저장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극동러시아 현지에 물류창고 시설을 건립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판매촉진 활동,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장진출의 비관세장벽에서 통관기일이 오래 걸리는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통관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한국산 상품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

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현지 시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조사, 동향 파악, 거래관계 구축 및 유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 업체와 연계하여 시장진출 초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수출확대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출농식품 공정거래 제도’나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이미 개선 및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아직,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발굴되지 않은 수출확대 저해 제도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2.3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GAP를 중심으로

연구자: 김성훈, 이계임, 한혜성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중에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적용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2. 연구결과

주요 연구 내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여건 및 현황,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의 적용 실태, 선진국의 GAP 적용 현황 및 시사점, GAP의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제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친환경인증제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도, 농산물 안전안심 서비스(SafeQ system), 품질인증제, ISO 등이 있다. 대부분의 안전 관리제도들이 주로 생산단계의 안전 관리에 치중한 반면, GAP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Farm to table)의 농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관련 사고를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는 GAP의 장점을 인지하여 중점 추진 제도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3년간

의 시범 사업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GAP의 참여 품목 및 농가는 100품목 16,796 농가에 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GAP 정착을 위해 2013년까지 총 2,08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GAP 이행율을 전체 청과물 유통량 기준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다른 농산물관련 인증(예: 친환경 인증)과 달리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점, 둘째, GAP 농산물의 가격이 일반 농산물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산지 농가나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점, 셋째, GAP 기준 적용이나 인증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 등이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GA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GAP의 현장 적용 실태를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가 홍보 및 교육

GAP에 참여하는 산지 농가들을 대상의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의무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는 59%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현행 GAP 교육이 농가의 수준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집체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GAP 기준

GAP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은 필수항목 74항목, 권장항목 36항목으로 총 1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산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보완 작업을 통해 총 항목수를 50여개로 줄이고 있다.

다. 이력사항 관리

GAP 농산물의 이력사항관리 시스템은 산지 농가의 영농일지 작성부터 시작되어 소비자가 인증번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산지 농가들의 이력사항 전산 입력 비율은 극히 낮는데, 이는 산

지의 낮은 정보화 비율(약 30%)에 기인한 결과이다. 또한 종합적인 이력사항 관리 시스템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라. GAP 관리 시설

GAP 농산물이 경유하는 산지 GAP 관리 시설이 부족해 GAP 인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과일·채소류, 특용작물 등의 경우 인근에 GAP 관리 시설이 있는 경우가 적어서 출하 농가의 불편이 크다. 한편, 굳이 GAP 시설을 경유 할 필요가 없는 예외품목 지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마. GAP 농산물 판매 및 구매

GAP 농산물이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원인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둘 다 가진 농산물의 경우 양자의 인증 표시를 모두 부착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AP 인증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 GAP 인증

생산 농가의 GAP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검사료 부담이 크고, 인증과정에서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민간인증기관은 낮은 인증 수수료 등으로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고, 대부분이 영세하여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인증 심사 업무 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 GAP의 소비자 인식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친환경 인증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GAP 농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의향도 생산자의 기대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GAP 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 GAP의 성과

GAP 제도 도입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제고 효과는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잠재적인 안전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경제성 측면으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GAP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및 해외 바이어의 신뢰도 증진 등의 기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GAP의 참여 및 회피 유인

GAP의 계속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산지 농가 및 소비지 업체가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GAP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산지 농가는 GAP 기준에 따른 영농 방법 수정과 심사 준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산지 업체는 GAP 농산물의 판로 부족과 정부 지원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소비지 업체는 GAP 농산물에 대한 낮은 소비 수요를 제기하였고, 민간인증기관은 GAP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참여 저해 요인으로 들었다.

GAP의 장기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GAP 제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인증 사업’이 아닌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둘째, 정부 주도의 GAP 제도 운영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운영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GAP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 개선방안으로 GAP 농산물의 국내 거래 및 수출 확대, GAP 인증 시스템 개선, GAP 제도의 관련 인프라 강화, GAP 제도의 교육 및 홍보 체계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이들 개선방안은 앞서 제시한 장기 방향의 중간 다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 GAP 운영 틀이 최종적으로 변화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GAP 제도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4 농식품 감모 및 폐기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자: 황윤재, 조명기, 한재환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감모 및 폐기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은 감모 및 폐기 실태의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초사항들을 연구함으로써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첫째,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국내 감모 및 폐기 계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셋째, 주요 농식품에 대한 취급 단계별 감모 및 폐기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 방향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감모 및 폐기는 농식품 유통 현장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모 및 폐기를 수확 이후에 농식품이 최종적으로 버려짐에 따라 이용가치를 잃을 때까지 발생하는 양적 손실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감모는 폐기를 동반하지 않는 중량감소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양적 손실을 의미하고, 폐기는 부패 및 변질된 농산물의 처리와 물량 조절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화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폐기를 동반하지 않는 중량감소를 감량이라고 하며, 이러한 감량은 개체의 손실이 없이 중량만 감소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에서 쌀, 감자, 배추, 무, 양파, 수박, 사과, 감귤 등 8개 품목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농식품 취급단계별로 관련인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감모 및 폐기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쌀을 포함한 곡류보다는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감모 및 폐기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취급단계별로는 도매단계에 비해 산지, 소매, 소비단계에서 감모 및 폐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단계에서는 물량조절을 위한 산지폐기와 함께 선별에 의한 비상품 처리가 주요한 폐기 요인이었으며, 수분손실 등에 의한 비의도적 감량이 저장품목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도매단계에서는 주로 농산물의 품질감식과 시장 내 반입농산물의 품질저하에 의해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취급기한의 경과와 손상 및 품질저하품의 처리에 의해 감모가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단계에서는 농산물 취급단계 중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가식부분과 함께 비가식부분의 폐기도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모는 주로 ①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품질저하분을 폐기하거나 ②조리과정에서 품질저하분을 처리하고 비가식부분과 가식부분의 과잉제거분을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③잔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모 및 폐기 통계는 수확 이후 산지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개별 취급단계에서 발생하는 농식품의 품목별 감모 및 폐기 통계를 구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수확 이후 1차 선별을 제외한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소비단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소비단계의 경우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와 외식업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일부 가공비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가공단계의 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는 전체적인 식품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정의한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에 대해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감량은 산지 저장단계와 일부 품목의 가공단계를 제외하고는 주요한 감모 요인이 아니고, 폐기에 비하여 실제 조사를 통해 품목별로 측정하여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지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통계조사는 품목별 특성 및 차이를 반영해야 하며, 조사품목은 ①식량수급에서의 중요도, ②기존통계와의 연계성, ③감모 및 폐기의 발생 실태 등을 고려하여 채소류, 과일류, 서류를 중심으로 하고 곡류 중 쌀, 콩, 옥수수 등을 선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계조사 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지역은 품목별·취급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모 및 폐기 통계구축을 위한 조사방법은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 조사결과의 대표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단계에서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접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인들에 의한 기장조사의 병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에서도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실측조사, 기장조사를 병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의 대상은 취급단계별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감모 및 폐기실태와 요인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품목별 가식부분과 비가식부분의 폐기율, 품목별 감모율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통계 조사주기는 취급단계별로 통일하여 동일한 주기로 일관되게 조사하는 방안과 취급단계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단계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 조사 주기 및 횟수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 조사 시행에 따른 행정력 소요 등 비용적인 측면에 대

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조사추진 주체의 선정에는 기존의 통계·조사와의 연계 가능성,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통계 조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감모 및 폐기 통계는 크게 보면, ①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통계청 등의 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②관련통계 조사기관 및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되게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조사 대상 및 범위, 내용 등이 광범위할 경우 행정적·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소비보다는 생산·유통 등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는 소비단계 조사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기관의 전문성과 통계조사체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기관별로 존재하는 통계 및 조사체계를 이용하고 조사결과를 통합하려면 한 기관에서 여타의 기관들을 관리하면서 해당 기관들 간에 연계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통계 구축의 목적에 맞추어 조사된 사항을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서 단계별로 분리하여 통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5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요인 분석

연구자: 국승용, 최병옥
연구기간: 2008. 1 ~ 2008. 8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산지유통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산지유통조직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별 조직과 정부 정책 차원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산지유통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산지유통조직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수행한다. 또한 산지유통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산지유통조직의 특성, 성공요인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산지유통조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산지유통조직을 분류하기 위해서 취급액, 이익, 공동계산 비율, 손실적립금 등 4개 지표를 활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4개 지표는 사업규모, 수익성, 산지조직화, 위험관리 능력 등을 반영한다. 농협에 대한 군집 분석 결과 2개의 유의미한 군집이 형성되었다. 1군집은 취급액 평균 327억원, 이익 평균 3.2억원, 손실적립금 평균 16억원으로 2군집에 비해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여 1군집에 속한 조직 중 적자규모가 큰 1개 조직을 제외한 22개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농협으로 분류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군집 분석 결과, 2개의 유의미한 군집이 형성되었다. 1군집의 취급액 평균은 138억원, 이익 평균은 5.1억원, 공동계산비율은 41%로 2군집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영 실적으로 보이고 있어 1군집에 속한 15개 조직을 성공적인 농업법인으로 분류한다.

다양한 경영요소들이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농협과 농업법인에 대해 각각 종속변수를 성공 여부로 하는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협의 경우 품목조합 여부, APC 보유 여부, 자산규모, 부채규모, 국고지원금, 매취 규모, 과일매출 비중, 직거래 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였다. 농업법인은 품목조합 여부를 제외하고 농협과 동일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농협은 품목조합인 경우, 부채를 통해 풍부한 운영자금을 확보할수록, 과일 매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공조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매취판매의 비중이 클수록 성공조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채는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농협의 경우 과일로 전문화된 조합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농업법인은 과일은 물론 양파와 같은 저장성 있는 양념 채소에 전문성을 가진 조직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품목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농협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매취판매의 비중은 농협과 농업법인 모두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과 달리 농업법인에서는 부채규모나 국고지원금 규모가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의 경우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적으로 실증할 수는 없었으나 성공적인 산지유통조직들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품질관리, 연구개발, 우수인력 확보, 시설가동률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원 등도 성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농협과 농업법인의 경영 특성이 상이하였고, 취급 품목도 성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산지유통조직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

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광역 마케팅 조직의 결성을 추구하고 그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물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선별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재무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력 은행이나 인턴제 등을 활용해 산지유통조직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6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

연구자: 이계임, 이용선, 전형진, 주현정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청소년기는 성장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식습관이 성인소비자 행동의 유형을 결정하므로 적절한 식품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 3국은 경제·사회적인 의존도가 높고 상호간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미래 식품소비의 주역인 이들 나라 청소년층 식품소비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이 연구는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여건,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현황, 식품에 대한 인식, 식생활의 문제점, 식품정책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식품 수요 전망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식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일 식품소비 현황과 특징,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와 선호도 분석, 한·중·일 청소년의 식생활과 소비의식, 한·중·일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 비교, 식품수요 전망과 정책 과제 등이다.

제2장에서는 한·중·일의 식품소비 여건 변화, 식품소비 추세, 영양섭취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한·중·일 식품소비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와 선호도를 비교 분석한다.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섭취 수준을 비교하고, 식품류 및 주요 식품별로 청소년층의 소비량 수준을 도출하여 소비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층의 식품 선호도 특징을 비교하고, 3국 청소년의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 평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청소년의 식생활 현황과 가치관을 비교한다. 또한 식품 정보의 활용현황을 조사하고, 일본과 중국 청소년의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한·중·일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을 비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학교급식, 학교 교과 교육 등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청소년 식품 소비와 영양 섭취 및 식생활을 전망하고, 청소년 식품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한·중·일 3국에서는 소득 증가·고령화·독신가구 증가·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품소비 추세에서는 일본이 1970년대 중반, 한국이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중국에서도 공급칼로리 단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앵겔계수의 하락과 외식비중 증가추이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식품류별 소비에서는 곡류 소비 감소는 동일한 현상이나, 한국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과일류와 낙농품 지출이 일본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한·일에서 감소추세인 육류가 중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점 등에서 국가별로 약간 차이를 보였다. 영양섭취측면에서는 한국에서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증가와 중국에서의 지방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포화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단백질과 지방의 정체 내지는 감소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층의 식품소비 추이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청소년 식품소비는 쌀 소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한 반면 빵과 과자류, 돼지고기, 외식 소비가 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20~30대 연령층의 쌀 소비 증가와 함께 청소년층의 쌀 소비감소추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과일과 채소는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식품소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한 계층은 20~30대이며, 청소년층 소비는 2002년 대비 2007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 청소년의 식품 소비량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중·일 청소년의 식생활과 소비의식을 비교하면 한국 청소년의 식생활은 서구화와 외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아침결식률이 높고 저녁시간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 결식율이 한국의 1/3에도 못 미치며, 저녁식사를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비중이 높았다. 중국 청소년의 경우 영양상태는 한국에 못 미치지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등 한국에 비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과 중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청소년은 한국 식품 구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맛, 외관, 영양, 식당분위기 등을 중시하는 데 비해, 중국 청소년은 맛과 영양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식품을 경험하는 곳으로는 일본 청소년이 주로 식품 매장(73%)이었으나, 중국 청소년은 한국식당(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상 식품 및 영양정책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 유해한 영양성분의 저감화, 식품 위생관리, 학교급식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관련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 학교, 문부과학성, 지역, 산업체 등에서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도 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 공동으로 연계하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교육부와 위생부가 주축이 되어 관련 지침을 통해 청소년의 식사 및 간식 지침을 실행하고, 건강교육 및 영양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 청소년의 가정 내 식품소비는 2020년까지 곡류, 쇠고기,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소비 감소와 돼지고기, 빵과 과자류, 음료류, 외식소비 증가가 전망된다. 곡류의 감소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식 증가추세도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연령계층별 식품소비 전망치와 통계청의 추계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전체 식품 소비량을 전망한 결과 가정 내 소비식품

중 곡류는 연평균 1.0%, 쇠고기는 1.7%, 채소 1.6%, 달걀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돼지고기의 수요는 연평균 2.0%, 외식은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식에 비해 외식에서 지방 섭취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식 소비 증가는 지방 과잉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어패류와 채소류 등의 소비 감소는 칼슘, 철, 칼륨, 비타민C 등의 영양소 부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통 식문화가 붕괴되고 잘못된 식습관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서구식 식생활 확대로 영양불균형이 확대되고 생활습관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의 식품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교육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가정·학교·정부·생산자·지역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차원에서 식생활 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층이 미래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 청소년의 한국식품 소비경험과 구입의향 분석결과 한국식품에 대한 평가와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 식품 마케팅전략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맛, 향, 외관을 중시하는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매스컴과 식품 포장, 식당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한식의 영양적 우수성과 채식 중심의 건강식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한식당 진출이나 TV 드라마를 이용한 광고가 중국시장 홍보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자: 이용선, 최지현, 이계임, 김철민, 김경필, 국승용,

김성훈, 황윤재, 한재환, 주현정, 김동훈

연구기간: 2008. 9 ~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식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식품정책을 식품산업정책, 식품 영양 및 식생활 정책, 식품 안전관리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개발 내용

이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2장에서는 식품정책의 범위와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함. 제3장에서는 식품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4장에서는 식품 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5장에서는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3. 연구결과

식품산업은 먹을거리를 생산·제공하는 기초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 특히 농어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 식품 시장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영세성, R&D

투자의 부족과 비효율성, 인프라 부족, 규제 위주의 정책 등에 기인한다. 선진국들은 식품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웰빙 소비사회를 선도하는 동아시아의 식품 허브를 비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식품정책은 식품산업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식품을 생산·공급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 농어업과의 원활한 연계를 추구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품 클러스터 등 기업 및 관련 주체 간 집중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식생활이 간편화·외부화되고 있으며 식품소비는 서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양 공급의 불균형이 우려되며 비만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영양 및 식생활 정책은 국민이 식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통 식문화 가치를 적극 홍보하여 해외 수요를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식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민운동차원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식품소비의 외부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 정책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과제로는 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기능 강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화 등이 있다.

2.8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자: 김경필, 전창곤, 김연중, 한혜성, 채상현
연구기간: 2008. 4 ~ 6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의 주체 및 경로를 조직화, 규모화에 방향을 맞춘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와 부류별 대표품목에 대한 운영모델 및 실행 매뉴얼 작성임.

2. 연구개발 내용

- 연구대상 품목은 신선농식품 중심 수출 중장기전략 30대 품목임.
 - 매뉴얼작성 품목은 김치, 배, 감귤, 파프리카, 백합, 유자차, 새송이버섯임.

3. 연구결과

- 수출전문조직 육성의 필요성
 -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물량확보 기반 구축
 - 국내산 농식품 수출의 한계성 극복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농식품 안전성 강화
- 연차별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 업체수 계획(안)

- 총 30개 품목 48개업체를 목표로 설정
 - 신선농식품 중심의 주요 수출대상: 19개 품목 37개 업체
 - 그 외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 품목당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
 - 2008년에 6개 품목에 6개 업체, 2009년에 총 10개 업체 지원, 2010~2012년까지 32개 업체 지원
- 2008년도 시범사업 품목은 김치, 파프리카, 배, 감귤, 백합, 유자차로 추진함.
 - 2009년에는 딸기, 단감, 새송이버섯, 장미 품목 추진
 - 2010~2012년에는 품목별 추진성과, 수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 선정하여 추진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방향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사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선정
 -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면평가, 다단계 평가 수행
 - 조직 선정 및 성과 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해 수행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선정평가 항목
 - 조직 발전 및 성장가능성
 - 수출물량(원료)의 안정적 확보 능력 및 기반
 - 수출물량(원료)의 고품질생산, 안전성 제고, 관리기반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 가점항목: ISO, GAP, GMP, 전통식품인증
- 사업 시행 후 6개월 및 1년마다 계열화 조직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는 간략하게 점검 수준에서 평가하나 1년 뒤의 연차평가는 엄격히 평가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금액 증감여부 판정
 - 평가결과 우수조직은 성과 발표회 개최 및 인센티브 부여

- 수출전문조직 지원 시 고려사항
 - 시범사업은 사업추진 기대효과가 큰 품목과 업체 중심으로 지원
 - 사업지원 항목은 직접적 비용보다는 간접적으로 수출전문조직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우선 지원

- 사업 추진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규모화 확대에 대한 수출시장 확보경쟁 심화가능성에 대해서 수출전문조직은 신시장개척 및 상품개발에 중점을 두어 전체 수출시장 규모를 키우도록 함.
 - 수출전문조직의 수출물량조절 및 가격결정의 독점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출판매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함.
 - 수출전문조직 선정에서 제외된 영세업체, 지역은 수출전문조직에 통합, 연계화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마련
 -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조직의 인위적 결성 가능성은 평가서류 및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제도
 - 사업의 장기적 투자, 정책의 일관성 의지 필요
 - 빠른 정착보다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구축 및 활성화 유도
 - 사업의 중장기적 육성방향과 최종목표 제시
 - 수출관련 지원사업의 연차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 중장기적으로 수출전문조직 법인 설치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지원 및 관리 시스템
 - 품목별 규모화에 따른 지자체별 지역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 타 지역, 타 업체와의 과도한 출혈수출 경쟁 방지 시스템
 - 품질 및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육성 동시 추진 필요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 및 전담인력 보강

- 수출물류 기반과 마케팅
 -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단일화와 첨단화
 - 광역 시·군 경계를 벗어난 물류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 최우수 단지부터 광역통합브랜드로 상품 관리
 -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으로 안정적인 해외바이어 확보

2.9 미래의 농수산물 유통 전망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 연구

연 구 자: 이용선, 국승용, 김경필, 김동훈, 최윤영, 이상네트웍스
연구기간: 2008. 5 ~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거래소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실태와 전망,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역할과 주요 사업, 우선 취급품목과 거래주체, 물류 및 대금결제 방안, 품질관리와 분쟁 조정 방안, 운영주체와 초기 설립 방안, 운영활성화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사이버거래소 설립의 타당성 분석 등이다.

3. 연구결과

사이버거래소는 민간 영역의 전자거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각화하고, 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B2B 거래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수 농산물이 인터넷을 통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서로 다른 인터넷 쇼핑물에서 거래되는 농식품들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농산물 B2C 포털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타산업과 달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B2B 거래를 촉진한다.

B2C와 B2B 모두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구매 요구가 있는 모든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2B의 경우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판·구매자 유치를 통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우선 취급품목으로 미곡, 계육, 돈육, 계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곡은 비 농협 RPC의 원료곡 구매 시 B2B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계육의 경우 계열화 조직 간 도계육 거래 시 사이버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돈육의 경우 계열화조직과 1차 및 2차 가공업자, 대리점 등과의 거래를 사이버거래소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계란의 B2B 전자거래는 선도(예약) 거래 방식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거래주체 중 고려할 만한 대상은 급식업체, 시장도매인, 지방도매시장 등이다. 급식업체들은 미곡, 김치 등 대량, 장기 지속 거래 품목을 중심으로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할 것이다. 시장도매인과 지속적으로 규모화된 거래를 하는 산지유통조직 및 구매자의 사이버거래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도매시장은 운영특례를 활용하여 사이버거래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물자 판매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입찰참가 업체 간의 거래로 B2B 거래와 같은 성격이다. 농수산물의 사이버거래소 취급 규모는 2010년 3,31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에는 7,763억원, 2018년에는 1조 8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산물 대규모 거래업체들은 대부분 물류시설을 자사가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거래에서 물류시설 이용방법은 거래주체의 보유 및 임대 여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대금정산은 B2B 전자거래 결제 시스템 개설, B2B 거래 정산소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가격 등 거래조건 협상, 거래 성사,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B2B 전자거래 시스템을 개설하며, B2B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B2B 전자거래 보증 등 B2B 전자거래 인프라를 활용한다. 중소 농수산물 구매업자들의 신용보증 취득이 곤란할 경우 사이버거래소가 정산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이버거래소 유치가 가능하다.

사이버 거래소 운영초기에 품질과 거래규격은 통용화 된 수준의 단순화가 바람직하다. 거래소 운영이 정착된 후에는 세분화된 규격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사이버 거래소에서 거래업체들의 신용정보, 물량정보, 품질정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품질에 대한 분쟁발생 시에는 품질전문가(Inspector), 거래소 담당자, 법률전문가, (연구기관) 등 3~4인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유형으로는 신규 특수 법인 설립, 기존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유통공사)의 분사(分社) 유형, 민간투자 유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이버거래소는 설립 비용에 비해 운영비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초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사이버거래소를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이버거래소를 신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도정비, 조직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과도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기업 간 규모화된 거래를 B2B 전자거래로 유치하여 거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행 농안법 상 사이버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에는 별다른 결격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차원에서 농안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B2B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2년간 거래수수료를 인하하여 거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 농식품 안전성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연 구 자: 이계임, 최지현, 김성훈, 손은영, 곽민정 교수(평택대학교)
연구기간: 2008. 8 ~ 12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안전성 관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장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장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평가는 실제 조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평가, 물량 배정·안전성 검사·사후관리 등 세부 업무에 대한 평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4장 주요국의 안전성 조사 현황에서는 미국, 호주, EU, 일본, 대만의 안전성 조사 업무 현황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호주, EU는 국가차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 국가로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구체적인 세부 운영현황에 대해 비교하고자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각국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를 검토하고, 물량 산정 및 업무 현황 등 조사관련 세부적인 업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5장 적정 표본 수 산출과 표본 추출방법 고찰에서는 통계적 기법에 기초로 한 적정 안전성 조사 물량 산정 방식과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6장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안전성 조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향후 조사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사품목 선정, 물량 배정, 사후관리, 조사기반 등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해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007년 150품목 68천건까지 확대되어 왔지만, 조사물량 및 물량 배분 근거가 미흡하고 시료 채취의 어려움에 당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호주·EU·일본·대만의 안전성 조사 사례를 비교하였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에 대한 평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물량배분·시료 채취·부적합 발생 시 관리현황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조사되었다.

과학적인 안전성 조사물량 산정방식의 재설계를 위해 국내외 산정방식에 대한 평가와 적정 산정방식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조사표본 규모 결정 시 부적합을 산정의 정확도를 목표로 고려하는 방법과 최소 검출력을 기초로 표본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표본 수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였다. 전체 농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규모는 분석실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업무는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산지 위해물질 규제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에 대한 사전 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므로 생산단계에서 규제모니터링(기본품목, 자율품목, 업무 협조품

목)과 탐색모니터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탐색모니터링은 농약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군이나 신중유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유통단계 대상 품목은 우리나라 안전성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과 식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들 중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시행하는 품목으로 선정하여 유통단계까지 연계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과 이력추적관리 등 조사기반 확충 가정 하에 안전성 수준 진단, 정책수행 효과 평가 및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을 위한 잔류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품목별로 분산운영 되던 조사업무가 통합될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인 유사한 조사관련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전담조직을 확대함으로써 전문화된 조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단계 규제모니터링 대상품목은 2001~2007년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점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생산통계가 조사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본관리 품목 중에서 부적합률이 발생하거나 2005~2007년간 평균 생산규모가 5만톤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생산통계가 없으나 안전성 조사실적상 부적합률이 우려되며 소비량도 상당 수준에 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품목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2009년도 전체 농산물 안전성 분석규모는 분석능력을 감안 시 50천건 수준이며, 기본 품목의 표본규모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할 경우 50개 품목 기준으로 생산단계 13,163개, 유통단계 6,730개이다. 지역별 조사물량 배분은 생산량에 따른 확률 비례 추출과 인구비례에 따른 확률 비례 추출을 감안한다.

안전성 조사 시 농가의 반발과 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료에 대한 유상 지급과 안전성 조사 수행 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처벌 목적의 규정보다는 부적합품의 시장출하는 막고, 해당 농가에게 경고하는 형식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맞춤형 농정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기초로 소면적 작물에 대한 생산통계를 구축하고, 소면적 작물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곰팡이균·기생충란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교육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1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연구자: 김철민, 이명기, 한호석
연구기간: 2008. 5 ~ 12

1. 연구의 목적

- 농림수산 관련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국내외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추정방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추정방법을 개발하며, 개발된 추정방법에 의해 우리나라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주요 연구 내용은 농림수산관련산업의 개념과 포괄범위와 이에 따른 분류와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의 추정을 위한 국내외 기존의 방법과 이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음.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를 추정방법별로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음.

3. 연구결과

- 이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기보다는 농림수산관련법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에서 농림수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국내외의 추정방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김완배 외(2000)의 추정 방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추계자의 자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농림수산물관련산업의 정의만 고려할 경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농림수산물관련산업을 제외하고 추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도된 농림수산물관련산업의 정의와 연관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추정방법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추정한 농림수산물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물관련산업 산출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추정 결과 >

단위: 10억원, 만명, %

		1995	2000	2003	2005	2006
산출액	농림수산업	33,827 (4.1)	39,178 (3.1)	39,962 (2.6)	43,533 (2.3)	44,209 (2.2)
	관 련 산 업	106,155 (12.7)	139,716 (11.0)	158,794 (10.2)	169,483 (9.1)	174,860 (8.9)
	농림수산 산업전체	139,982 (16.8)	178,894 (14.1)	198,756 (12.8)	213,016 (11.5)	219,070 (11.1)
부가가치	농림수산업	22,829 (6.4)	25,030 (4.9)	24,166 (3.8)	24,631 (3.4)	24,635 (3.3)
	관 련 산 업	33,108 (9.2)	44,484 (8.7)	51,601 (8.1)	51,503 (7.1)	53,378 (7.1)
	농림수산 산업전체	55,937 (15.6)	69,513 (13.5)	75,767 (11.8)	76,135 (10.5)	78,013 (10.4)
종사자수	농림수산업	248 (14.5)	224 (13.5)	195 (11.0)	183 (10.4)	180 (10.1)
	관 련 산 업	250 (14.5)	234 (14.0)	244 (13.8)	227 (12.9)	226 (12.7)
	농림수산 산업전체	499 (29.0)	458 (27.5)	439 (24.8)	410 (23.3)	406 (22.8)

- 농림수산 산업전체 산출액을 보면 1995년 140조원에서 2006년 219조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에서 11.1%로 약 6% 포인트 감소하였음.
- 농림수산 산업전체 부가가치는 1995년 56조원에서 2006년 78조원으로 증가하였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서 10.4%로 약 3.2% 포인트 감소하였음. 농림수산 산업전체 종사자수는 1995년 499만명에서 2006년 406만명으로 93만명이 감소하였음. 전체 경제에서의 비중도 29.0%에서 22.8%로 6.2% 포인트 감소하였음.

2.12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 이계임, 한재환, 손은영, 제철웅 교수(한양대), 백태웅 교수(브리티시콜롬비아대),
위태석 박사(농촌진흥청), 봉영준(한양대), 안수길(한양대)

연구기간: 2008. 6 ~ 11

1. 연구의 목적

국내 식품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실행평가,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검토 등을 바탕으로 식품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식품관련 법령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관련 법률의 체계와 규정 평가, 수요자의 식품관련 법 실행평가, 외국의 식품관련 법체계, 식품관련 체계 개편방안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식품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 목적과 실태를 중심으로 법령 체계를 파악하였다. 식품관련 법률 체계의 당면 이슈를 중심으로 한 법령 체계 평가와 식품 관련 법 규정의 모순·불일치의 현황은 제3장에서 다루어졌다. 제4장에서는 법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률 적용 시 문제점과 법체계 개편 운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주요국의 법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방안과 효율적인 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운용방안은 제6장에서 제시되었다.

3. 연구결과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약 200건으로 식품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수법이 존재한다. 식품 관련 법률을 내용면에서 구분하면 안전, 품질, 산업진흥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위법은 “식품안전기본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이 하위법률로 위치하고 있다. 식품 품질 관련 법률체계는 식품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들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식품산업관련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는 5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 중에는 전체식품을 망라하는 기본법이 없고, 소관부처별로 기본법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관련 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식품 관련 법률의 목적이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산업진흥 중 2~4개의 목적과 관련됨에 따라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관리가 부처별로 분담됨에 따라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식품위험 정보 수집·위험평가기능·위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이 소홀해지며, 지자체에서도 업무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식품의 품질표시 관련 법률은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분산·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식품위생법도 기준·규격, 표시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며, 진흥법제의 요소인 기금이나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관련법의 운용과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은 것(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과 관련법과 관리기관의 분산(전통식품·농업경영체와 소비자단체)을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의 소관부처로 가공업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법의 통합에 대해서 업체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업체에서는 안전과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소비자단체는 안전과 진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산지 표시’, ‘HACCP’, ‘유기식품인증’, ‘식품이력제’ 등이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평가와 법 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기본법(178/2002/EC)”이 상위법 위치에 있으며, 그 아래 지침이나 명령 형태의 식품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식품기본법”의 기본 목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 관리이며, 사료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식품법은 “식품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식품성분·표시·위생·신종식품·위해물질 등을 모두 시행규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식품법에서는 식품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가 구분되어 있고 식품안보를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식품법의 특징은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BMELV)에서 위생·안전을 모두 책임지고 식품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세부사항을 규칙(시행령)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가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차원의 식품검사청(CFIA)과 보건부가 식품안전에 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캐나다 식품법은 “식품의약품법”에 근거를 두고 그 외의 법은 “식품의약품법”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육기본법”이 내각부 소관이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대부분의 법을 관장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법은 대체로 품목별로 통합되어 있으며, 안전성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후생노동성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식품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품 관련 법률은 국제적 기준과 소비자 선호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식품산업 정책의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중장기 개편안은 ‘식품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법률 통합안’이다.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이 상호 분리되기 어려운 식품의 품질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 품질 관련 법률들을 포괄하는 형태의 기본법을 구성하는 반면, 식품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을 구분한다. EU, 영국, 독일의 식품법이 대

표적 사례로 분산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나, 기존 관련 법체계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소관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기 개편안은 ‘식품품질관련 법률 통합안’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인 식품의 품질 표시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을 제정하는 안이다. 이 안은 캐나다와 일본 사례와 유사하며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상호 견제에 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여전히 법률적 중복과 모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제정과 관련 법률 간의 조정과정에는 상당 시간 지체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현재 법률체계 하에서 법률 조항의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의 품질 및 식품산업 진흥에 관련된 항목이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품질표시, 검사, 식품단체 및 기금 관련 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법 개정의 시행자 및 수요자가 개정 시기를 예측하여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를 위해 해설서와 Q&A집 발행,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2.13 2007년도 식품수급표

연구자: 황윤재

연구기간: 2008. 7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과 영양공급량을 산출하고 주요국의 식품공급량을 비교함으로써 식품수급정책 수립과 국민영양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은 크게 식품공급, 영양공급부분과 국제통계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공급에서는 품목별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량이, 영양공급 부분에서는 에너지, 단백질, 지방질 등의 공급량이 산출된다. 또한 공급식품의 자급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로서 에너지자급률이 계산된다. 국제통계부분은 FAO 자료를 이용·가공하여 국내외 식품공급량 비교가 가능하다.

3. 연구결과

(1) 식품공급

2006년에 곡류와 채소류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조건 악화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착과율이 비교적 높아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음. 육류는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에 따라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서류는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의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고, 해조류는 생산량 증가로 식용공급량이 증가함. 2007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은 아래와 같다.

- 곡 류: 408.9g (전년도의 413.3g보다 1.1% 감소)
- 서 류: 35.3g (전년도의 39.6g보다 10.9% 감소)
- 두 류: 30.8g (전년도의 30.2g보다 2.0% 증가)
- 설 탕 류: 55.3g (전년도의 58.0g보다 4.7% 감소)
- 채 소 류: 408.9g (전년도의 421.4g보다 3.0% 감소)
- 과 실 류: 124.3g (전년도의 114.7g보다 8.4% 증가)
- 육 류: 112.0g (전년도의 105.3g보다 6.4% 증가)
- 어 패 류: 111.3g (전년도의 119.3g보다 6.7% 감소)
- 유 지 류: 49.9g (전년도의 49.6g보다 0.6% 증가)
- 해 조 류: 39.4g (전년도의 35.7보다 10.4% 증가)

(2) 영양공급

가. 에너지

2007년도의 총공급 에너지는 국민 1인 1일당 2,967kcal로서 전년도의 2,986kcal보다 19kcal 감소하였다.

- 곡류에서는 1,487kcal가 공급되어 전년도의 1,506kcal보다 19kcal 감소하였다. 쌀에서는 전년도보다 13kcal가 감소한 844kcal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급 에너지의 28.4%이다.
- 동물성 식품의 공급 에너지는 1인 1일당 478kcal로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체 공급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이다.

- 공급에너지의 영양소별 구성비율은 단백질 13.4%, 지방질 27.0%, 당질 59.6%이다.

나. 단백질

2007년도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9.7g으로 전년도의 100.9g보다 1.2g 감소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은 47.2g으로 전체 단백질의 4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0.9g 감소한 것이다.

다. 지방질

2007년도 지방질의 총공급량은 88.9g으로서 전년도의 88.3g보다 0.6g 증가하였다. 전체 지방질 공급량 중 동물성 지방질은 25.8g으로서 총지방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이다.

3. 농촌 발전 연구



3.1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자: 박대식, 최경은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②국내외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한 농촌 다문화가정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다문화관련 이론적 검토, ②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와 현황, ③국제결혼 과정 및 결혼생활 실태, ④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실태, ⑤사회참여 및 사회복지 실태, ⑥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⑦외국의 다문화가정정책, ⑧농촌 다문화가정정책의 개선방향 등이다.

3.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주의는 서구에서는 다수-소수인종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서 몇 가지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일컫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국가 위주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리한 이 연구의 이론적 시각은 ‘다문화주의’로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절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또한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국제결혼 장려활동이 활발하다는 요인과 맞물려 국내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농촌에 거주하거나 저학력인 남성들은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 대상과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사회기여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시급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 및 한국 문화 예절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중개업체’(53.0%) 및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31.1%)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결혼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적이며 능동적인 이유

인 반면에, 남편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같은 수동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이고, 대부분의 가구(94.9%)가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31,976원)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이 대체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 생활과 한국생활의 상대적 비교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3/4 이상(78.8%)이 농지(논·밭) 소유면적이 2ha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가구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은 4,838평(1.61ha)으로 나타나 일반 농가의 30~40대 층보다 영농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영농교육 참여의사(26.3%)가 다소 낮지만, 앞으로 교통편 및 보육서비스의 제공,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강의 마련, 가족들의 협조, 관련 서비스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25%는 현재 참석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이 전혀 없으며, 결혼이민자가 가정 자조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남편의 비율도 30.3%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동료’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35.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2.2%), ‘교통편이 불편해서’(17.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결혼이민자)으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31.0%), ‘교육 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26.8%), ‘강사와의 언어소통이 어렵다’(20.8%) 순이었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16.0%), ‘방문교육의 확대’(15.8%),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4.8%) 등이다.

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교육 및 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은 ‘방문교육 확대’(20.0%),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17.5%),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16.3%), ‘교육 내용과 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13.5%),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3.0%), ‘교육받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11.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원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복수응답)는 ‘국민건강보험 안내’,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46.0%), ‘육아지식 제공’(29.8%),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22.5%), ‘유아 건강검진’(21.5%) 순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둬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통합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실적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연령기에 있는 외국인에 초점을 두고 직업교육 및 고용정책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캐나다에서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은 일방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①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②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③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④농촌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⑤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⑥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⑦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⑧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⑨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새로운 인적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이민자들을 우리의 동료 및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아가

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농촌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도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2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자: 최경환

연구기간: 2008. 1 ~ 7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자유방임을 기본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을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보건의료자원(시설과 인력 등)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빠르게 변하는 여건 하에서 농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농촌 주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차의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의의와 구성 원칙
 -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우리나라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보건의료자원의 실태

- 농촌 응급의료 서비스체계의 실태
 - 관련 정책들의 실태
 -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
-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변화 전망
 - 개선방안

3. 연구결과

- 농촌주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차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농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 설정
 - 막연하게 농촌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농촌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받아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 농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일차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및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치의제도(일차의료 전문의) 도입을 검토
 - 주치의제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실시
- 농촌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의 경우 초기(병원전) 대응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현지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을별 응급구조요원 지정, 주민에 대한 응급구조교육, 응급의료 기본장비 비치 등의 방법을 강구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농촌주민의 경제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령자 건강보험료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수준 완화 등을 강구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실화
 - 사회·경제·지리적 변화로 농촌지역마다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

3.3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2/2차 연도)

연구자: 송미령, 김정섭, 김광선, 박주영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촌 현실 진단 및 미래 모습 전망을 토대로 농촌개발정책의 과제와 수요를 도출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현행 농촌개발정책의 재편 방안을 구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살펴 보았다. 첫째, “현재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리고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에 기초하여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민의 눈으로 농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요구되는 농촌개발정책의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Q-방법(Q-methodology)을 활용하였다. 셋째, “농촌개발정책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정책 목적, 내용,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책 과제와 수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선행연구의 문제 지적,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조사 및 분석, 사건구조분석(event structure analysis) 방법에 의한 사례지역 관찰조사 등에 기초해 파악하였다. 넷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정책은 어떻게 재편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책 내용과 방식 측면에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농촌이란 제1차 연도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바 있다. 농촌은 삶터, 일터, 쉼터이자 공동체의 터이다. 삶터 측면에서는 정주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일터 측면에서는 고용기회가 풍부하여 경제적 활력이 있어야 한다. 쉼터 측면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매력적 지역자원도 풍부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터로서 주민 구성이 건강하고 공동체적 유대와 참여의 기회가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없었고 주민들의 주관적 정주 만족도 측면에서도 그러하였다. 특히 일터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였다. 더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나.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

미래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결과, 농촌 현실 진단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터’와 관련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촌개발정책 수요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삶터’와 관련된 정책 수요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게 발견되었다. ‘쉼터’에 관한 정책 수요는 전문가 집단의 전망에서는 크게 부각되었으나, 농촌 주민들에게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 농촌개발정책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가

농촌개발정책은 농촌 현실이나 주민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터’로서의 농촌 발전보다는 소규모 기초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까지 고려하지 않고 시설 설치에 주력한 경향이 있다. 이로써 일정수준 기초 생활인프라가 정비된 것은 농촌개발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비하다보니 비효율과 상당수 시설의 유휴화가 초래되었다. 소규모 시설 설치 위주 사업으로 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 생활서비스 부문 간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에 편중되어 농촌지역의 읍·면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거나, 시·군 전체로서 효율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의 수요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제1차 연도에 도출한 정책 과제에 제2차 연도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 과제 및 수요를 더하여 정책 목표, 정책 내용, 정책 추진 방식 등 크게 세 가지로 정책 재편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정책 목표의 경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로 설정하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등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한정된 정책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삶터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을 정비하려면 마을 중심의 하드웨어 정비에서 벗어나 주택-마을-중심지-이웃 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정주체계를 고려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터로서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자원과 유무형 가치를 활용해 복합 산업화하는 동시에 지역 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기회 확충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쉼터로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데이터베이스화, 상품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의 터로서 역량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 유입의 촉진 및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정책 목표와 내용은 농촌지역 유형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각기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목표와 내용, 핵심 전략,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농촌개발정책이 전환되는 데는 정책 추진 방식의 재편이 가장 결정적이다. 중앙정부의 관점과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점과 시각으로 정책 추진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농촌개발정책의 소규모 단위사업을 정책군으로 통폐합하고 정책군별로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따오기 경쟁에 치중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처의 지침에 충실한 성과가 모호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단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통폐합 및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의 원활한 작동과 성과 증대를 위해서 농촌계획제도 도입과 성과 관리형 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도 필요한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특히 “삶의질향상특별법” 등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농촌개발정책의 주무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이다. 주무 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일 것이며, 이를 위한 초부처적·초영역적 협력에 의한 농촌 서비스 기준 확립, 지역 데이터 기반 구축, 지원조직 육성과 현장 밀착형 파트너조직 육성 등이 시급하다.

3.4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연구자: 마상진, 정기환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신규 취농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관련 제도와 통계 분석, 신규 취농자에 대한 설문 및 사례 조사, 비농업 분야 및 외국의 사례 고찰 등을 바탕으로 신규 취농자들이 취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구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요인으로 자본 요인, 전문성 요인, 시장 요인, 사회 네트워크 요인의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자본 요인에는 고정자본(토지, 영농 시설, 농기구), 운영자금(고정자본 구입 및 관리 자금, 노동력 동원, 각종 투입재 구입)이 포함되고, 전문성 요인에는 생산 기술, 경영 역량이 포함되고, 시장 요인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 취득, 판매 시장 접근 등이 포함되고, 사회 네트워크 요인에는 자본 네트워크, 전문성 네트워크, 시장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신규 취농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신규 취농자를 위한 지원이 운영 자금이나 전문성 개발 지원에 치중

되어 시장 접근 또는 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신규 취농자 지원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은 대다수 신규 농업인들에게는 정책 자금과 관련한 또 다른 진입장애로 인식되고 있었다. 최근에 새로 도입된 신규 취농자를 위한 사업들이 운영 모형 부재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취농 준비 이전 단계(탐색 단계)의 사람들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의 영농 인구 감소는 고령농의 자연 감소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젊고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영농 분야 취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취농자 대다수가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조직화가 덜되어 있고,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신규 취농자에 대한 설문 및 사례 조사 결과 네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 네트워크 등 네 가지 진입장애 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신규 취농을 준비하는 사람과 이미 진입한 사람이 느끼는 진입장애는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취농을 준비하는 학생은 사회 네트워크 요인과 시장 요인, 신규 취농을 준비하는 일반인은 전문성 요인, 이미 진입한 농업인은 자본 요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를 겪고 있었다. 셋째, 진입장애와 가장 관련이 깊은 변인은 취농 준비기간, 농업조직 참여여부 등이었는데, 준비기간이 길고, 농업인 조직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진입장애를 덜 겪고 있었다. 넷째, 네 가지 진입장애 요인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사회 네트워크 요인이 전문성, 자본, 시장 등 다른 진입장애 요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신규 취농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진입장애 해소를 위한 방안들의 기본방향을 “영농관련 조직과의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 그리고 “단계적 취농 준비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비농업 분야 관련 사례, 선진 농업국의 사례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다음의 열한가지로 제시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한 과제로 ①영농 도제 프로그램

램 지원, ②농장(법인체) 취업 활성화, ③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고, 자본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④신규 취농자의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을, 전문성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⑤신규 취농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⑥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⑦농업계 학교의 영농관련 교육 지원 과제를, 시장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⑧생산자 조직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및 취농 촉진을 위한 인프라 형성 차원에서 ⑨신규 취농자 관련 통계 개선, ⑩대국민 농업교양교육 강화, ⑪신규 취농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진입장애 해소를 위한 추진 과제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데, 사회 네트워크 진입장애 관련 과제 해소는 자본, 전문성, 시장 진입장애 관련 과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선행해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신규 취농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제는 네 가지 진입장애 해소 과제에 모두 선결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5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연 구 자: 성주인, 이동필, 권인혜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라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농촌 중심지의 실태와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 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배후 농촌 마을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려 했다.

2. 연구개발 내용

우선 국토 공간구조 현황 및 도시체계의 변화 추이, 농촌 정주생활권 및 중심지 기능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한 후, 전국 수준의 데이터 작업을 바탕으로 인구 흐름, 경제활동 변화 등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시·군 유형화 및 중심지 계층 분류 작업을 통해 농촌 중심지 여건을 살펴보았다.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서는 농촌 주민들의 중심지 이용 실태, 서비스 부문별 이용권역 등을 살펴보고 중심지 유형 간 비교·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농촌 중심지 육성 관련 정책을 검토한 후, 농촌 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생활권 광역화와 배후 농촌의 인구 고령화, 과소화 등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농촌의 중심지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국 시·군을 ‘주변도시 연계권’, ‘중간지역’, ‘자체생활권’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경제활동 기회가 증대하는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과 달리 농촌적 특성이 강한 자체생활권 시·군의 경우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심지 기능의 침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초서비스 기능을 기준으로는 전국의 농촌 중심지의 계층을 분류하였다. 지역 유형별로 중심지 계층 분포나 중심지 기능의 특화도, 주민들의 중심지 서비스 이용 양상 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자체생활권 시·군의 하위 계층 중심지일 경우 배후 마을의 공동화 및 고령화 등으로 중심지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더욱 많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례지역 연구는 4개 시·군(안성시, 평창군, 해남군, 영양군)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서비스 이용 항목 등을 살펴보았다. 시·군청 소재지 및 읍·면 소재지의 중심지 기능 수준, 접근성, 주변의 다른 거점도시 발달 여부, 배후의 원격지 마을 분포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중심지 영향권이 형성되는 양상을 비교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중심지의 공간적인 세력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어느 읍·면이 시·군청 소재지에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군청 소재지와 근접해 있으면 그 영향권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기초서비스 부문이 발달해 있거나, 읍·면 내에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면 읍·면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농촌 정주체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생활권 광역화나 개인 기동성 증대라는 전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기초적인 서비스 이용권역은 여전히 주거지와 가까운 읍·면 또는 시·군 범위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사례조사에서 파악하였다. 따라서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는 배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령화와 마을 기능 쇠퇴가 두드러지

는 곳의 경우 가까운 읍·면 단위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마을 재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중심지 관련 시책들은 대개 배후 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소재지만의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어떠한 곳을 거점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인 생활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면밀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심지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점도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농촌 중심지 육성의 기본 방향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 중심지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심지 유형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며, 농촌의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구 과소화로 공동체 기능이 퇴조하는 배후 마을에 대해 장기적인 재편 작업과 농촌 중심지 육성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농촌 중심지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지자체 차원의 중심지 관련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며, 지역 차원의 시책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담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히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을 포함한 시·군 농촌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연계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배후 지역과 중심지의 연계 발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사례라든지 농촌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도입,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재지 거점시설 운영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단위의 대안적 교통수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3.6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연구자: 김용렬, 김경덕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현황 및 변화 추세 파악, 농촌지역정책 입안과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특수성을 반영한 농촌지역통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①현재 확보 가능한 농촌지역통계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조사결과 간의 상호활용 여부와 가능성을 분석하며, ②농촌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는 무엇인지, ③선진국의 농촌지역통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④한국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2장에서는 농촌지역통계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개념, 지역통계의 개념, 농촌지역통계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통계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농촌지역통계지표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내 농촌지역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제4장에서는 선진국의 농촌지역통계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농촌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농촌지역통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지역통계 DB에 대한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는 제7장으로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의 핵심인 ‘농촌지역통계’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은 농촌의 변화상과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범위인 ‘읍면’단위를 ‘농촌지역’으로 규정하였고, 농촌지역통계의 개념은 농촌지역(읍면 혹은 군)이라는 공간적 범주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것들을 계량화한 수치라고 정의하였다. 농촌지역통계를 이용한 농촌지역통계지표들은 국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통계 지표 구상(국가단위), 통계청 농어촌 지표 구상(시군/읍면동 단위), 지역발전 비교를 위한 관련 지표, 낙후지역 구분을 위한 관련 지표들을 조사하였고, 외국의 경우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농촌통계 지표 구상, PAIS(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의 농촌발전지표, HAY 리포트에서 제시된 농촌지역 지표, 미국 미주리주 2007년 Boone 카운티 지표(Boone County Indicators)들을 살펴보았다.

군지역 단위로 발표되는 지역통계가 총 41개이며, 14개 분야(토지 및 기후,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공공행정 및 사법)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지역통계의 문제점으로 ①읍·면 단위나 군 단위를 공표범위로 하는 통계의 양적인 부족, ②중요한 농촌지역통계들의 누락, ③신뢰성 미흡, ④농촌지역통계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 미흡, ⑤농촌지역통계 획득의 불편함, ⑥국제적 흐름에 따른 농촌지역통계 구축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영국, 미국, 호주, EU, 일본의 농촌지역통계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와 인구이동 관련통계와 물적통계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으로 얻을 수 있는 통계가 극히 미약하였다. 특히, 소득, 소비, 서비스 시설 접근성, 교육성과, 만족도, 지역역량,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통계 획득에 한계가 많아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농촌지역통계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촌지역통계’는 ‘인구’였으며, ‘개선이 시급한 농촌지역통계’는 ‘소득과 소비’였다. 농촌지역통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부족’으로 나타났고, ‘읍면까지 공표범위 확대가 필요한 농촌지역통계’에는 경제활동인구를 비롯한 만족도, 소득, 고용 등에 관한 통계가 주를 이루었다. ‘신규로 생산이 필요한 농촌지역통계’에는 귀농/귀촌인구, 전업농가수(전문화된 전업농만), 다문화가정수, 독거노인수, 빈집수, 개별주택에 대한 GIS 통계화, 주택의 질(지수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대상자수, 정신건강지수, 관정·고혈압·당뇨 등 성인병 유무, 학습효과, 평생교육통계, 자녀유학실태, NGO단체(단체수, 종사자수), 이웃관계 만족도, 가구소득출처, 가구평균지출액, 외국인 고용실태, 기업의 지속가능성, 창업한 사업체수, 폐업한 사업체수, 개별 사업체의 GIS 통계화, 농지전용면적, 농지구입 후 이용실태, 토지가격/농지가격, 유휴지 면적, 탄소배출량, 경관과 어메니티에 관한 통계, 수자원 보급률, 에너지 자원 자급율, 환경오염지역 GIS 통계화, 생활환경 쾌적성 만족도로 나타났다.

제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통계에서 분야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농촌지역통계 중 ‘가장 중요한 통계’는 ‘인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과 소비’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지역 세부 통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경우 인구추이, 평균가구소득, 의료 및 복지시설 접근성과 복지시설수, 농가 및 농가인구, 고용, 농지전용면적, 생활문화체육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산업체/산업별 임금수준, 주민의사결정참여, 주택편의시설구비율이 중요한 통계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통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지역통계 DB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특정기관(연구기관)이 유지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필수적인 통계내용만을 수록하는 한국농촌지역통계 핵심 DB와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농촌지역통계를 담고 있는 한국농촌지역통계 통합DB를 제시하였다. 한국농촌지역통계 핵심 DB는 기본여건과 기본통계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기본공표범위는 읍면동과 시군으로 하였다. 특징은 기본여건에는 지역의 규모를 나

타내는 면적을 사용하였고, 기본통계는 인구 및 주택, 지역경제, 지역재정, 지역 농업, 건강과 의료 및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환경, 토지, 사회간접자본, 지역 공동체로 구성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중심으로 DB 구축 추진체계를 형성하되, 자문 단과 협의체를 두며, 각 구성요소는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다. 추진 단계는 3단계로 구성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준비하는 연구를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수행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설계된 DB구조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수집 가능한 정보항목에 대한 원시자료를 DB에 입력하여 DB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구체화시킨다. 3단계는 농촌지역 통계DB의 고도화 단계로 2단계 Pilot System을 확대, 농촌지역 통계 DB를 현실화하는 단계이다. 농촌지역 통계 DB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3억원으로 추산되며, 분야별로는 DB 구축 및 응용시스템 개발비용 3.4억원,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8천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3.7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위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자: 송미령, 김경덕, 성주인, 강민수
연구기간: 2007. 7 ~ 2008. 7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 실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화천군 농업·농촌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 내용에는 크게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를 통해 화천군의 어메니티 자원을 유형화 및 특징화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각각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화천군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농가를 유형화하고 차별화된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아가 화천군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 가능한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한다.

3. 연구결과

화천군의 대표적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화악산, 광덕계곡, 곡운구곡, 토고미마을, 평화의 댐, 붕어섬, 파로호 등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 축제나 대외적 지명도가 높은 자원, 도농교류 기반을 갖춘 농촌관광 마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천군 주민들

이 어메니티 자원이라고 응답한 자원수는 2,044개이고 농촌마을 당 평균 34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농특산물을 포함한 경제자원 비중이 전체의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동체 활동자원이 29.6%, 자연자원 20.8%, 역사·문화자원 11.2% 순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 참여 경험이 축적된 마을일수록 더 많은 어메니티 자원이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군사시설이 많고 마을개발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마을들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의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상품화 측면에서의 특징을 간추리면, 농촌관광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 내용, 소규모 축제 등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식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적인 개별 시설이나 자원 자체에 대한 소개는 이루어지나 자원이 가진 의미나 역사성, 차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그것들을 연계하여 특징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작업(storytelling)은 소홀하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화천군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자원과 주민의 인식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들이 인식하는 화천군의 대표적 이미지와 주민이 생각하는 화천군의 강점 간에는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 지역 특화 작목 생산에 주력하는 고소득 농가가 많은 마을에서는 어메니티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화천군의 농가는 2005년 농업총조사 기준으로 2,169호, 호당 평균경지규모는 1.31ha이다. 화천군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8.95세로 전국이나 강원도에 비해 젊은 편이고, 학력도 전국 및 강원도 평균을 상회한다. 농가의 영농 형태는 수도작 보다는 특용작물, 채소 및 밭작물 등 환금 작물 중심의 영농 형태에 특화되어 있고 전업농 비중이 있어 전국 및 강원도 평균보다 높지만 겸업농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농외소득은 경영주의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천군과 같이 경지규모는 작은 편인데 농가경영주의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은 지역에서는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08년 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화천군 농가의 재배 품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5년 대비 벼, 인삼, 오이, 토마토, 호박, 화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은 작물인 콩 및 고추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삼은 2005년 대비 284.2%, 오이 137.2%, 토마토 156.3%, 화훼 214.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작물 재배 면적을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을 산출한 결과 화천군의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3천 9백만원, 평균 농외소득 5백 3십만원, 평균 농가소득은 4천 5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농업소득을 선도하는 품목으로는 호박, 한우, 논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농외소득을 선도하는 일자리는 관공서와 관련된 사무직, 국민 농어민 연금, 공장 및 건설, 토목공사 현장 노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 농가 경쟁력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형 구분을 위해 농가의 잠재력 지수를 설정하였는데, 잠재력 지수의 구성은 인적 자본(학력, 연령), 경영자본(경지규모, 판매금액), 사회적자본(생산자조직참여, 컴퓨터 활용능력), 보완자본(농외소득여부, 농외사업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읍·면별 잠재력 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농업만으로는 간동면이 0.419로 가장 잠재력이 높은 편이지만, 사회적자본이나 보완자본까지를 고려하면 종합적으로는 상서면이 0.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잠재력 지수를 이용하여 화천군 농가를 최상위 농가, 차상위 농가, 차하위 농가, 최하위 농가로 분류하여 유형별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천군 농가의 0.8%에 해당하는 최상위 농가는 민간자금 자체 확보를 위한 신용지원, 경영·기술 전문교육 및 컨설팅, 사업안정을 위한 재해보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천군 농가의 20.4%에 해당하는 차상위 농가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을 실현하는 영농규모를 갖춘 농가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농가 유형이다. 가장 주력하여 농정 지원을 해야 할 경영체로서 품목별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재해, 수급변동 등에 관한 경영정보, 시장정보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경영안정장치 보강에 중점을 준 정책 프로그램 지원해야 한다. 셋째, 화천군 농가 비중 44.5%에 해당하는 차하위 농가는 경영안정과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희망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농외소득원 개발에 힘써야 한다. 끝으로 화천군 농가비중 34.3%에 해당하는 최하위 농가는 사실상 농업정책적 지원보다는 직접지불제, 생산적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화천군의 농업정책 방향으로는 ①틈새농업의 확대로 얼굴상품의 경쟁력 제고,

②새로운 대체 및 보완작물의 발굴로 농가소득 안정화, ③안정적인 생산시설 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④농산물 산지유통기반 강화로 안정적 판로 구축, ⑤농업과 가공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농업 지향, ⑥농업생산을 친환경농업생산 체제로 전환, ⑦산지농업의 육성으로 산지 자원화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기존 농촌마을을 거점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테마선정을 통한 특화유도, ②화천군 농촌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허브시설의 도입, ③허브시설과 농촌거점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연계를 도모, ④국내 농촌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화천군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였다. ①화천군 공무원 대상 교육·학습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Study Group 구성 및 운영, 정예 공무원 학습모임 운영, ②화천군 주민 대상 교육·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칭)농촌경영 CEO대학 운영, ③화천군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어메니티 자원 표기 방식 수정, ④농가 DB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농가유형별 지원의 효율성 제고, ⑤화천군 내의 어메니티 자원 간판달기 사업, 우리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열린정원 조성사업 등 어메니티 자원 인식 증진 및 명소 만들기 프로그램, ⑥농특산물 패키지 상품 구성을 통한 농가 간, 마을간 네트워크 구성, ⑦화천군 금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운영, ⑧경관보전 직불제 준비, ⑨산천어, 복숭아, 낭천닭 중 적합한 소재를 테마로 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준비 등이다.

3.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연구자: 마상진, 최경환
연구기간: 2007. 11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과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우리나라 보다 선진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의 농정 및 농업교육정책 관련 문헌 고찰 그리고 일부 국가는 방문을 통하여 관련자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선진 농업국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농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 연구 및 지도, 교육·훈련 사업의 주체가 지방화되거나 민영화되고 있었다. 둘째, 농장 규모화 및 복잡화되면서 농가경영주에 대한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셋째, 농업교육에 있어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었다. 넷째, 중소규모 농업인 교육·훈련, 컨설팅 기관의 통폐합하고, 그러면서 농산업체, 농민

단체, 농학계 대학과 농촌지도조직의 연계를 통한 농촌지도, 컨설팅, 교육·훈련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농업관련 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여섯째, 신규 농업인의 자질 제고 및 농업인 역량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농업능력표준가 개발되고, 농업인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 일곱째, 농업인 학습관련 기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 강화와 평가 결과의 홍보가 활발하였다.

3.9 농작물 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최경환, 김용렬
연구기간: 2007. 12 ~ 2008. 6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본격적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농가 경영안정정책들과의 역할 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의 효율적 추진과 아울러 관련 정책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함.

2. 연구개발 내용

- 농가경영안정 정책 현황
 - 각 정책별 취지와 목표, 내용, 장단점 등
-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가경영안정정책들 간의 연관성 분석
 - 농업재해지원대책, 풍수해보험,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 제도, 가격위험감소정책 등
- 외국 사례 분석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 정책들 간의 상호 연계방안
 -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
 - DDA 논의동향 및 WTO 규정과의 정합성
 - 수입보험의 도입 가능성 검토
 - 각종 농가경영안정정책들과의 상호 연계방안

3. 연구결과

- 농가경영안정정책의 발전방향
 -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면서 관련 보험제도들을 통합하고(농어업재해보험), 보험이 정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보험이나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을 고려함.
-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들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련 보험제도들을 통합,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킴.
 - 농작물재해보험과 직불제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 쌀의 경우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 + 변동)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 + 변동) + 재해보험”보다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 + 수입보험”이 이론적으로는 더 정책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과수의 경우에는 현재 실시 중인 재해보험과 계약출하 사업을 통합하여 수입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어느 정책(조합)이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양한 형태의 경영안정정책으로 인한 지원(보조)이 해당 농가의 평균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가경영안정정책 간에 농가의 참여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책 참여는 농가의 자유의사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강력한 유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한 한 정책 간에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업무도 협조체계를 구축함.
- 농작물재해보험 시행과정에서 수집·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타 농가경영안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통계연보 발간 등).

3.10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연구자: 마상진, 박대식
연구기간: 2008. 3 ~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 분야 신규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농업계 대학생의 직업선택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대학 및 졸업생의 진로 현황 분석, 농업계 대학생의 취농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태 분석 그리고 관련 제도 분석 및 사례 고찰을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농업계 대학생의 직업선택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대학시절 영농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이나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학생의 발달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영농 분야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업계 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많았지만, 실제 농학, 원예, 축산 등 농업 생산과 관련한 학과는 많지 않았다.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 출신자의 30%가 미취업이었고, 농업계 대학 졸업생의 극히 일부만이 영농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었다.

농대생의 영농분야 유입을 위한 제도에는 사실상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이 유일하였는데 아직 실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모범이 될 만

한 표준 모형이 없었다.

농업계 대학생의 취농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학생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한 과거 경험 및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영농분야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일부 농업계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농정착교육과정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농업계 대학생들에게 기존의 대학 교육과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농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영농에 대한 생각 전환, 나아가 진로 계획의 수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3. 연구결과

이상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비농업분야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과제로 먼저 ①영농정착교육과정의 개선·발전, ②영농관련 교육자원 DB 구축 및 홍보, ③학과단위 영농 관련 프로그램 지원, ④영농 동아리 활동 지원, ⑤농업계 대학생 간 교류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농정착교육과정 개선·발전과제에는 해외연수 확대 및 운영 개선, 다양한 농업분야 전문가 강좌개설 및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모형 확립, 소식지 발간, 학교 간 프로그램 교류, 학생 상담 및 컨설팅 강화,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장학혜택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과제로 현재와 같은 학문중심 교육체제 외에 농업계 대학에 농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영농중심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11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

연구자: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연구기간: 2008. 3 ~ 10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통합적 추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우리나라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선진국의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적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③정책의 통합적 추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의 일환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계획 상의 사업들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의 일부 사업들을 중심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인벤토리를 구성하고 이들 사업의 실태를 다차원적인 접근에 의해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과제를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해야 할 연구의제(Research Question: 이하 ‘RQ’)로 구성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140개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 및 주요 지역개발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이 밖에 사례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통계수치 등을 구득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가.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

농촌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4가지 정책 영역 중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과 농산어촌 교육여건 부문을 제외한, ①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부문 ②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의 사업들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이들과 근친성이 높은 ‘접경지역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등 ③균특회계에 속한 3개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53개 정책 사업의 인벤토리를 구성하였다.

이들 사업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벤토리 분석 결과,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의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농촌과 낙후지역 구분의 모호성, 단위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의 다양성, 사업 추진 실태의 다기성(多岐性),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 일부 사업의 유사성 및 중복성, 하드웨어적 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나.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장 적용과정 분석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인벤토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기존 논의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사례지역에서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해야 할 여섯 가지 RQ를 구성하였다. 각 RQ의 문제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단위사업들과의 연계 여부, 단위사업들 간의 중복성, 소규모 분산 추진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효과의 저하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 정도, 사업 간 연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조정기능 여부, 사업 추진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체계의 작동 여부 등과 관련된다.

각 RQ를 중심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장 적용과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RQ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개별 단위사업들 간의 연계 추진을 위해서는 단위사업 선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예산 편성의 자율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통합이나 예산의 통합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하는 지역적 통합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은 일반 농촌 지역개발사업과 통합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연구결과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통합적 추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여건에 맞춘 차별적인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체계를 고려한 광역적 접근 및 도농통합적 연계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단위사업별 보조보다는 포괄적 재정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계획제도를 통한 지방의 자율적 정책 기획 및 실행,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의 내용이 하드웨어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다부문적 주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첫째, 견고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 사무가 재정의 되는 한편, 단위사업 접근 방식이 다양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구속력 있는 농촌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관련법의 개편이 요구된다. 여섯째, 성과관리형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형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하려면 지역통계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지역주체의 확립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3.12 약용작물 지역전략사업 육성방안

연구자: 이동필, 김정섭, 최경은
연구기간: 2008. 3 ~ 9

1.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2008. 3. 15~9.16(6개월) 기간에 농협중앙회의 위촉으로 이루어진 수탁연구 결과로 약용작물의 생산과 유통 실태 및 문제를 파악하여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활성화 전략의 수단으로서 약용작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주요 연구내용에는 크게 약용작물의 종류와 분포, 그리고 수급실태를 살펴보고, 약용작물 관련 제도의 실태와 문제를 검토한 후에, 주요 지역특산 약용작물의 경쟁력 분석, 약용작물산업의 당면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 그리고 약용작물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2차 자료 조사 및 분석, 약용작물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례조사, 그리고 약용작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약용작물산업의 당면과제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결과 밝혀진 주요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방

향은 고품질의 우수 약용작물을 기초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이나 한방제품을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역특산 약용작물 단지를 조성하고, GAP 및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기초로 한 생산·유통 계열화 사업과 가공·유통 시설의 집중 배치 등의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서 약용작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재배규모의 확대와 기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GAP 및 친환경재배, 생산이력추적제의 실시 등을 통한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구축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로 기 형성되어 있는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채굴기나 건조기 등 대형농기계의 공동이용이나 새로운 종자나 생산기술의 도입, 품질인증 등에 공동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약용작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등이 가공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전자금은 물론 기술과 경영지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약용작물에 대한 효능이나 유용성 표시제도를 정비하여 제품의 효능과 상품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한약재규격화제도를 개선하여 약용작물은 자가규격품을 폭넓게 인정하고 생산자들의 가공산업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약용작물의 유통구조개선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약 재배를 기초로 약용작물 생산·유통 계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 시 식용과 의약용으로 차별 적용되는 통관기준이나 검사방법을 일원화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원산지표시제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 질서에 의한 차별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약용작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의학에서 주장해 온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능성식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료가 되는 약용작물의 종자·종묘개발, 생산기술과 가공 및 포장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 절감하고, 상품의 품질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세한 생산자들이 연구개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특산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상의 당면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약용작물 및 한약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대해서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 일반농산물 등으로 제각기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에 의해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재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은 규격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한약재규격화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조절제도도 실제 우수한 국산한약재의 증산과 외국산 약재의 차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약용작물의 생산과 단순가공 및 유통부문은 전통적으로 농식품부의 업무영역인 만큼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복지부와의 중복추진에 따른 행정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유리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 이를 웰빙과 건강 기능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바탕으로 지역특산 약용작물산업단지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모델은 체험관광이나 한방의료사업 등 3차 산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약용작물을 테마로 한 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지역특산 약용작물의 생산과 차별적 유통을 위한 특산단지를 지정하고 GAP인증과 계약재배, 가공 및 브랜드화 등을 연계한 계열화사업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3.13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평가, 선정, 모니터링 및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립

연구자: 송미령, 김정섭
연구기간: 2007. 4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 평가, 모니터링함으로써 그 성과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효과적 모형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농림부, 지자체, 연구진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에 의한 파일럿 프로젝트 (pilot project)
- 평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전문가 참여체계 구축

2. 연구개발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의의를 규정하는 것이다. 농촌 인구의 변화 동향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이 가지는 시대적 의의와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시범사업 추진 환경을 분석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지자체의 인구 유치 관련 노력들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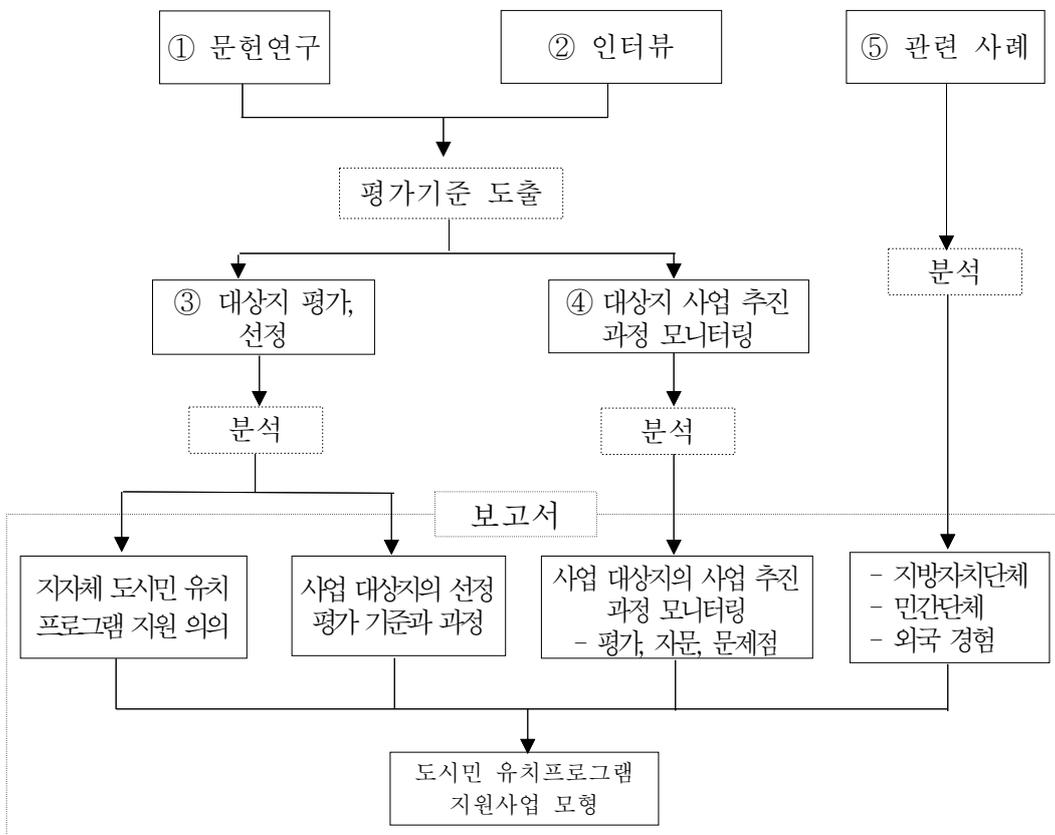
셋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한 대상지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시범사업과 연구가 동시에 추진되는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넷째, 시범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모니터링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세부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단계를 나누었다.

끝으로,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의 사업 모형을 제시한다. 이것은 사업 추진 목적과 대상, 사업 추진 기간과 범위,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와 체계,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 연구 추진 체계도 >



3. 연구결과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고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간 여러 가지 농촌정책이 묵시적으로는 농촌 인구 유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극적 인구 유지를 넘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농촌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을 분명히 설정하는 한편 정책 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도입이 바람직하다.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의 56.3%는 농촌 정주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 중 4.1%는 10년 내 농촌 이주를 위해 주택·토지 구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자체들의 농촌 인구 유치를 위한 시책들은 영유아 육아비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과 같이 매우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여건과 의지, 계획 내용, 기대 효과 등을 판단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인터뷰심사를 통해 10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진안군, 금산군, 서천군, 곡성군, 화천군, 남해군, 남원시, 양구군, 고창군, 안동시 등이다.

시범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을 개선하거나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계획 및 실행 단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유치를 지자체의 현안으로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관련 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계획 수립 기간이 짧고 사업 추진체계가 불분명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진안군이 68%의 진도율을 보임으로써 가장 앞서 나아갔으나 다른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시기가 지나 중앙정부 정책 사업 대상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로 기대 이하의 낮은 진도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워크숍과 상호 정보 교환 과정을 통해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계획 수립 단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업의 개선과 본 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

다. 우선, 사업 추진 목표를 단순히 농촌으로의 인구 유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유치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대상을 10개 지자체보다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 추진 기간은 1주기를 3년으로 하되 최대 3주기 사업까지 장기화하되 계획 수립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업 내용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파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열어두되 필수적인 하드웨어 사업을 허용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와 전문가집단 등의 역할 분담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특히 지자체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 내용을 배치하고 적합한 역할 분담을 이루도록 모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3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담당자가 상황에 적합하게 판단토록 하였으며, 성과 평가 역시 세부사업별, 지자체별, 정책사업 전체 등 단계별로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정책사업의 성과는 사업 추진 지역의 인재 유치 효과, 사업 추진 지역에서의 인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조직의 창설과 활동의 증가 정도, 도시민들의 정주 수요 변화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3.14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연구자: 허 장, 정기환, 박경철
연구기간: 2007. 4 ~ 2008. 4

1.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베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의한 베트남 시범마을에 대한 5개년 실행계획서에 따라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한 결과 보고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 베트남 농촌개발 분야 개발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2006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아래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의 두 개 시범마을에 대한 계획수립 컨설팅 및 사업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는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개발 경험에 기초하여 베트남형 농촌 지역개발 모형을 개발하여 베트남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촌개발 시범사업의 시행을 자문하는 것으로,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추진방법을 자문하고 이를 위하여 현장방문, 진도점검, 중간평가 등을 실시한다. 둘째, 마을별 실행계획서에 따라 1차 연도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1차 연도 사업은 소득증대, 기반 정비, 환경 및 위생개선 등이다. 셋째, 시범사업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3. 연구결과

사업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현, 사, 마을 내의 추진기구를 정비하고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현지 참여기구인 국립농업개발계획연구소(NIAPP)의 주요 담당자에 대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NIAPP의 참여진을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마을 가운데 한 곳을 인근 마을로 교체하면서 사업이 지체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초의 계획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첫 해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한 베트남 농촌개발 모델의 구축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1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중간평가

연구자: 박대식, 송미령, 박주영
연구기간: 2008. 2 ~ 5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①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②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③제1차 기본계획 및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완료 시 예상되는 주요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부문별 실적 평가, ②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영향 평가, ③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향후 추진방향 제시 등이다.

3. 연구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과 측면에서 총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 형성 측면에서는, 상위 국정목표와 부합하고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별로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정책 집행 측면에서는, 대체로 일정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은 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성과 측면에서는, 농산어촌 인구의 비율을 2009년까지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농외소득 비중은 2005년 61.3%에서 2007년 67.4%로 증가하여 2009년까지 달성할 목표(64%)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지표 달성도를 100% 이상 충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산어촌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든 최초의 추진사례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책모델이 더욱 발전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총괄 평가에서 도출한 주요 문제점은 ①이원화되어 있는 관련 특별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②하향식 계획수립에 따른 시·도 및 시·군 기본계획의 형식적 수립, ③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미흡, ④사무국 구성 및 업무 범위의 미 정립, ⑤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⑥관련 사업 간의 연계 및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부족, ⑦사업 영역 구분 모호 및 사업의 영역별 안배 부족, ⑧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⑨현행 점검·평가제도의 한계 등이다.

부문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기반 확충 부문에서 살펴보면, 현행 복지 전달체계는 농산어촌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산어촌 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관련 사업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인 경우가 많아서 은퇴 농어업인 및 저소득의 비 농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특히 예산지원이 적절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등이 밀려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개발 촉진 부문은 기존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주로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했던 반면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시행한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등 정책 영역의 확대와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당수 사업은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업들이 기능별로 체계화되지 않고 부처별로 각기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시·군 단위에서도 실과별로 사업이 분산 추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의 사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주민역량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신규 사업 개발과 향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사업영역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며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통계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 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측면에서 볼 때 도·농 통합 시 지역은 점차 살기 좋은 농산어촌으로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에 낙후(군)지역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으로부터 점차 더 멀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인 농촌 진단 혹은 주관적인 인식, 만족도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

한편 객관적 부문과 주관적 부문으로 나누어 삶의 질 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객관적 지표로서 교육, 복지, 지역개발, 복합산업에 걸쳐 32개 지표를 제안하였고, 주관적 삶의 질 영향평가를 위하여 19개의 만족도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의 개편, 새로운 국정 과제 발굴 등 여건이 변화되어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에도 새로운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본방향으로는 ①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 도모, ②능동적 농산어촌 복지 추구, ③농산어촌 유형별 차별화 전략에 의한 접근, ④농산어촌의 역량과 상호 협력에 의한 창의와 효율 확대를 설정하였다.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이원화되어 있는 관련 특별법의 통합, ②「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대상을 농림어업인에서 농산어촌 주민으로 확대, ③「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④사무국 기능의 활성화, ⑤계획 수립 체계의 방식 전환, ⑥농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⑦지방이양사업의 개선, 종합적으로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수준 점검, ⑧사업영역 재편, ⑨주요 과제의 개선, ⑩신규 사업의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완료 시 예상되는 주요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3.16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2차 연도)

연구자: 허 장, 정기환
연구기간: 2008. 4 ~ 12

1.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베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의한 베트남 시범마을에 대한 5개년 실행계획서에 따라 2007.4~2008.4까지의 1차 연도 사업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을 수행한 결과보고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 베트남 농촌개발 분야 개발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2006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아래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의 두 개 시범마을에 대한 계획수립 컨설팅 및 사업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는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개발 경험에 기초하여 베트남형 농촌지역개발 모형을 개발하여 베트남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촌개발 시범사업의 시행을 자문하는 것으로,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추진방법을 자문하고 이를 위하여 현장방문, 진도점검, 중간평가 등을 실시한다. 둘째, 마을별 실행계획서에 따라 2차 연도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2차 연도 사업은 소득증대, 기반 정비, 환경 및 위생개선

등이다. 셋째,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현지 워크숍의 개최를 지원한다. 워크숍의 목적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사업대상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넷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사업항목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주민들과 마을 지도자들의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 연구결과

현지자문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어, 현지 참여기관인 NIAPP과 업무협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두 마을에는 소득증대, 기반 정비, 환경 및 위생개선 등에 종합적으로 지원되었다. 즉 농업소득 증대와 비농업 분야 소득원 개발, 농촌도로와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주택 내 주방과 화장실, 목욕실 등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추진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모델을 보다 정확히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 NGO 등에서 모두 47명이 참석하였고, 새마을운동의 방법론, 새마을운동의 베트남 적용 방법, 컨설팅 사업 추진성과와 평가 등 6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과 본 사업의 내용은 현지 일간지에 게재되는 등 홍보성과를 거두었다.

본 컨설팅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수혜자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8.11.18~11.21에 걸쳐 총 121명의 마을주민과 여론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업계획의 합리성이나 선정된 사업항목의 적합성, 사업시행의 효율성/효과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 농어업 생산의 변화, 소금융, 교육훈련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인프라와 마을회관 개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어서 만족도는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프라 등 주민부담이 높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외부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2007년부터 새농촌개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마을을 단위로 하고 마을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개발, 인프라 개발, 생활환경 개선, 생활문화 개선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이 그 모델개발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예산전용 혹은 조기집행으로 시범마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사업명 및 사업성과물(가령 마을회관) 자체에 “새마을(Saemaul)” 혹은 “새마을운동(Saemaul Undong)”을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을 홍보하고 있다.

3.17 해외농업개발 지역별·대상작물별·유형별 연구

연구자: 허 장, 김용택
연구기간: 2008. 6 ~ 9

1. 연구의 목적

- 해외 여건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품목별로도 적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출 유형별, 대상작물별,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농업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함. 이 연구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농업의 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 해외진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지역별·대상작물별·유형별 실행계획 수립
 - 지역 선정 기준
 - 맞춤형 전략 수립
 - 대상작물별 진출전략: 밀
 - 대상작물별 진출전략: 대두
 - 대상작물별 진출전략: 옥수수
-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 전략
 - 해외농업 진출 지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

- 우크라이나의 농업 실태
-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 전략
- 연해주 농업진출 전략
 - 연해주 일반현황 및 농업현황
 - 연해주 진출 한국 기업의 영농현황
 - 연해주지역 농업 진출 방안
 - 농업협력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연구결과

- 맞춤형 해외농업개발전략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농업수출국으로 진출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해주, 우크라이나 등 농업생산 여건은 좋으나 현재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해외 곡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이에 따라 먼저 주요 곡물을 선정하고 그 후 지역여건을 분석한 후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고 주요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 해외진출지역을 선정하였음.
- 밀은 식량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 세계인의 주식이며, 주산지는 전 세계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음. 현재 밀의 수급량은 한 해에 약 5~6억톤 정도이며 사료로는 약 1억톤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순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식량작물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입원은 비교적 다각화되어 있으나 미국과 호주의 비중이 높음. 밀의 해외진출 가능 지역으로는 서호주가 있음.
- 대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공원료로 쓰이기도 하며 가축의 배합사료, 유지작물로 사용되기도 함.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두를 주로 식용, 가공용으로 소비하며 서구에서는 가축사료로 이용함.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은 미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대두의 해외 농업진출 가능 국가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유리함.
- 기초 사료작물로 많이 이용되는 옥수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곡물이며 미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47% 정도를 생산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 4위의 옥수수 수입국임.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가 옥수수 해외농업개

밭에 유리한 지역임.

- 우크라이나는 인구, 영토,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농지는 비옥한 흑토로 구성되어 소비에트연방시절 연방 식량의 25%를 공급하였음.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농업이 쇠퇴되어서 농산물 생산이 1990년의 70% 수준임.
-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의 목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상생적인 농업협력을 하는 것임. 이에 따라 새로운 농업경영 및 농산물유통시스템 구축과 농지의 물적 기반을 정비하고 확충하여서 우크라이나의 농업생산성을 90년대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유럽시장에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우크라이나 진출의 단기 전략은 영농자금을 필요로 하는 현지 농장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것임. 그리고 현지에 물류인프라를 확보하고, 항만 시설과 보관시설을 건설하는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농지확보를 위하여 국영 및 협동농장의 민영화 과정에서 부실화된 법인소유의 농장을 인수하고 동시에 농업 전체 시스템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에는 진출 모델이 따라서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법으로 현지의 법인이나 경영체를 인수하고 또는 합작경영형태로 진출해야 함. 동시에 정부에서는 대규모 농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금융 및 정보의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국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남부에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0.75배임.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 포기 이후 연해주 경제는 혼란에 빠져있으나, 주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2005년부터는 꾸준히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해주의 농업용지는 약 123만ha로 총면적의 약 8% 수준임. 농업생산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연해주 주정부의 노력으로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연해주 주정부는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농업·축산업 진흥정책을 펴고 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하였으나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는 다른 농업생산·유통여건, 러시아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

족, 전문 인력의 부족, 대규모 영농에 필요한 자금 부족, 치안 및 재산보호가 부족하여 실패하였음.

- 연해주는 사료원료 및 조사료의 확보가 용이하고 추운날씨로 인하여 축산 관련 질병의 피해가 적으며, 주정부의 내·외국인 간의 차별이 없는 점, 인근한 중국의 축산물 수요 증가 등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 장점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농업기반 시설의 약화, 연해주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추운날씨로 인하여 재배기간이 짧은 점, 중국산 수입물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연해주 지역과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이 신중하게 투자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연해주 농지는 소유가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주민의 고용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그리고 기진출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동시에 한국 정부는 연해주에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농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함.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반입 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연해주 정부와 농업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MOU 체결 등의 외교적 지원을 해야 함.

3.18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연 구 자: 김용택

연구기간: 2008. 6 ~ 9

1. 연구의 목적

- 글로벌 농업시대가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는 시점에 한국 농업이 효과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강구·제시

2. 연구개발 내용

-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수립의 배경
 - 국내외 동향
 -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수립의 필요성
 -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수립의 범위와 성격
-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성과
 - 정부주도형 해외농업개발 진출
 - 민간주도형 해외농업개발 진출
 - 추진 성과

- 해외농업개발 추진상의 문제점
- 해외농업개발의 목표와 전략
 -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 정책 목표
 - 정책 방향
 - 정책과제
 - 추진 전략
- 해외농업개발 주요 추진과제
 - 관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
 -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정비
 -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수립
 - 해외농업개발 지원시스템 확립
 - 해외농업개발의 절차
- WTO 체제와 해외농업개발 농산물의 국내 반입
 - 국제통상환경과 해외개발 수입
 - 해외개발 수입의 통상법상의 문제점
 - 통상법적 문제점 해결 방안
 - 연차별 추진 계획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 해외농업개발과 종합상사의 역할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과 사료곡물 확보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개발 수입
 - 일본 해외농업개발과 브라질 세라도 농업 개발

3. 주요 연구결과

- 곡물은 기후 등 자연 의존도가 높고 수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시장이며 생산량에 비하여 국제 교역량이 10~12% 수준이며, 곡물생산과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2006년 이후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가 급등하였음. 동시에 전 세계 식량위기로 인한 식량 민족주의 및 식량안보론이 확산되고 있음.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시행하였으나 사전타당성 검토 미비, 전문 경영인 및 현지 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 사후관리 미흡, 정책지원 부족,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등으로 몇몇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패하였음. 지난 30년간 국제곡물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점, 국내 농업인들의 반대, 해외 농산물의 국내반입 제약 등은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적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해외농업개발의 정책목표는 안정적 식량 확보, 국내농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와 진출국 간 상생적인 농업투자 모형 창출,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과 해외동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 등임.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정책방향은 주요 전략 곡물에 대한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해외식량자원 개발 역량을 확충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시스템의 확대 등으로 설정해야 함.
-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별·전략작물별 맞춤형 해외농업개발 전략, 시기별·단계별 전략, 자원개발 등과 함께 진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패키지 방식 추진 전략, 종합적인 해외농업개발 전담추진기구 수립, 해외농업개발 재원 마련,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기술 지원체계 마련, 진출국과의 외교 강화 및 해외지원 시스템 정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체계 수립,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에

대한 국내 수요처 확보 등임.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징으로 민간부문이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간접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해외농업개발도 곡물 물량 확보, 해외농업개발 투자 등 진출 모델에 따른 진출주체를 확보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또한 범정부적인 해외농업개발 전담 추진기구를 확립해야 함.
-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정보지원, 인력육성, 기술지원, 경영 및 법률 등에 대한 자문 지원, 국제협력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가 필요함.
- 해외농업개발이 국내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에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WTO 협정상에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한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감면 혜택, 수입통관에 대한 지원, 조세상의 특혜 부여 등을 금지하고 있고,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 반입 시 TRQ 제도 운용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낮아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들 자원 수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의 통산법 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과 연계하여 FTA 협정 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농업개발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일본은 1979~2001년 동안 브라질 정부와 협의 하에 브라질 세라도 지역에 브라질 국내 지역개발, 세계 식량공급 증대, 일본 식량안보 보장을 목표로 총 33만ha, 600호 이상의 농가입식을 목표로 세라도 농업개발을 시행하였음.

- 일본의 세라도 농업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세라도 농업개발 사업은 일본과 브라질 양국 간 관민합동 사업임.
 - 양국 관계기관 간 합의하에 조약체결로 사업 실시 계획
 - 입식지 조성에 있어 환경보전을 배려하고 토양보전농법 권장, 공동보류지 확보 등의 개발 수법을 적용
 - 세라도 개발사업은 3기, 22년 동안 684억엔의 용자액을 투입하고 8개 주에서 21개 입식지는 조성하여 34.5만ha를 개발
 - 사업결과 2001년 기준 브라질 대두 생산이 4,100만톤으로 증가하여 세계 2위 생산국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
 - 브라질은 대두의 약 2/3를 자국에서 착유하므로 세라도 지역에 많은 착유공장이 건립
 - 대두 이외에 면화(2000년 기준 브라질 총생산량의 80%), 커피(50%), 옥수수(40%), 과일, 소고기 등의 생산지대가 되고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음.

3.19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자: 이동필, 김경덕, 송미령, 김용렬, 김광선, 최경은, 박동진, 오준근
연구기간: 2008. 7 ~ 12

1. 연구의 목적

-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어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 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농어촌산업의 구조와 실태,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농어촌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지역특화산업 육성사례(충북 증평군 인산산업, 전북 고창군 복분자산업, 경북 상주시 곶감산업),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
- 선행연구, 2차 자료 분석,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 경희대, 한국농촌공사와 협동연구 추진, 다른 농식품부 정책과제들과 연계 추진하였음.

3. 연구결과

농어촌산업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내생적 산업발전과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어촌산업의 개념 채택

- 농어촌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산업의 범위

- 농·특산물의 가공 및 관련 서비스업
- 자연경관, 생태자원, 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등 서비스업
- 기타 유형자원(유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기타 무형자원(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지역의 실태

- 농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양질의 인력 부족, 도농 간 발전격차와 소득격차 심화

□ 농어촌산업의 실태

-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 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취업구조, 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낮은 창업율, 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취업기회 부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는 대부분 도농통합 시 지역에 집중됨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공간적 격차 발생

□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효과

- 고용증대에는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주민소득 증대 역시 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 생활환경 개선은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으나, 향토·신활력사업 등 산업육성정책에 의해 비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 및 산업화
 -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 농상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전략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전제조건
 -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체계의 수용, 정책 방향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향
 - 농어촌 지역특화산업의 필요성
 - 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 연관효과 증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지역특화산업 분야 선정의 강점

- 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구상(예시)
 -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창업보육 지원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증평 인삼, 고창 복분자, 상주 꽃감)의 시사점
 - 지역 유형별 상이한 산업구조를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필요
 - 생산체계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중요
 - 농산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육성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 중앙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위주
 - 지자체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 지자체 주도의 공모제는 가능하며, 자체적인 계획 수립 가능
 - 평가는 성과중심의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간의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소통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농어촌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 지역의 현황과 여건분석
 - 7대 농어촌산업 발전 전략(예시) 활용
 - 농어촌산업 육성 추진 체계 구축: 추진조직, 추진 역량 강화 방안
 -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 성과지표
 - 사업비 집행실적, 인구, 고용, 사업체수, 매출액, 수출액, 방문객, 가동율, 교육횟수
- 시·군 추진주체
- 전담조직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시군 간 연계를 위해 연계발전 추진단을 구성. 자문체계는 정책목표달성형 자문조직, 연계발전추구형 자문조직, 특성화발전추구형 자문조직으로 다층적으로 구성
-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칭 지역특화산업육성법 도입

3.20 ‘창조적 광역발전’시대 농식품부 사업의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자: 송미령, 이동필, 성주인, 김정섭, 박주영, 윤병석
연구기간: 2008. 7 ~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논의를 토대로 농촌지역 여건과 농촌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발전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적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농촌정책 체계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창조적 광역발전’ 개념이 기초생활권 정책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한다.
- 국토 공간의 광역화와 농촌지역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 기존 농식품부 사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 정책 사업의 광역화 및 체계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 농식품부 농촌 정책 사업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정책적으로 ‘창조적 광역발전’ 시대의 농촌정책의 의의와 과제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광역경제권 정책에서는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지역 간에 상호작용이 확대되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전국의 기초생활권 수준에서 볼 때 이러한 광역적 연계권이 균일한 양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광역화로 인한 파급효과도 상이하다는 것을 제3장에서 주목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초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유형화, GIS 맵핑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식품부 정책 사업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관련 정책 환경 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농식품부의 300여 개 정책 사업을 예산 출처, 사업 내용별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 과제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동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참고하고자 제5장에서는 몇몇 국가들의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잉글랜드),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광역적인 지역계획권역을 설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통합적 농촌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연합(EU)의 LEADER 프로그램과 실행조직으로서 LAG 운영, 영국의 분권화된 지역개발기구 RDA와 포괄적 예산제도 도입, 일본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과 정책군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3. 연구결과

제6장에서는 위의 논의들에 바탕을 두어 농식품부 농촌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농촌 정책 환경 변화에 걸맞게 농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주요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세부 정책사업들을 기획하고, 지역 내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 또한 컨설팅,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부처가 수행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관련된다. 행정구역상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던 농촌정책의 대상을 기초생활권 단위의 정책 재편에 따라 시·군 기초생활권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경지 규모나 농가 비율, 농업 관련 사업체 분포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농촌정책의 대상은 161+2개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140개 도농복합시와 군이 기본적으로 해당한다. 그러나 농촌 특성

이 강한 군 지역뿐 아니라 도농복합시의 경우도 다수 읍·면은 전통적인 농업 관련 지표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차별적인 농촌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권 단위에 그치지 않고 읍·면 단위까지 고려하여 농촌정책 대상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식품부는 기초생활권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책군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계획수립 절차 및 방법, 평가지표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우수사업모델, 세부 사업별 매뉴얼, 컨설팅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 정책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실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초생활권 정책의 목표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하는 ‘기본적 삶의 질 목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수준을 의미하는 ‘바람직한 삶의 질 목표’, 현재 추진되는 정책의 단기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유형별 정책관리 목표’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과학적 농촌정책 추진의 초석이다.

넷째, 성과관리형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평가절차를 확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성과관리형 평가가 중요시되는 만큼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도 많으며, 전문적인 평가 지원 기능을 수행할 실무형 상설 조직도 필요하다.

다섯째, 2010년부터 적용되는 변화된 정책 추진체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제도를 새로이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생활권 계획은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어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예산 배분과 연동되는 계획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수립제도 확립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농촌계획제도 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섯째, ‘삶의질향상특별법’ 운용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현재의 법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균특회계 재편에 즈음하여 사업영역 재정비, 계획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개발 총괄법을 새로 정비하는 등의 법체계 정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식품부 내부의 조직 정비, 지원 조직의 육성 등이 시급하다. 현재 농촌정책국의 업무는 정책 컨텐츠 중심으로 과별 분장을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권 정책의 지원을 고려하면 정책의 기획-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 등과 같이 정책 과정별 협업 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그에 앞서 (구)농림부와 (구)해양수산부 조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관련 사업과 어촌 관련 사업도 분산되어 있으나, 금번 기초생활권 사업 통폐합에 따라 사업이 통폐합된 만큼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구상하여야 한다. 기초생활권 대상의 농촌정책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LAGs나 일본의 NPOs와 같이 민간 전문가 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을 매개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 컨설팅과 모니터링,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정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농식품부 농촌정책이 요구받고 있는 긴급한 도전에 대해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제 더 나아가 보다 정교하게 농촌정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초생활권 정책에 대한 정교화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그 일환으로 농촌 서비스 기준 설정 연구, 삶의질향상특별법 제2기 계획 수립 연구 등은 무엇보다 중요한 후속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21 초·중등학교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교과서 개정 방안 연구

연 구 자: 최경환, 마상진
연구기간: 2008. 7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등학생들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급 교과서를 심층 분석하여 사실 왜곡,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방향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금후 교과서 개발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검토, 교육내용 체계화, 교과서 분석, 비농업분야 및 외국의 사례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초·중등 교과서 재·개정 제도 검토를 통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및 수정 보완 체계가 수시보완 체계, 검정 교과서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교과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 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 연구에서 체계화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교육의 6개 내용영역은 ①농어업·농어촌의 기능과 가치, ②농수산물의 생산, ③농수산물의 가공과 유통, ④농수산식품의 가치와 안전성, ⑤농어업과 자연환경, ⑥농어업정책이었다. 현행 초·중등 교과서 분석결과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내용을 많이 다루는 교과가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이었고, 교과

별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 주로 반영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3. 연구결과

이러한 연구 성과물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건교육과 같은 비농업분야 사례, 일본의 食育, 미국의 AITC와 같은 외국 사례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교육내용의 초·중등학교 교과서 반영방안으로 ①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교육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반영, ②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화 및 보급, ③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 ④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교재 개발, ⑤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3.22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연 구 자: 박대식, 최경은
연구기간: 2008. 7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최근 현황을 우리와 비교·분석하고, 모범적인 정책사례를 정책대안으로 검토하며, ②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념적 기반을 구축하여, ③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 파악, ②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국내외 비교분석, ③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과 삶의 질 향상 방안 제시 등이다.

3. 연구결과

- 농업 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경영주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 농업 경영주는 60세 이상이 78.5%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여성농업인은 농업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경영주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못하다.
-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격차가 48%로 나타나고, 농지원부 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이 19.2%, 전체 후계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13.7%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주요 문제점
 - 관련법에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가족경영협약 모델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농가)경영협약의 추진이 미흡하고, 홍보 및 교육도 부족하다.
-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과 경제·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0년 12월에는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일본에서는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규정 및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프랑스 농업회사법인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공동조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있다.

- 벨기에는 소유계약서 작성, 농지임차의 경우에 양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리하며, 공동구입 자재는 공동 소유한다.
 -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경영주는 부인이 가족농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조세 부담의 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덴마크의 경우 부동산 권리 증서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공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가족농업 보조자로서 여성농업인은 세제상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이탈리아에서는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고, 가정근로자(domestic workers)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스페인의 경우 협력배우자의 기여 부분이 아직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이혼 또는 파산 시 협력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
-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에 관해서 국내외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거나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아주 낮다.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유럽보다 심하다.
 - 가족경영협약의 경우 일본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 EU국가에서는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이 재정의되어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혼인을 통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 프랑스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럽의 경우, 협력배우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의 국내·외 비교
 - 한국 및 일본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이 아직 없다. 다만, 가족경영협약(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EU 국가들의 경우,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때, 농지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로의 계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대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 프랑스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방안으로는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의 1/2 이상' 또는 '1,200시간 이상의 농업노동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경영주(공동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있다.

- 공동경영주(공동농업경영주)의 개념 정의
 - 공동농업경영주는 '배우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 또는 남성'을 지칭한다. 즉, 공동농업경영주는 '협력배우자의 자격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 공동(농업)경영주의 인정 기준 설정
 - 공동(농업)경영주 인정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1개의 필수요건과 여러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필수요건: 연간 90일 이상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농업인확인제도'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
 - 선택 요건:
 - ① 자신명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② 자신명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농산물거래실적이 연간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가족(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한 자
- ④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⑤ 농지원부제도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⑥ 후계농업인으로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1개 절 정도를 할애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지소유, 농업경영 참여, 수익분배 등에 따라서 ‘농업인’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가족경영협약의 확산 및 내실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인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족경영협약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약 체결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가족경영협약’ 관련 현장전문가의 양성 및 체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 농가경영체 등록제의 개선

- 주민정보에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다.
- 농가경영체 등록양식을 개선할 때, 공동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 사항도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향후 제정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농지원부제도의 개선
 - 현행 농지원부에는 농가주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양식을 개선함에 있어서 농가구성원을 공동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 과세 및 재산소유제도의 개선
 - 부부의 재산 형성에 여성농업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자산의 공동명의 또는 부인명의 이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를 추진한다.
 - 결혼 후 취득한 농지, 주택 등의 자산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를 확립한다.

- 농업인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20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업인 확인제도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3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개최

연구자: 정기환, 허 장
연구기간: 2008. 1 ~ 8

1. 연구의 목적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는 2008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6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KINTEX에서 한국농촌사회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회의 유치에서 준비, 개최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목적은 첫째, 세계화 과정에서 당면한 한국의 농업과 농촌문제를 재조명하고 정부 당국과 사회의 관심을 모아 한국 농업과 농촌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등 아시아 문순지대의 소농경제, 농촌문제를 집중 조명하여 한국 및 아시아의 농업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다. 셋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빈곤과 기아, 환경문제 등 지구적 관심사항을 집중 조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직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행사대행 전문기획사를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세션 구성 작업과 발표 희망자로부터 논문 초록을 접수하는 일은 대회 프로그램위원회가 세계농촌사회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대회의 주요행사로 개회식, 전체회의 및 기조연설, 세계농촌사회학회 이사회, 논문발표 세션, 특별주제 세션, 환영리셉션, 환영만찬, 환송만찬, 그리고 현장견학이 실시되었다. 대회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풍요로운 농촌 발전 방향의 모색 (Envisioning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으로 정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농업과 농촌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유도하였다.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8개국에서 441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현지견학 1일을 제외하고 4일간 모두 77개의 세션이 운영되어 총 268명의 발표자가 24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 특별포럼으로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방안”을 운영하였다. 기조연설로는 한국의 최양부 박사(전남대 교수), 미국의 윌리엄 프리들랜드 교수(캘리포니아 대학), 일본의 히로유키 토리고에 교수(와세다 대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산티 슈폴 교수(크와줄루 나탈 대학), 그리고 브라질의 살레테 카발칸티 교수(페르남부코 대학) 등 모두 5명이 연사로 나섰다. 대회기간 중 1일간의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화와 양평, 이천, 파주, 구리/가평, 아산 등 6곳을 다녀왔다.

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24%, 만족 48%, 보통 22%,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0%로 집계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4. 농업관측정보연구



4.1 KREI-COMO 개발 및 축산분기모형 업데이트

연 구 자: 김명환, 권오복, 허덕, 이대섭, 김태훈, 박기환, 김경필, 정민국, 조영수, 최병옥
 연구기간: 2007. 7 ~ 2008. 5

1. 연구의 목적

농업관측 품목모형 KREI-COMO(KREI-Commodity Model)는 29개의 관측사업 대상 품목의 수급 분석을 위해 개발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이 있었지만 품목간 생산 및 소비의 대체관계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수입품과 국내산 간의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된 국내의 농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실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KREI-COMO 및 축산분기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의 식품농업정책연구소(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의 주요 개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품목별 분석모형(KREI-COMO)을 개발하고 축산분기모형의 보완 및 품목확대를 주 연구내용으로 한다.

3. 연구결과

New KREI-ASMO 2008은 61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시경제변수와 투입재 가격 그리고, 농업총량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95개의 방정식과

1,76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New KREI-ASMO 2008은 OLS 동태적 연립방정식체계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엑셀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추가적으로 부록에서 엑셀모형의 사용방법이 제시되었다.

한국농업소개 편에서는 각 품목별 계량경제학적 모형개발을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였다. 품목별 행태방정식 추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거시, 미시경제학이론과 생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형구조개념이다. 부록3에서 각 품목별 행태방정식들과 모형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부록1에서는 수요, 공급체계에 있어 시장청산조건을 설명하였다. 각 개별 방정식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형표기문제는 Ramsey Reset test, 자기계열상관문제는 Breusch-Godfrey Serial Correlation LM test, 파라미터의 편의문제는 Hausman test, 이분산문제는 White heteroskedasticity test를 사용하였다. 각 방정식은 Newey-West HAC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ce Covariance)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변수정의는 부록2에 소개하였다.

각 품목별 탄성치들은 엑셀모형의 Coefficients 워크시트에 수록하였고, 보고서에서는 4장에 수록하였다. 수요탄력성에서는 가격탄력성이 -0.234 에서 -0.830 로 나타났으며, 곡물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낮고, 낙농제품의 가격탄력치가 -0.830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가격탄력성의 순서대로 곡물이 가장 낮은 0.251 그리고 낙농제품이 가장 높은 1.162 로 나타났다.

New KREI-ASMO 2008은 각 부문별로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거시모형부문 ②투입재 가격부문 ③재배업 부문 ④축산부문 ⑤농업총량부문. New KREI-ASMO 2008은 한국농업의 전체 품목을 다루며 농업정책분석을 목적으로 한 농업부문에 한정된 simultaneous, non-spatial 한 부분균형적인 계량경제학 모형이다. 모형전체의 구조는 1장 그림2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2의 위쪽은 축산부문을 나타내고, 밑부분은 재배업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의 왼쪽부분은 수요를 오른쪽 부분은 공급을 설명한다. 한국농업정책 분석틀은 정통적인 deterministic 방법을 이용하여 10년 앞을 예측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거시경제변수들은 Global Insight, Inc의 예측치를 사용하였고, 날씨에 관한 예측치는 과거 5년 이동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축산분기모형은 총 5개 품목(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낙농)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축산분기모형은 OLS 동태적 연립방정식체계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EXCEL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3장에 엑셀모형의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4.2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허 덕, 김현중, 김진년, 전상곤, 이명기
연구기간: 2008. 7 ~ 9

1. 연구의 목적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유 및 젖소 생산비에서 사료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사료비 상승은 낙농가의 경영 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현재 낙농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이루어졌다.

2. 연구개발 내용

낙농가 경영수지 변화 분석을 위해 사료가격 및 원유가격 변화와 젖소 산지 가격 변동 그리고 낙농 경영수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본, 미국, 유럽 등 외국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에 대해 개괄하고, 낙농가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 사료 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상승, 곡물 수출국들의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곡물 확보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젖소의 또 다른 사료원인 알팔파, 면실 등 조사료 가격도 2008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61%, 103% 상승하였으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TMR) 가격 또한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유(原乳) 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경우 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2008년 8월 16일자로 유대(乳代)를 20.5%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낙농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물 수입원인 초유폐기 암송아지, 노폐우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유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은 2007년 기준 55%이다. 그 중 농후사료가 21%, 조사료가 14%, TMR 사료가 20%를 차지한다. 낙농가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료비 상승률만 적용하여 보아도 2008년 생산비는 2007년보다 20%정도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젖소 두당 조수입은 증가하지만 생산비 증가로 순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낙농경영안정대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경영안정 정책으로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료수급 정책으로 낙농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사업,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 확대사업,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업,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합 대책 사업,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이해도 증진 사업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생산성 향상정책과 유통개선 정책 그리고 우유 소비 확대 정책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미국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외 정책으로써 유제품 수입을 억제하는 국경조치(border measures)와 유제품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둘째, 우유 가격을 통제하는 연방 그리고 주 유통명령제도, 셋째, 농가 수취 가격 지지를 위한 유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 제도가 그것이다. 그 밖에 최근의 환경 개선, 토양 보전, 친환경 농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강화가 낙농 산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PA)을 기반으로 하는 EU의 낙농정책은 크게 역내 시장 지지, 낙농가 직접지불, 교역 수단의 활용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과는 별도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보조 정책 역시 EU 낙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편, 낙농품의 EU 시장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EU 시장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낙농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낙농가 경영수지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생산비 절감 방안 중 농후 사료비 절감 방안으로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곡물 비축제도에 사료곡물을 추가하여야 하고, 수의중심의 컨설팅을 종합적인 컨설팅 체계(one-stop service)로 개편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사료 비용 절감대책으로 첫째,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조사료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셋째, 청보리 이외의 사료작물에도 청보리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넷째,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조사료 사업의 연계를 통한 조사료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조사료 수입쿼터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료의 쿼터 배정기준을 소 사육두수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수입 쿼터배분기관에 영농조합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쿼터물량 축소계획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방법으로는 젖소개량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

원유가격 현실화 방안으로는 우유 소비 확대 대책 강구, 학교 급식 등에 국산 원유를 사용한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공급 지원, 원유의 용도별·계절별·성분별 가격차별 도입 검토, 원유품질 고급화, 낙농단지 조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외소득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체험목장 또는 휴양목장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진과 유제품 자가 생산(수제 유제품 생산) 장려 등을 제안하였고, 낙농 헬퍼 육성체계도 확립되어야 한다.

4.3 화옹간척지 발조성 사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자: 신용광, 김창길, 박영구, 윤종열, 허윤진, 성진근, 손용만, 김현태
 연구기간: 2007. 10 ~ 2008. 9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래 간척지의 영농 수요를 예측하고 간척지 발조성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내외 중장기 농산물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을 통해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둘째 간척농지에 재배 가능한 발작물의 검토 및 재배목표를 설정하며 셋째 화옹간척지의 영농단지 활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화옹간척지의 개발현황과 토양특징 및 영농단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을 검토하였다. 화옹간척지는 항구 및 대단지 소비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산물 수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등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미사질토에 가깝고 습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인공적인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화옹간척지를 대상으로 한 영농단지개발 기본방향은 과수단지, 시설채소와 시설화훼의 수출단지, 마지막으로 식량작물과 축산 및 신재생바이오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각 단지별 경제성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화용간척지 밭작물재배에 따른 단지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척지 영농단지 재배여건이 안정화될 경우 ha당 농가소득은 시설화훼단지가 163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설채소단지가 103백만원, 과수단지가 30백만원, 식량작물단지, 축산단지, 신재생바이오단지가 2~10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ha당 수입대체효과는 과수단지에서 가장 높은 10백만원으로 전망되며 축산단지 9백만원, 신재생바이오단지 4백만원, 식량단지 3백만원의 순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용간척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재배면적을 배정한 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농산물 생산량과 산출액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정책, 식량자급, 수입대체 목표를 고려한 소득최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Ⅲ로 분석되었으며 영농조건이 안정화되면 연간 680억원(ha당 30백만원)의 농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설투자 이후 4차 연도부터 농가소득이 투자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대체효과는 전체 119억원이며 과수단지의 수입대체효과가 7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류비와 환율변화에 따른 화용 간척지의 농가소득과 수입대체효과를 살펴보면 농가소득은 유류비가 10% 상승할 경우 ha당 29백만원으로 하락하고 유류비가 10% 하락할 경우 ha당 31백만원으로 상승한다. 화용 간척지의 수입대체효과는 유류비와 환율이 각각 10% 상승하면 수입대체금액이 연간 119억원에서 131억원으로 12억원의 추가적인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4.4 파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

연구자: 정은미, 김원태, 김수림, 윤선희
연구기간: 2008. 3 ~ 7

1. 연구의 목적

농산물 단일품목으로 수출액이 가장 큰 파프리카는 수출농업의 활로를 연 대 표적인 품목이다. 그러나 수출을 비롯하여 파프리카 생산, 유통, 소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파프리카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파프리카의 생산, 소비,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여 농업에서 차지하는 파프리카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일본, 중국 등 수출 시장의 동향을 검토하여 파프리카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는 파프리카의 생산 및 소비동향, 유통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였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일본, 중국의 시장 동향 및 수출 전략 을 검토하였다. 또한 파프리카 생산·유통·소비·수출의 실태를 파악한 후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매 확대방안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농업부문에서 파프리카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파프리카 관련 정책 수립에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관련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파프리카 자조금이 수출과 국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의 역할과 자조금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파프리카 생산 동향

파프리카는 1990년대 정부보조로 유리온실을 비롯한 시설재배의 생산기반을 갖추면서 고부가가치 수출 작물로 도입되었다. 파프리카가 안정적인 수출로 채소류 중 고소득 작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7년 재배면적은 2000년 대비 3배 증가한 343ha, 생산량 3만 2,250톤에 이른다. 파프리카 재배면적을 작형별로 살펴보면 겨울작형은 경남, 전남북의 평지에서 206ha, 여름작형은 강원, 전북, 경남의 고랭지에서 34ha가 재배된다. 시설유형은 유리온실 101ha, 비닐온실 241ha로 비닐온실이 2.4배 많다. 파프리카가 고온성 작물이므로 겨울철 난방효율이 높은 유리온실의 경영이 유리하다. 소득은 유리온실이 비닐온실에 비해 여름작형 1.3배, 겨울작형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프리카가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수요가 충분히 존재해야 하는데 국내 수요 확대는 생산성 향상으로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설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량 조절을 위해 재배형태별·시기별 재배 전망 등 예측가능한 정보가 필요하고 상거래 관계자 상호간 의견조율을 통해 거래의 지속성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필요하다.

나. 파프리카 유통 및 소비 현황

국내유통은 2001년부터 파프리카가 도매시장에 진출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피망의 대체품목으로 인식되며 거래되었다. 최근 2~3년 동안 파프리카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파프리카의 유통량은 국내 시장과 수출 비중이 각각 55%, 45%이며 국내 시장 유통량의 48%가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고 52%는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는 직거래로 조사되었다.

전국 8개 대도시의 주부 610명을 대상으로 파프리카 구매행태를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90%가 파프리카를 구입한 경험이 있고 구입횟수는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비중이 59%로 높은 편이지만 아직 대중적인 농산물로 인식

되기 이전인 기호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소비자의 1회 평균 구입량은 3~5개를 구입하며 구입금액은 4천원 이하가 가장 비중이 크고 적정 구입가격은 개당 731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파프리카를 구입하는 이유는 건강과 맛, 다른 요리와 잘 어울리는 특성 때문에 구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며 소비 형태는 주로 볶음요리용, 생과, 샐러드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51%로 높은데 30~40대 연령층이 특히 높다.

다. 파프리카 수출 현황

우리나라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증가와 안전성 관리 강화로 수출량은 2000년 7천 톤에서 2007년 1만 4천톤으로 2배가 증가하고 수출액은 2000년 2,862만 달러에서 2007년 4,715만 달러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일본 수출 수송이 항공에서 선박으로 전환되며 물류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에서 한국산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산과 뉴질랜드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여 일본 도소매업체가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산 파프리카의 생산비용이 여전히 높고 생산비를 절감하더라도 높은 프리미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산 파프리카가 수입물량이 증가한 만큼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우수한 품질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향후 일본 파프리카 소비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산비를 더 낮추어 파프리카 단가를 낮춰야 하고 일본 소비자의 소비 성향에 맞는 파프리카 크기(M, S) 공급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만 파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대도시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산 파프리카의 생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가격은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값싼 중국산 파프리카가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있다.

라. 파프리카 산업 발전 방안

파프리카가 어떤 생산조건에서도 순조롭게 생산될 수 있어야 국내외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게 되며 안정적인 생산을 기초로 유통과 소비가 원활히 연계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측면에서 파프리카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는 생산기술 노하우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단위당 단가를 낮추려는 생산농가의 경영 마인드,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등 유통비 절감과 생산기술의 향상이 필요하다. 소비측면에서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하므로 건강에 좋은 파프리카 성분과 요리법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출측면은 일본에서 네덜란드산과 뉴질랜드산이 경쟁하며 한국산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받는다. 일본이 국내 파프리카 수출의 99%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때 일본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이 재빠르게 변화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는 국내외 시장개척, 소비촉진, 수급조절 등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 수급체계와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시장개척과 정보 제공, 생산농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한 유통정보 제공, 수급조절 사업 등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4.5 농업전망 2009

연구자: 박동규, 김연중, 송성환, 채광석, 조영수, 이대섭, 박상미, 송주호, 최세균, 이원기, 남상원, 기운도, 황의식, 조용원, 신완식, 김정호,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김성훈, 조민지, 한재환, 주현정, 문주석, 이계임, 황윤재, 손은영, 조용성, 김창길, 심교문, 이상민, 한혜성, 강창용, 박현태, 유찬주, 채광석, 오내원, 권오복, 이용연, 송미령, 김정섭, 박주영, 김용렬, 김광선, 최경은, 김태훈, 최익창, 승준호, 박미성, 김용택, 김정승, 양승룡, 임송택, 허 덕, 김현중, 이정민, 이형우, 우병준, 채상현, 김동욱, 김배성, 천인석, 안명옥, 허정희, 정은미, 김원태, 김수림, 강민수, 지현서, 신용광, 김재한, 장정경, 윤종열, 박영구, 김재환, 장철수, 김영단, 석현덕, 임종환, 권진오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농업전망 2009”에서는 농림업 부문을 둘러싼 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와 동향,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주요 품목의 중장기 수급을 전망하였다. 매년 초 개최되는 농업전망의 목적은 향후 농림업 부문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농림업 생산자, 소비자, 정부와 농림업 관련 종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금년에도 매년 이루어지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 이외에 농림수산물부의 2009 농정방향, DDA·FTA 협상동향과 전망, 농업의 활로, 식품산업과 안전성, 환경과 에너지, 경영안정과 농촌발전 등을 다루었다.

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가. 2009 농업·농가 경제전망

- 2009년 농가호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0만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후인 2019년에는 2009년보다 16만 5천호 줄어든 약 103만호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309만명에서 23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용지, 비농업용 등으로 전용에 의해 경지면적은 2009년 174만 2,000ha에서 164만 5,000ha로 감소할 것이지만 농가호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호당 경지면적은 2009년 1.46ha에서 2018년 1.60ha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09년 농업생산액은 2008년보다 1.3% 감소한 37조 4,110억원으로 전망된다. 2008년 대비 쌀, 과실류, 축산은 감소한 반면, 채소류 생산액은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액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39조 8,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3,130만원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2008년보다 1.2% 증가한 3,167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과 이전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4,177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DDA·FTA 협상동향과 전망

□ DDA 협상동향과 전망

- 2001년도에 출범한 DDA 협상은 2008년도에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모델리티 수정안이 4차례나 제시되고, 7월에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는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렬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진전되었다.
- 농업분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협상의 중요 골격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에 관한 내용도 거의 확정되었다. 지금까지의 DDA 세부원칙의 내용을 보면 개도국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DDA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농업분야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개도국에게 적용되는 긴급수입관세제도(SSM)의 발동조건과 기간, 면화보조금 감축문제, 민감품목에서의 TRQ 신설 여부,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적용조건 등이다.
- 2009년도에는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동안 기술적 협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 간에 농업분야와 비농산물 분야 등 전체적인 부문 간 협상에서 균형을 이루는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FTA 협상동향과 전망

-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 중에 있고, 미국과는 2007년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 2007년부터 시작된 EU와의 FTA는 2008년까지 7차례 협상이 진행되어 쟁점이 많이 타결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에 협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 3월까지 13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캐나다는 한-미 FTA 타결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 9월 1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본 상태이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Gulf Cooperation Council: GCC)과의 FTA는 2008년에는 협상이 개시되어 10월에 상품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중국과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 아직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 이 밖에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콜롬비아, MERCOSUR, 러시아 등과의 FTA도 준비 중에 있다.

다. 농업의 활로

- 정부는 최근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수출을 통해 우리농업의 활로를 찾는다는 전략이다. 수출은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시키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며, 우리제품의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농식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적극적인 수출정책이 필요하다.
- 100억불 농식품 달성을 위한 과제로 선진국형 수출기반 조성, 수출의 성장동력 확충, 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수출주체의 역할 재정립 등 4가지 분야로 정리하였다.
- 또한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양돈 산업과 같은 조직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적정규모의 R&D 투자가 필요하다. 적정규모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연구는 명확하지 않으나, 선진국들도 농업GDP의 2배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R&D 투자 비중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7%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러한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망된다.
- 농업부문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의 성장동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라. 식품산업, 안전성

-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업체의 규모화 및 시장 집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식재료 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입 식재료의 국내 시장 진입이 늘어나 식재료 시장의 국경이 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 효율성 강화 및 시장 실패 완화 중심의 정책 집행 둘째,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셋째, 해외 식재료 시장의 적극적 공략 넷째,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연구 확대 등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GM농식품의 식품으로서 안전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크게 염려하며 표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소비자들이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GM농식품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기능성식품 시장은 매년 3%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농산물 건강기능식품)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은 비만, 면역력 증진, 아토피 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법의 목적에 부합되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연계가 가능한 “농산물품 질관리법”으로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의무표시는 기반 조성 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권장표시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쇠고기 축종표시, 육가공품·배추김치 표시대상, 과태료 수준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기반 확충, 표시가이드라인 제시, 충분한 교육과 홍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 환경, 에너지

-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정립과 추진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방법에 있어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며, 재원조달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지구온난화로 세계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1904~2000년까지 관측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이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말(2090~2099)에 세계평균기온은 1980~1999년에 비해 1.1~6.4℃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1971~2000년에 비해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농업은 기후의존적인 산업이므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

- 계별·분야별 추진내용과 역할분담을 담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대체에너지 확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을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 교토의정서 상 이산화탄소 저감의무 수행 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를 위해서 국산 원료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채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 기술개발의 목표를 정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원료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확대와 홍보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간 짜임새 있는 협조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 개발 추진력을 제고하여 개발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자원순환농업은 축산, 경종, 일반 생활,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원순환농업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역의 지역농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지도자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 내의 모든 관련 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복합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바. 경영안정, 농촌발전

- 농업경영의 불안정은 경영규모가 크고 전문화된 전업농, 시장개방 폭이 크고 자본투자가 많은 시설원예와 축산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관리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격안정을 위한 기존의 수급조절, 출하조절사업 이외에도 선물시장의 확대·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재해보험의 확대시행이 필요하며, 셋째,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8년에는 환율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1.3% 상승하였다. 이러한 농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불안정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①대체농자재 활용, ②에너지절감형 영농, ③농자재공동 구매, ④농자재가격 안정기금 운영, ⑤적정시비 및 살포 등을 통해 농업인의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자재 산업구조의 합리화, 원재료의 공동 구매, 농자재 수출 확대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새 정부 지역정책 틀 중 하나로 기초생활권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시·군은 지역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①농촌적 자원을 활용해 소득기회를 제고시키는 정책군 부문에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7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②포괄보조금 재원 중에서도 5년 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기획·추진하며, ③지역 주체 확립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학습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지역특화산업을 통하여 농어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생적 역량에 의한 지역·주민주도형 발전 추구, 둘째, 민·관 협동 농상공(農商工) 지역연대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셋째, 차별화된 자원 발굴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넷째, 특성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간 연계 발전, 다섯째, 지방정부 주도의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개발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부기업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 쌀·곡물

- 2008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9.9% 증가하여 2009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32만 5천 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시장공급량 증가로 14만 5천~14만 9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92만 9천 ha로 예상되며,

- 품종별로 조생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중/중만생종은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쌀 수입량은 의무도입량 이외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DDA 협상에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중도관세화하는 것이 관세화 유예보다 의무도입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화유예를 하면 중도관세화 때보다 의무도입량을 매년 10만 2천 톤 더 도입해야 한다.
 - 2008년산 콩 생산량은 13만 2,674톤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하였으며, 2009년 1월 중순부터 4월까지 콩 가격은 현 수준(백태 상품 3,472원/kg)을 유지하는 보합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산 콩 재배의향면적은 7만 6,657ha로 전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1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콩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만 고려하면 2019양곡연도에 재배면적은 8만 6천 ha, 생산량은 15만 9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세계 금융위기와 연이은 경기하강, 유가하락, 달러강세 등의 요인으로 곡물 수요가 급감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09/2010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으로 곡물수요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2006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는 국제곡물수급에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는 세계경제성장률, 바이오연료 사용량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국제 옥수수, 유지작물 그리고 밀에 대한 중장기(2008/09~2017/18년)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였다. 전망결과, 2009~2010년 세계경기침체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은 톤당 185~189달러, 대두를 포함하는 유지작물 가격(가중평균)은 423달러, 밀가격은 206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 다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의 쌀 구매 및 판매특성 분석결과 소매가격의 변화는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산지가격은 소매가격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선행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다양한 가격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축산

- 2009년은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수입 재개로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소비 심리 회복으로 쇠고기 소비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료비 상승과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육우 고기 수요 감소로 최근 비육용 젖소 송아지 가격이 급락하였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사료비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육우 고기 수요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전년 모돈수 감소로 인하여 2009년 돼지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등으로 2009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며, 수요 감소로 돼지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로 2009년 계란 수요량보다 생산량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계란 산지가격은 2008년보다 하락한 1,023원으로 전망된다.
-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육계 가격은 전년보다 0.3~1.9% 상승한 1,572~1,597원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수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수출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토끼·산양·오리고기 등의 기타가축 육류 생산량은 2007년 기준 국내 육류 생산량의 9.8%로 생산과 소비 활성화 시 일반 육류 시장에서의 주요 축산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오리, 꿀벌, 산양, 사슴의 축종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오리는 계열화 및 원종오리 도입 등 육계 산업과 유사한 형태로의 성장을 통해 주요 축종으로 도약발전시켜야 하며, 꿀벌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규모화, 신시장 개척, 식품안전성 제고 등으로 경쟁력 확보 및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양은 식육중심의 생산·유통구조 개편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지속적인 성장이 유도되어야 하며, 사슴은 녹용산물의 유통구조 합리화와 부가가치 증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생산농가의 지속적인 운영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과일·과채·채소

- 2009년 과일 재배의향면적은 2008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2008년과 비슷한 223만톤으로 전망된다.
-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도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아, 과일 생산액은 2008년보다 2% 가량 감소할 전망
- 과채 2009년 품목별 재배면적은 2008년보다 수박은 7%, 오이, 딸기는 1~3% 감소하지만, 호박은 4%, 토마토, 풋고추는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엽근채소류 재배면적은 2008년보다 5% 감소한 8만 9,586ha로 전망되며, 양념채소인 고추와 마늘은 2009년 재배면적이 2008년보다 1% 증가한 11만 2,253ha, 마늘과 대파 재배면적은 2008년보다 6%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업·산림자원

- 2009년 밤 생산량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배면적 감소와 밤나무 노령화로 전년보다 감소한 약 6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09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신규 접종량의 감소 등 원목재배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톱밥배지 방식에 의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표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만 톤 정도로 전망된다.
- 임산 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임가등록제 시행, 직접지불제 시행, 임업경영체 활성화, 그리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 지구온난화로 산불과 호우 그리고 병해충 창궐로 인해 산림생태계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동을 고려하여 조림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난대 및 아열대지대의 유용수종을 탐색하여 기후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산림부문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산림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숲의 형성기원에 따라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산림형 도시숲과 신규로 조성한 공원형 도시숲으로서 그 역할과 구조 및 형태가 다르다.

- 특·광역시 16개 주요 도시숲에 대한 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식물의 종은 풍부하여 야생동물의 생육에 유리하나, 훼손과 방치로 인해 숲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며 특히 숲 경계(임연부)의 손실이 심각하여 숲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도시숲의 조성은 ‘숲의 시작일 뿐’이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을 가진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가꾸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도시숲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6 농업 · 농촌경제동향

연구자: 김연중, 송성환, 승준호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본보고서는 매분기마다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와 관측품목들의 가격과 생산 동향을 요약 전달하고자 발간된다.

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가. 국제경제 동향

2008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의 둔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다. 2008년 미국은 전년 대비 1.4% 성장에 그친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9.7%, 일본 0.5%, 유로지역은 1.2% 성장하여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달러화는 2008년에 미국 경제의 부진한 실적과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이어간 반면, 유로화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원유가격은 2008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월 배럴당 140달러 대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 전망 등의 원인으로 급락하여 12월 말에는 40달러 내외로 하락하였다.

나. 세계농업 동향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22억 2천만톤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쌀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억 3천만톤으로 전망되며 소맥과 옥수수는 각각 6.8억, 7.9억톤으로 전망된다.

다. 국내경제 동향

2008년 1~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1/4분기 이후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3/4분기 기준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3/4분기 무역수지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서도 수입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라. 농촌경제 동향

2007년 1/4분기 이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8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되었다.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1월말 기준 약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은 11월말 기준 171억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다.

마. 특별주제

1/4분기 호에서는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다루었으며, 2/4분기 호에서는 소비자의 과일과채 구매행태 분석, 2008/2009 국제유가를 전망을 다루었다. 3/4분기 호에서는 쌀 관세 화유에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추진과제를 다루었으며,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를 분석하였고,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수록하였다.

4.7 농업관측월보 채소

연구자: 신용광, 박영구, 김재한, 윤종열, 장정경, 김재한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 농업관측(채소)은 채소류 수급과 가격 전망 정보를 관측월보로 제시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 관련기관 등이 품목 선택 등 보다 합리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또한, 수급안정 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채소류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 농업관측(채소)은 3월~12월, 총 10회에 걸쳐 채소류(배추, 무, 당근, 양배추,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쪽파)의 재배면적, 출하면적, 예상단수 등을 조사하여 국내산지 출하량을 제공하였다. 또한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고추, 마늘, 양파, 당근, 김치 등에 대한 현지상황(수출가능물량, 중국산지 가격 등)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내의 전체 수급물량을 추정하고 이를 매월 월보에 게재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농업인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패널 조사를 4회 실시하였다.
- 이와 같은 농업관측(채소)을 위하여 품목별 표본농가와 산지 모니터를 대상으로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집

계하였다. 또한, 해외모니터는 중국산지 모니터와 국내 수입업체 등을 선정하여 중국산지와 국내 유통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품목별 수입수요함수를 개발함으로써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 2008년에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채소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5회의 속보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농업인 및 농업관계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3. 연구결과

- 농업관측(채소) 3월호에서 배추·무·대파·쪽파·양배추 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특히 태풍피해가 심했던 감자·당근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고추·마늘·양파가격은 2007년산 재고량 증가로 가격 약세를 전망하였다. 2008년산 고추·양파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마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4월 채소 가격은 배추·무·당근·감자·대파가 저장량과 산지 출하량 감소로 강세가 지속된 반면, 양배추·쪽파는 출하량 증가로 약세가 전망되었다. 한편, 고추·마늘 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약세가 지속되지만 양파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5월에는 마늘·양파 수확기 가격이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배추·대파·쪽파 가격도 출하량이 증가하여 평년보다 낮지만 무·당근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배추가격은 산지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월동배추 저장량이 감소하여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추가격은 재고량이 많고 수입량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약세가 전망되지만 감자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 6월 가격은 배추·무·양배추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약세가 전망되었다. 고추는 저장량과 수입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전망되지만 당근은 저장량 감소로 가격 강세가 전망되었다. 마늘은 생산량 증가로 수확기 가격 약세가 지속되지만 양파는 강세가 전망되었다. 대파 6월 가격은 보합세이지만 쪽파는 생산량이 많아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7월호는 기상여건 호조로 배추·무·감자·양배추·대파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쪽파·당근은 산지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파는 생산량이 많고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고추는 출하량 감소로 7월 가격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8월 고랭지 배추·무·감자·양배추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근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저장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추·양파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작년보다 높지만 마늘은 생산량이 많고 이월재고량이 남아 있어 가격이 낮을 전망이다. 대파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약세가 지속되지만 쪽파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 강세가 전망되었다.
- 9월 배추·무·대파·쪽파·감자·양배추 가격은 가을 및 겨울 작형 출하량이 증가하여 약세가 전망되지만 당근 가격은 저장량과 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고추와 양파 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수입량이 증가하여 보합세가 전망되지만 마늘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0월에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배추·무·대파·쪽파·감자·당근·양배추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추와 양파가격은 작년보다 강세가 지속되지만 마늘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1월호는 김장철 배추·무·대파·쪽파·당근·양배추 가격이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지만, 고추·양파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마늘은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감자는 출하량이 많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2월에서는 배추·무·대파·쪽파·감자·당근·양배추의 출하량 증가로 12월~2월까지 작년보다 약세가 전망되지만, 고추·양파는 저장량 감소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9년 봄배추·봄무·봄당근·양배추·감자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8 농업관측월보 과일

연 구 자: 김배성, 천인석, 허정희, 안명옥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과일관측월보』 발간 및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들에게 완전경쟁시장 요건 중의 하나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월별 관측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 생산자들이 합리적으로 과수의 신규식재 품목선택 및 식재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연중 적절히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그리고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한 정부의 과수생산 및 유통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2. 연구개발 내용

2008년 『과일관측월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중 비중이 높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6개 품목에 대한 재배, 저장, 출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조사 및 예측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공표·제공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측면에서는 지역별·품종별 실제 재배면적 및 향후 재배의향면적, 지역별·품종별 생육상황과 단수, 생산량, 품목·품종의 당도, 설탕, 외관 등 품질상태, 재

고량, 기상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2008년산 과실 품질동향 및 품질평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출입 정보에서는 오렌지, 포도 등 수입과일의 산지 및 수입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격정보는 도매시장 기준 가격동향과 전망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사과

2008년 사과 재배면적은 2007년보다 2.2%(648ha) 증가한 3만 6ha, 성목면적은 1.4% 감소한 1만 8,534ha이다. 2008년 생산량은 생육기간 중 태풍피해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작황이 좋아 2007년보다 8.1% 증가한 47만톤이다. 당도는 14.3°Bx로 전년 및 평년보다 0.6~0.7°Bx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배

2008년 배 재배면적은 2007년보다 8.1%(1,611ha) 감소한 1만 8,277ha, 성목면적은 5.3% 감소한 1만 6,583ha이다. 2008년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좋아 개당 중량이 증가하였고, 병해충 발생이 적어 전년과 비슷한 47만톤이다. 수확기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당도는 12.2°Bx로 전년 및 평년보다 0.6~1.0°Bx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감귤

2008년 감귤 재배면적은 2007년보다 1.2%(247ha) 감소한 2만 1,229ha이고, 성목면적은 2007년보다 1.0%(200ha) 감소한 2만 709ha이다. 생산량은 2007년보다 25% 감소한 58만톤 수준이다. 노지온주 품질 조사 결과, 당도는 10.2°Bx로 2007년보다 0.5°Bx 높은 수준이며, 당산비는 10.4로 2007년보다 1.2 높은 편이다.

라. 단감

2008년 단감 재배면적은 2007년과 비슷한 1만 6,259ha, 성목면적은 2007년보다 1.3%(179ha) 감소한 1만 4,064ha이다. 2008년 생산량은 2007년보다 7.4% 감소한 19만톤 수준이다. 2008년 단감의 당도는 가을 건조한 날씨로 인해 2007년보다 1.0°Bx 높은 15.6°Bx이다.

마. 포도

2008년 재배면적은 2007년보다 3%(603ha) 감소한 1만 8,240ha이고, 성목면적은 5%(722ha) 감소한 1만 5,210ha이다. 2008년 생산량은 2007년보다 2% 감소한 32만톤 수준이다. 2008년산 포도의 품질은 강우량이 적고 일조시간이 많아 2007년산보다 좋았다. 노지포도의 당도는 전년보다 캠벨얼리 0.6°Bx, 거봉 1.0°Bx, MBA 0.6°Bx, 세리단은 0.9°Bx 높은 수준이다.

바. 복숭아

2008년 재배면적은 2007년보다 4%(550ha) 감소한 1만 2,638ha이고, 성목면적은 6%(550ha) 감소한 8,823ha이다. 생산량은 2007년과 비슷한 18만톤 수준이다. 조생종의 품질은 냉해로 2007년보다 좋지 않았던 반면, 중·만생종은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좋았다. 숙기별 당도는 2007년보다 조생종 0.5°Bx, 중생종 0.9°Bx, 만생종 0.7°Bx 높은 수준이다.

4.9 농업관측월보 과채

연구자: 정은미, 정학균, 김원태, 김수림, 강민수, 윤선희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 과채관측은 재배면적 대비 생산액이 크고,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과채류 7품목(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풋고추, 오이, 호박)에 대해 출하예상면적, 예상 단수, 추정 출하량, 가격 전망, 차기 작형 재배의향면적, 소비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한다. 이는 과채류 수급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배농가·소비자·정부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 과채관측내용은 각 품목별 재배(정식)의향면적, 실제 재배면적, 지역별 생육상황 및 단수, 생산량, 수출입량, 가격동향 및 전망에 관한 것이며, 수요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행태 등을 연간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이와 같은 관측내용을 재배농가나 관계자 등에 제공하기 위해 각 품목별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 자료를 집계·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완하기 위해 공급함수, 가격신축성함수 등 수급모형을 개발 운용하였다. 각 품목별 최종 단기 수급전망치는 매달 과채관측 중앙자문회의를 통해 심의 후 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매월 10일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3. 연구결과

- 오이, 호박 가격은 출하량이 늘고 대체재 출하량도 많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딸기, 수박은 출하량이 적지만 대체과일 가격 약세로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토마토, 풋고추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3~4월 정식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봄철 가격하락이 전망된다(4월호).
- 딸기는 출하량이 적지만 품질이 낮고 토마토는 출하량이 다소 늘지만 대체과일 가격 약세로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애호박은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5월호).
- 참외, 수박은 기상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낮고 오이, 애호박, 토마토, 풋고추는 재배면적 늘고 작황호조로 출하량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6월호).
- 참외, 수박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품질이 좋아 가격 하락폭이 적고 토마토, 오이는 출하량 많아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 풋고추는 가을철 가격상승 기대로 6~7월 정식의향이 증가하고 수박은 추석 출하를 목표로 정식시기 앞당겨 6월 정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월호).
- 수박, 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고 토마토,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이 적지만 평년보다 낮은 약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 오이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7월 정식의향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9월 이후 가격은 농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8월호).
- 수박, 참외는 출하량이 많지만 기상호조로 품질이 우수하여 가격 작년보다 높고 오이, 애호박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기상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평년보다 낮고 풋고추는 소비대체재인 오이맛고추의 증가로 작년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토, 풋고추의 8월 정식면적 증가로 10~11월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9월호).
- 풋고추, 오이, 호박은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격은 평년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박은 추석 출하를 목표로 재배한 2기작 면적이 많고 참외는 연장재배가 늘어 출하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가상승으로 오이, 풋고추의 9월 정식이 증가하고 10월 정식은 감소하여 수확기인 10~11월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

- 상된다(10월호).
- 기상호조로 토마토, 호박, 풋고추의 출하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토마토, 오이는 정식시기가 8~10월로 앞당겨져 수확기 11~12월 출하량이 증가하는 반면 11~12월 정식의향이 줄어 수확기인 1~3월 출하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1월호).
 - 풋고추, 애호박 재배면적 늘고 작황도 좋아 평년보다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 약세가 지속되며 수박, 딸기는 출하량이 많고 소비대체 과일도 많아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유가의 영향으로 애호박을 제외한 과채류의 10~12월 정식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이, 토마토는 정식을 8~9월로 앞당기거나 내년 1~2월로 늦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월호).

4.10 농업관측월보 축산

연구자: 허 덕, 이형우, 김현중, 이정민, 서은희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축산관측의 목적은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 등의 관측 정보를 축산농가 및 관련 유통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입식과 출하 선택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유통업자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축산관측의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이며, 주요 내용은 축종별 사육동향과 전망,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축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육동향과 전망에서는 축종별 사육 현황을 분석하여 사육두수 변동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산지 농가의 가축 출하 의향 및 입식 의향을 조사 분석하고 연령별 사육두수, 인공수정 실적, 종계 실적, 모돈수, 가격, 사료비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사육두수를 전망하여 제시하였다.

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에서는 월별 축산물 수입 현황을 분석하여 수입량 변동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며, 도축 및 도계량 및 계란생산량의 변동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절적 특성,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축 및 도계 물량을 전망하고, 산란용 마리 수 추정을 통한 계란생산량을 전망하여 제시하

였다. 그리고 분기별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축종별 소비경향 및 패턴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축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에서는 도축 물량과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단기 가격을 전망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축산관측 한육우

2008년 4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현재 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소에 대해 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며,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반입으로 암소도축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 12월 사육두수는 243만두로 전년에 비해 10.4% 늘었다.

- 3월호: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공급물량이 확대될 경우 한육우 산지가격 하락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 6월호: 4월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한우 사육농가의 불안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어 한우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고급육 가격은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9월호: 경기 위축 및 소비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4월 이후 산지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위축된 쇠고기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되어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2월호: 8월부터 산지 소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연말연시 및 설 수요로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 축산관측 젖소

분유 재고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원유 감산 대책(쿼터제, 착유우 도태 등)으

로 젓소 사육두수는 2003년 3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사육두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쿼터제 시행 초기보다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사육두수는 감소와 더불어 사료가격 상승으로 사료급여에 차질을 빚어 두당 산유량이 감소하여 2008년 하반기 원유생산량은 2007년 동기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9년 3월 사육두수도 감소세를 이어가지만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 축산관측 돼지

모돈수 감소로 인해 2008년 9월, 12월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8년 4월 이후 산지 돼지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초에도 출하두수와 수입량 감소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확대로 돼지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이지만, 광우병 논란에 따른 쇠고기 소비 심리 불안이 해소되면, 높은 가격 유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라. 축산관측 산란계

산란 종계 입식수수 증가로 2008년 산란계 사육수수는 2007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계 도태지연에 따른 산란용 마리 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의한 살처분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사료가격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어 계란가격은 6월 이후 줄곧 높게 유지되어 왔다. 2008년 추석 이후 계란가격은 산란용 마리 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계란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2009년 3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산란용 마리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8년 12월~2009년 2월 계란 가격은 강세(1,100~1,200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 축산관측 육계

2008년 4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많은 닭들이 살처분되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

록하고 있다. 병아리 감소로 2008년 12월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고,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인한 국내산 닭고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육계가격은 당분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11 농업관측월보 쌀·콩

연구자: 김태훈, 최익창, 박미성, 승준호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쌀·콩 농가소득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쌀·콩 관측사업을 도입하였다. 「쌀·콩 관측」의 목적은 재배의향면적, 수급 및 가격 동향, 단기 전망 등의 관측정보를 쌀·콩 재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및 실수요업체, 정부, 그리고 관련 농업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쌀·콩 관련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2008년 「쌀·콩 관측보」의 주요 내용은 가격 동향, 소비 동향, 수입 동향, 산지유통업체 거래 동향,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수급 및 가격 전망, 국제 수급 및 가격 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산지 가격 동향에서는 품목별 산지 가격(쌀과 벼, 콩)의 변화를 분석하여 가격 변동 원인 및 지역별 가격 동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비 동향에서는 1인당 소비량 변화, POS데이터와 대도시 소비자조사를 통해 소비지 가격, 판매처별 비중, 가격대별 물량 점유율, 소비자구매행태 등의 소비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입동향은 국영무역과 민간 수입실적을 살펴보고 국가별·품종별 수입량과 가격 변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쌀 산지 유통업체 거래 동향에서는 매월 산지유통업

체를 대상으로 벼 매입 및 판매 동향, 재고량, 수확기 벼 매입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였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에서는 지역별·품종별 재배 의향면적과 실제 재배면적, 지역별·품종별 단수, 생산량 전망 등을 제공하였다. 수급 및 가격 전망에서는 민간부문 수급 추정을 통해 수확기 및 단경기 쌀 가격을 전망하였으며, 콩의 경우 국내외 수급 동향 및 대두업체 거래 동향을 바탕으로 가격을 전망하였다. 국제 수급 및 가격 전망에서는 세계 쌀·콩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등 수급 동향과 전망, 중립종, 장립종 쌀 가격 동향과 전망, 해외 콩 산지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 쌀

- 2007년 12월 말 산지유통업체 자체 매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농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94만 3천ha로 전망하였다(2008겨울호).
- 2008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이 전년보다 20만 1천톤이 감소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쌀 소비대체가 발생하여 2008년 계절진폭은 4.6~8.1%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008봄호).
- 7월 말 농협의 보유 재고량은 9월 상승~중순, 민간RPC는 8월 중순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산 벼 재배면적은 93만 6천ha, 조생종이 전년 대비 0.5% 감소, 중/중만생종이 1.7% 증가, 단수는 481kg~494kg/10a로 가정, 2008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2.2~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량이 증가하여 2008년산 수확기 가격은 전년보다 0.7~3.3%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2008여름호).
- 2008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75.6kg으로 추정되며 전년보다 감소율이 둔화됨. 2008년산 조생종 면적은 9만 5천ha, 단수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483~492kg, 생산량은 전년 대비 5.5~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08.9.수확기속보).
- 9월 산지유통업체들의 원료곡 매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2~9.8% 높은

수준이며 햅쌀 판매가격도 6.9% 높게 판매되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반면, 논벼 단수는 495kg/10a로 전년단수 466kg/10a보다 크게 증가하여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0만 7천 톤 늘어난 461만 5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년보다 햅쌀을 많이 당겨먹지만 생산량 증가로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433만 5천 톤으로 전망하였다(2008.10.수확기 속보).

- 11월 13일까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매입은 매입자금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어났으며, 10월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11.2%,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43만 5천 톤 증가한 484만 3천 톤으로 집계되어 2008양곡연도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큰 폭의 하락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9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전년 대비 4.1~6.6% 하락한 14만 6천원~15만 수준으로 전망하였다(2008가을호).

□ 콩

- 콩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대량 수요업체들은 2008양곡연도에 사용할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어서 8~10월 콩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보합세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8년산 콩 파종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7만 5,461ha일 것으로 전망하였다(2008여름호).
- 2008년 콩 재배면적은 7만 5,242ha이고, 단수는 165~177kg/10a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12만 4천~13만 3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8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2008년 11월~2009년 1월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약세일 것으로 전망하였다.(2008가을호).

5. 농업구조 · 경영연구



5.1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 분석

연구자: 김정호, 조영수, 이용호, 성명환, 김연중, 허덕, 임정빈, 안동환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UR 이후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향후의 농업 협상 및 사후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UR을 포함하여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 영향을 농업부문 전반 및 품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UR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농업인과 소비자에 미친 후생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였으나 예상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잉여는 증대하였다. 분석대상 19개 품목의 UR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해 축소된 전체 잠재적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매년 평균 5,633억원 수준이며, 소비자 잉여의 증가액은 연평균 6,118억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485억원씩 후생 증대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8,296억원의 총생산액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의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한 최종수요 증가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시장개방 속도는 무역침투율 기준으로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보다 실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 부문의 개방화가 재배업 부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재배업 부문에서는 채소와 과일의 개방속도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농업소득, 농가인구, 농가호수 등 주요 농가경제 지표들도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보다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UR 이후 곡물의 수입량은 확대된 반면 국내 생산량은 감소되고 있어 곡물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곡물 생산의 수익성마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 작물은 UR 이후 수입량의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농가소득이 낮아졌으며, 생산자 잉여가 줄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있다.

축산업은 UR 이후에도 생산액이 증가하고, 생산의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었으며, 생산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한육우 산업은 고급육 생산비율이 증가하는 등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가소득 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

3. 연구결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장 큰 영향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이며, 1996년부터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어 농업교역조건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농업은 성장하지만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잠재적 생산자잉여는 다소 감소한 반면 소비자후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농업 생산은 위축된 반면에 식품산업과 농업서비스 등의 연관산업 및 비농업 부문은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개방의 수혜자인 소비자 및 산업계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첫째, 농산물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자연과 문화가 복합된 농업에 대해 단지 산업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선진국들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무역협상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함. 무역협상의 진행과정에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사전적인 국내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5개년 기본계획의 제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5.2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2/2차 연도)

연구자: 박성재, 김태근, 정호근, 조용원
연구기간: 2008. 3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지식기반사회의 성숙, 선진국으로의 진입,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과 같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정이 선진국형 농정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농정전개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분야별 선진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이번 연구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제2부에서는 선진국의 농정 경험을 통하여 선진화 과제를 발굴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한국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농정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21세기 한국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정의 비전과 목표는 개방에 대응

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농업, 국민과 소비자가 사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은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형 기술농업’, 농촌은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살고 싶은 공간’을 농정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농정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실현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목표는, 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농업, ② 안심·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 ③ 중소농 소득·생활 안정화, ④ 농촌 공간 가치 재창출, ⑤ 지구촌과 호흡하는 앞서가는 농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도약의 기회로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농업성장 전략을 채택한다. 둘째,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균형 있는 영양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고령농과 중소농의 소득과 생활안정을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생명에너지 공간으로서 농촌가치 재창출은 농촌 어메니티 증진과 주민의 기초서비스 충족으로 농촌을 국민과 소비자의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섯째, 지구촌과 호흡을 같이 하는 앞서가는 농정이란 국제 규범과 합치하면서 남북통일, 또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된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와 지역의 역할 조정에 의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농산물의 수요창출과 수출, 식품산업, 녹색성장 등 전략부문의 집중 투자로 성장 잠재력 향상, ③ 농업·농촌의 조직화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 제고, ④ 중소농 생활안정의 달성과 농정신뢰 회복으로 농촌사회의 갈등해소와 안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와 지역간의 역할을 조정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중소농에 대해서 소득문제와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가에게는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 전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비롯하여, 농식품 수

출, 식품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부문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농촌의 조직화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특징인 영세한 농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조직화와 다양한 경영전략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농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농촌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계층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5.3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연구자: 황의식, 이용호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전업농가의 농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이를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안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상황에 노출된 농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화하여 전업농가의 경영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전업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통계자료 분석, 계량분석 및 전업농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업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종류, 크기 및 정도, 관리실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위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적,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위험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 ①위험이 발생할 가능성/확률의 크기로 정의하는 방법 ②농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의해 초래되는 손실의 크기와 규모로 정의하는 방법 ③위험의 크기를 잠재적 손실의 기대가치 즉, 기대수익의 크기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위험정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의 정의, 실태 분석, 유형 구분에 따라 위험관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험 축소방안으로는 영농 다각화, 수직적 통합, 생산계약(계열화) 등이 있으며, 둘째, 위험손실 완화 방안으로 유통협약, 생산자조직을 통한 공동계산제, 자조금 조성, 선물거래를 이용한 헤징, 작물보험 등이 있다. 셋째, 위험대응방안으로는 소득 안정제도, 소득세 평형제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원 다양화지원, 직불제도 등 거의 모든 농업정책이 어느 정도 농가의 위험관리와 연계되어 있다.

농업분야의 위험은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농가 자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사전적 조치와 대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시장개방과 같은 체계적인 위험, 시장실패, 위험손실완화 등과 같은 부분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농가의 노력과 동시에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3. 연구결과

전업농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부역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가 시장상황, 기후변화, 질병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농가에 미리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가가 사전에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업농이지만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관리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이 서로 역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재해보험의 효과가 낮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고려하는 수입보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소득안정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보험 방식은 많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도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경영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일정조건을 갖춘 전업농가 및 생산자 조직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 평형제도 또한 유용한 위험관리 수단이 된다. 이 역시 현재 상황에서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향후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면 세금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될 전망이다.

향후 농업생산은 수직적 통합관계 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위험도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계약거래에서 약자인 농가가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도의 법적인 조치가 아니면 농안법 혹은 공정거래법에 이러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농가의 전략적 위험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5.4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 연도)

연 구 자: 김수석, 박석두, 채광석, 김창호, 황연수, 조가욱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농업내외의 사회적 요구를 검토하여 농업과 국가 발전에 바람직한 농지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제1차 연도에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전용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부문 관련 제도가 농업경영체의 농지 이용과 농지유동화, 농지 및 산업용지의 수급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농지제도의 과업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2. 연구개발 내용

- 현행 농지제도가 직면한 도전과 수행해야 할 과업
-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 농지시장과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
- 농지 수급 분석
- 농지보전제도 및 전용제도의 운용실태

3. 연구결과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구분에 따라 전국에서 3개

법정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법정리의 전체 필지를 조사하였는데, 사례지역의 농지소유관계에서 비합법적 소유는 면적상으로 19~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임대차에서는 비합법적 임대차가 42~57%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농지이용 형태는 자작 중심 경영에서 임차지를 점차적으로 늘여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고령농의 비율이 높은 중산간지역에서는 자작 중심 경영에서 농작업위탁 경영 쪽으로 농지이용의 중심이 바뀌고 있었다.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가보다 축소 내지 은퇴하려는 농가가 많았다.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능력을 분석해 보면, 경영 규모가 커질수록 임차인의 임차료 지불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료 부담능력상으로는 농지의 임대차가 영세소농 계층에서 3ha 이상 대농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 농지임대와 농작업위탁 간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같은 조건일 때 농지임대보다는 농작업위탁이 좀 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농지이용 형태는 경영의 수익성과 경영주의 육체적 영농능력에 따라 자작경영에서 농작업위탁경영으로, 다시 농작업위탁경영에서 농지임대로 전환된다. 농지임차와 농지매입의 경제성을 순현재가치법으로 계산해보면, 농지임차보다 농지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증가가 농지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농업측면에서는 농지매입을 통한 규모확대보다 농지임차를 통한 규모확대가 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매입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농지 매수자가 임차료 수입보다는 인플레이에 대비한 실물자산의 형성과 지가상승에 의한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농지임차료와 농지가격 간의 Granger 인과관계 추정결과는 도시근교지역에서 농지가격이 임차료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갖고, 평야지역에서는 도시근교지역과 반대로 임차료가 농지가격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서는 농지가격이 선행하고 임차료가 후행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농지수급분석에서 우선 필요농지의 크기를 KREI-ASMO로 추정해 보면, 현재의 경지면적 및 이용면적 변화추세가 지속되는 경우(DDA, 한미 FTA 미시행)에 2020년의 필요농지면적은 156만4천ha로 추정되었다. 다른 시나리오로 곡물자급률의 목표치를 30%로 설정하는 경우에 필요농지면적은 2020년에 165만3

천ha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도시 및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용지의 수요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2000~2020년 기간에 약 38만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개발가능지 면적은 81만6천ha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나리오별 필요농지를 고려해도 개발용지에 대한 총량적 수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수도권에도 2020년까지의 개발용지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보전을 위한 핵심제도로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06년까지 절대면적과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증가하다가 2007년에 면적과 비율 모두 감소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리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 또는 우대 지원책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축사와 농산물 가공·건조·창고시설은 물론 농업인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농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의 운용 실태를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2개 마을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통점으로 나타난 것은 농지를 전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마을주민은 농지전용을 환영하나 공장·축사 등 오염·훼손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서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농지전용으로 땅값이 오르지만 피해를 입거나 인접한 농지소유자 및 주민들과 전용자 간에 마찰이 존재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라 하더라도 허용되는 시설이 들어서면서 인접 농지까지 농지로 보전하기 어렵게 된다.

5.5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자: 정호근, 오내원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연구목적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상체계를 직접보상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보상의 개념, 보상의 근거, 시장개방의 범위,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의 개입가격하락, 관세인하, 수입허용과 같은 시장개방, 무역자유화에 따른 보상사례를 스웨덴,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보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였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대책으로 직접보상과 간접지원을 소개하고, 직접보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직접보상에 대해 DDA, FTA 국제협상 진행과 국내보조 준수사항이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의 세부사항별로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결과

정책개혁이 있으면 항상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그룹과 피해를 보는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피해그룹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최소극대화 원리에 의거한 사회적 선택, 정부의 도덕적 책임, 정치적 합의를 위한 필요조건 등이 있다.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는 보호 또는 보조정책의 개혁, 규제 도입 또는 재산권 제한, 자연재해의 발생,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있으며 시장개방은 보호·보조정책의 개혁에 해당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이 필요한 근거로 식량안보와 생산기반 유지, 피해발생과 기대효과 실현 간의 시차, 농업생산자원의 낮은 유동성, 사회복지기반의 취약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농업부문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직접보상은 쌀소득보전직불, 송아지생산안정, 폐원지원, FTA피해보전직불이 있다. 생산자와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접지원에는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과수우량목포생산, 과원영농규모화 등이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에서는 목표가격 산정, 부적격자나 과다 지급, 생산과의 연계성, 예산의 불안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FTA피해보전직불에서는 대상 품목의 사전적 지정, 가격기준의 지원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폐원보상에서는 역시 대상품목의 사전적 지정, 지원금의 과다책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송아지가격안정제도에서는 기준가격의 적절성과 상한설정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지적된다.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보상원칙을 정성적으로 도출하였다. 피해그룹에게만 피해액에 준하여 적절한 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개혁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보상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일시적이며 만료 후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직접보상뿐만 아니라 간접지원, 암묵적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적인 것과 사후적인 보상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

외국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개입가격이나 보호정책을 없애는 정책개혁에 대응하여 우선 직접보상과 간접지원을 실시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제도들을 폐지하고 이후에는 직접보상제도보다는 사회복지의 강화와 병행하

여 소득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소득안정지원제도는 직접보상과 비교하여 생산과 비연계되어 있고, 자조금 형식의 필요재원에 대한 농가 참여, 이행조건(cross compliance)의 강화, 제도의 세밀화가 더해진다. 선진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WTO의 생산연계보조 감축 논의를 고려할 때 보상제도를 포함한 소득정책은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방향, 소득보전에서 경영안정과 다원적 기능 제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직접보상과 간접지원제도의 향후 변화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폐원지원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료하도록 한다. 다만 매년 시장여건에 연동하는 직불인 쌀소득보전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송아지생산안정은 생산과 비연계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로 통합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간접지원은 국제협상에 따라 허용되는 국내보조의 범위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하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종료하고 다만 시장개방과 상관없이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간접지원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 변화과정의 중심에 있는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비, 농업소득을 포함한 세부적인 농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현장단위에서의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6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연구자: 황의식, 정호근
연구기간: 2007. 12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을영농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농업경영의 조직화에 의한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2. 연구개발 내용

농업경영 조직화의 사례로 영농법인 나투어, 순천농협의 직영농장,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을 조사·연구하였다. 나투어(natur)는 효과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것으로 거창과 남해에서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투어는 지역마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임차료 이외에도 채소농장에서의 임금소득을 얻는다. 이외에도 농작업 감소에 따른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채소, 버섯, 벌꿀 등을 통해 다른 농업생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 초기에 농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해가 어렵고, 그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로 인해 법인이 단기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모든 농가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단지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판매 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을 단위 영농단지를 구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순천의 중산간지역은 고령화로 농협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

작 중심의 작부체계이어서 농업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마을영농형의 새로운 생산체제 및 작부체계 도입을 위하여 순천농협은 직영농장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지역 농가들에게 장기임대차에 의해 고정적인 농지임대수입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는 남은 노동력으로 직영농장에 임노동을 하거나 마을 내 유희화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단지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직영농장은 현재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 직영농장의 손익이 적자인 것은 농협의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탓도 있지만 초기 단지화된 농장의 영농경영 경험부족으로 생산성이 낮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작물, 작부체계의 도입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높다. 향후 직영농장의 수익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은 60호 회원농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법인이다. 영농조합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퇴비생산하우스, 우렁이 양식장, 미생물배양실, 가공공장(친환경센터) 등의 시설을 가지고 회원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생산한 친환경 쌀을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효율화를 위해 조합은 방재, 퇴비 살포 등 농작업도 대행해 주고 있다. 단지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마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화가 이루어지도록 생산부문의 통합, 생산방식의 매뉴얼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재배를 통한 전속출하에서 나아가 농기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부체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나의 단지처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부문의 통합경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3. 연구결과

전업농 육성정책이 농업구조의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동시에 영세소농까지 포함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가 농업경영의 조직화로서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을영농 혹은 집락영농 형태의 농가조직화가 이에 해당한다. 한 지역, 마을단위가 하나의 생산주체인 법인이 되어 지역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는 형태로서 지역의 농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통합하여 경영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규모화 효과를 기대한다. 영세소농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 새로운 작부체계의 도입,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 통합적 의사결정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농업경영의 조직화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체를 통해 전체가 하나의 농업생산주체처럼 조직된 것이다. 지역, 마을의 노동력, 농지, 자본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체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경영 조직화의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기존의 농기계 등 자원을 유희화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자원 소유자의 기회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업농가와 관계 설정 등 기존의 농지 임대차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원, 농지 임대차 관계 등에서 기존 개별영농보다 나쁜 차별화된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조직화의 주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지원보다는 농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 거래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이 생산조직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상을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농지의 장기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농업경작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자금의 지원, 시설설치 등에 대한 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7 신기술과 농업경영의 비전 사례연구

연구자: 김정호, 박문호, 김연중
연구기간: 2008. 4 ~ 6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신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즉, 미래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농업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임. 이 연구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설명하는 것과 또 이 기술이 농업현장에 적용될 때 기대되는 경영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개발 내용

우리나라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딸기 관리 및 수확작업 시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고설수경재배기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복토직파기술 개발, 사료비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내 청보리를 이용하여 완전혼합사료(TMR) 플랜트 기술을 개발,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유통되어 국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개발

3. 연구결과

가.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

현장에서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농업기술은 마케팅·경영기술, 친환경기술 등이며, 향후 농작업 기술은 생력화·환경성 제고의 방향으로, 상품 기술은 기능성·안전성 제고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 미래의 기술혁신 전망을 분야별로 보면, 첫째, 생산 분야에서는 정밀농업·친환경·저투입 기술, 식품가공·유통 분야에서는 고효율·건강 지향·친환경/지능형 기술, 식물육종·이용 분야에서는 다수확/기능성·맞춤형 기술, 동물육종·번식 분야에서는 분자육종·동물BT·예방 기술 등이 연구 개발되어야 함.

나. 딸기 고설 수경재배 기술개발 결과

딸기 재배 시 토경재배와 고설수경재배의 단위면적당 노동투하시간을 각각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고설수경재배는 토경에 비해 재배기간이 길고, 수확량이 많아 단위면적당 총투하노동 시간은 토경재배 노동시간과 차이가 거의 없음. 그러나 딸기 1kg당 노동투하시간을 비교해 보면 고설수경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해 노동력이 40% 적게 투입되므로 경제성이 있음. 고설에 의한 작업시간의 단축에 따른 생력효과 외에 작업자세의 편안함에서 오는 작업강도의 저하가 매우 큼.

딸기의 수경재배로 질소질 비료의 조절이 가능하여 화아 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위황병 등의 토양전염성 병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시비 및 관수를 자동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수경재배는 재배면적 확대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다. 복토직파기술 개발 결과

복토직파 기술은 무경운 상태에서 경운-정지-평탄작업-심층·측조시비-정밀파종작업-복토작업이 동시에 1회 트랙터 운행으로 가능하므로 에너지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생력화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도 가능함.

벼농사의 경우 이모작(벼+청보리) 경영으로 토지이용을 제고로 간접생산비 절감, 작물재배(논, 밭작물) 과정에서 화학비료를 표층 또는 전층에 시비로 비료성분인 질소와 인산이 강우, 관개, 배수과정에서 호수나 강으로 흘러들어가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복토직파기술에서는 토양에 시용된 비료 성분이 환경

오염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작물에 꼭 필요한 만큼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고, 비료를 심층·층조 시비할 수 있는 기술임.

라. 청보리 랩-사일리지 TMR 연계기술 결과

원형배일 전처리가공 시스템은 양질의 TMR 사료 생산을 위한 중요한 기능이다. 이 시스템은 반입된 원형배일을 연속적으로 적재하고, 연화 및 세절, 볏짚의 흙먼지 등 이물질 제거, 일정 무게 및 크기로 규격화하였음.

답리작 랩-사일리지 생산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의해 6,000억원대의 신규조사료 시장을 형성하였고, 1,000억원대의 수입 조사료를 국산 조사료로 대체하여 외화절감 효과가 매우 큼. 또한 원형배일 랩-사일리지 이용확대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사료 및 TMR사료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연간 약 1,000억원대의 축산농가 경영비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연간 3,5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마. IT-BT 활용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개발 결과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불법 유통될 수 없도록 한우개체식별번호와 생산 과정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관리체계 기술을 개발·보급하였음.

이 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RRF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두당 5,369원이고, DNA 시스템 추가 비용은 두당 16,000원, RF+DNA 시스템 동시 적용 시 추가비용은 두당 21,369원임. 그러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두당 추가 수입은 684,000원으로 즉 연간 작업두수가 6만 두인 경우 연간 123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함.

5.8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자: 이규천, 최경환
연구기간: 2008. 9 ~ 12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보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영유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에 목적이 있음.
- 여러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동복지 정책을 통합하여 한 부처의 사업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제도의 차별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리의 정립과 농촌지역 아동복지 제도의 접근논리에서 경제적 능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능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검토하여 농촌지역의 아동복지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연구개발 내용

- 농촌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이념적 논리
- 농촌지역 아동복지 관련 정책 현황과 관계 분석
- 사례지역 아동복지 실태 분석
- 정책방향 및 과제

3. 연구결과

- 농촌지역 영유아보육제도의 문제점

- 거버넌스 문제
 -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된 기능이고,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된 기능임에도 여러 부처가 동시에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정책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조직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책기능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중앙정부의 조직기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관련 기능도 여러 과와 별도의 행정조직인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행정효율을 저하시키고 기능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영유아보육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영유아보육의 질적 차이가 심화될 수 있음.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운영문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운영면에서 도시지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실제 분석된 문제로는 ①문제가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못함 ②이중 지급방지를 위한 행정소요 증대 ③같은 시설에 공존하고 있는 교사의 신분차이(유치원교사는 교육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 ④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도 어린이집에서 하면 보육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면 교육 ⑤별도의 추가 비용 징수 ⑥지역적 위치와 영아들을 위한 차량운행의 어려움 ⑦보육시설이 없는 지역(면)의 존재로 일부지역 영유아의 수혜배제 ⑧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사업 문제 등이 있음.

- 정책 사각지대 존재(수혜로부터의 배제되는 영유아)
 - 농촌지역에서는 지리적 조건, 장애아, 자폐아, 조손가정 자녀들에 대한 대책의 미흡과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지원금의 부당 수령자 존재 문제

-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있어 비농업 고소득자 등이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 이외의 주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농지도 농업인 요건(1,000m²)만 겨우 충족하는 정도를 소유하고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반쪽’ 농업인도 있음. 또한, 자가보육 농업인에게 직접 보육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보육에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농촌지역의 소득산정제도에 의한 지원배제 문제
 - 농업용 중장비, 차량 등을 보유한 세대에 대한 소득산정으로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 정책과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책적 틀 속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정책추진방식의 개선
 - 지방이양사업인 보육사업을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과 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 영유아보육 정책에서 농촌지역에 정원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지역에 적합한 정책내용으로 되어 있음. 영유아보육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농촌지역에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능률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능률성에 기초해서 농촌지역 정책을 펴야 함.
- 보육시설의 설치확대와 운영 내실화
 -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농촌지역은 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유아수의 제한, 앞날의 영유아

포함 아동수의 지속적 감소우려 등의 이유로 민간보육시설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 영유아를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어야 함. 기존 시설의 공간부족이나 시설 내의 보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함. 거주 위치상의 문제로 수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지역(주요 면단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면, 귀농 등을 통해 농촌지역사회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영유아 수의 감소 현상으로 시설확충이나 사업확장이 우려될 수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 생활 공간으로 필요 시에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확대에 대한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결손,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특별 배려 정책 추진
 - 생활능력이 부족한 조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농규모나 농업인,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말고 지원하여 정상적인 양육을 통해 정상적인 국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앞으로 농촌지역 영유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농촌지역 보육교사 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 강구
 - 교사의 문제가 보육의 수준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항임으로 농촌지역 보육교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당,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교사의 결원이 생기고, 충원소요기간이 장기적일 경우 등을 대비하여 시설장들이 보육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함.

□ 정책방향

영유아보육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음.

- 영유아 보육의 의무교육(또는 보육)화

- 영유아의 양육이 국가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유아는 환경적, 가정적, 사회적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적인 양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거주위치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영유아보육의 혜택에서 배제되면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영유아보육이든 교육이든 의무교육(보육)화 하는 것이 장기적 국가발전의 정책이 되어야 함. 특히, 농촌지역은 앞으로 생산공간임과 동시에 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영유아보육은 매우 중요함.
- 도시형 아동복지정책과 농촌형 아동복지 정책의 별도 정책화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영유아보육에 관련하여 농촌지역은 영유아자원의 희소성, 지리적 분산성, 여성농업인의 보육기능의 한계 등의 이유로 도시지역과는 운영형태나 방식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도시형 영유아보육정책과 농촌형 영유아보육정책을 구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거버넌스 통합 및 운용방향
 - 거버넌스의 통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서 업무통합을 의미함. 한 부처가 정책기획과 관리 등 영유아관련 아동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를 하여야 함.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집행기능을 통합하여야 함.

5.9 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자: 박문호, 이문호
연구기간: 2007. 8 ~ 2008. 3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녹차의 수급안정화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녹차의 수급예측 및 생산, 가공, 유통, 문화 각 산업단계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녹차의 수급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시장개방하의 녹차의 수급전망을 하였음.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녹차의 수급을 전망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영향분석, 국내 녹차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하였음.
- 둘째, 녹차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서는 한·중·일 녹차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중·일 녹차산업의 경쟁력 구조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셋째, 녹차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서는 국산녹차의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국산녹차의 시장 확대 및 재배면적 조절, 수입녹차의 적정관리체계 확보 등을 통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녹차산업의 문제점 분석과 연계,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녹차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녹차 산업은 웰빙 바람과 함께 생산, 소비 면에서 매년 두자리 숫

자의 성장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의 확대, 유통여건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내녹차의 수급안정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06년 재배면적은 3,692ha로 이 중 8년생 미만의 유목이 전체 다원의 62.2%를 차지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유목이 성목이 될 경우 향후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며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녹차 가공은 생엽을 1차 가공하는 황차(원료차) 가공과정과 황차(원료차)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2차 가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태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과정을 산지 가공시설에서 일체적으로 가공하는 자원자제 통합경영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영세업체 단위의 자원자제 가공은 품질의 균질성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소비확대 및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녹차 가격은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티백 등 저급품의 경우는 최근 녹차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검출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2007년 생엽 수매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보임.
- 제품 유형별 녹차시장의 동향을 보면, 현미녹차가 60%, 순수녹차가 40% 정도로 시장을 점하고 있고, 현미녹차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액의 85%를 태평양, 동서, 녹차원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녹차 수입은 2007년 3kg 이하 포장된 수입녹차 0.6%를 제외한 나머지 99.4%가 기타녹차 및 홍차, 반 발효차, 기타홍차 등으로 수입되고 있는 반면 수출은 2006년에 비해 약 46% 감소하였으며 3kg 이상의 녹차제품을 비롯해 모든 녹차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이렇듯 녹차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녹차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을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녹차 수급 전망을 위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녹차 소비량 추세와 기계화 진전 및 영양번식용 품종의 육종 확산에 따른 단수증가 추세, DD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녹차재배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에 주안점을 두어 녹차 수급전망을 수행하였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협상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을 고려할 때 수급 및 녹차의 가격이 어떻게 전망되고 이에 따른 적정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지자체들이 적정재배면적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신규면적을 확대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녹차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DDA 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이 이행되고 동시에 지자체들이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지 않고 신규면적을 계속 확대할 경우 녹차시장에 나타날 충격에 대해 분석하였음.

- 이러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한국녹차산업의 모습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한국 녹차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제시하였음.
- 한국 녹차 수급안정화의 기본방향은 첫째, 녹차 관측사업 및 지자체별 녹차 재배면적 계획 재검토 등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둘째, 주산지별 차 수급조절 기구구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하며, 셋째, 수입녹차에 대한 원산지 단속강화, 현미 녹차 등 차 조제품에 대한 관리강화, 수입차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와 같은 수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녹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녹차 생산 및 유통기반의 조기구축과 지역다업의 주체육성 및 기능적인 공동공장 확보를 통한 황차 가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소비생활의 변화에 맞춰 특색 있는 차산지 육성이 절실하며 고품질 녹차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녹차 소비촉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세계적으로 녹차의 소비가 크게 증대될 것에 대비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마케팅의 추진이 요구됨.

5.1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연 구 자: 김태곤, 김수석, 허주녕, 허윤진
연구기간: 2007. 9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보전과 농업구조개선의 관점에서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실태 파악과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감면원칙의 제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보전, 그리고 부담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기타 우량농지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제2장에서 우리나라 농지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문제의 현황, 전용 실태와 특징, 휴경농지의 증가와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와 전용실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관련제도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내용과 제도의 경과, 부담금 부과 및 수납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감면조항이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제5장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감면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농지전용이 활발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감면통계 분석을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조사지역으로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관련 부담금제도에 운용현황, 부담금 부과 및 감면실태 분석을 통하여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7장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의 개선 쟁점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방안은 제5장의 실태분석과 제6장의 관련 부담금제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결과

한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은 개발부담금의 감면원칙을 모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조항을 개발부담금의 감면조항과 유사하게 축소 및 통폐합하여 정리한다.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원칙을 모형으로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을 정립하도록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경우처럼 감면규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기타 소득증대나 편의시설 등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그 이외는 50%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의 두 가지 원칙을 종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전용에서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 한해 100% 감면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행 60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에는 진흥지역 해제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제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간주하여 부과해야 한다.

각종 부담금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체납 시

연체금을 부과하는 연체요율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을 줄이고 징수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연체요율 크기는 타 부담금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체납액의 5%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하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부담금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를 증가산금으로 부과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60개 감면규정 중 12개 규정이 시한부 감면제로 운용되고 있다. 시한부 감면은 특정 감면규정에 대하여 시행령 부칙으로 특정 시점 이후 효력이 상실되도록 제도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감면제도는 감면규정의 일몰 시점에 시행령의 부칙 개정으로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 시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받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한 인력 및 시간상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일몰제를 교통유발부담금의 시한부 감면방식을 원용한 형태로 변경하도록 한다. 즉 농지보전부담금의 시한부 감면에 상한기간을 두어 시한부 감면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제도를 비롯하여 농지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신속한 파악과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통계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 100% 감면되는 전용통계를 공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통계, 50% 감면통계, 그리고 100% 감면통계가 일괄 취합 관리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세계 곡물 공급부족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 등 식량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농업생산력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농지 확보와 농업관련 시설의 보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5.11 FTA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연구자: 김태곤, 이용선, 허주녕,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고성보(제주대)
연구기간: 2007. 10 ~ 2008. 2

1. 연구의 목적

밭농업 직불제는 논농업과는 달리 밭농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논밭을 포함하는 경영단위 직불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밭농업지역에서의 ‘농업진흥’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특히 WTO 체제에서 국제적인 동향에서 보면 직불제는 허용대상정책이면서 경영단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직불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개혁의 촉진’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농업 진흥’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제주 고유의 농업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을 정리한 후,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 대상지역, 대상농지, 단가, 실시체제, 실시시기, 그리고 실시조건 등에 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가. 대상농가 및 대상농지

직불제를 설계하는 경우 대상농가와 대상농지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직불제의 대상농가는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판매농

가가 대상이 된다. 2005년 현재 제주 지역의 전체 농가 36,213호 중에서 자급농가(20%)를 제외한 판매농가의 3만호 정도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제외되는 자급농가나 고령농가 등 경영규모 0.1ha 미만 농가는 가구당 소득지불로 지원하는 ‘맞춤형농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농지는 2005년 현재 논 101ha, 밭 57,766(중 감귤 21,430ha) 등 농지 57,867ha와 초지 18,425ha 중에서 일부 자급농가 경작지를 제외한 면적이다. 농지 외에 밭담, 경관, 농업용 시설 등과 같은 농업자원도 대상이 된다.

나.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제주 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다. 2005년 현재 조수입 기준으로는 감귤을 비롯하여, 밭의 주요 품목은 마늘, 감자, 양배추, 무, 콩, 당근, 양파, 참깨 등 노지채소가 대상이 되며 시설은 제외된다.

단지 읍면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보는 경우 순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단위 개념을 유지하되, 특정품목의 생산과는 연계하지는 않아야 한다. 대상품목의 의미는 농업진흥을 위한 생산조정이나 가산지불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경영단위 직불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 중에서 중요한 다수의 품목이 대상이 된다.

다. 지불방식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등 네 가지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밭농업 직불제는 밭농업의 다양한 품목이나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는 경우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장차 경영단위 직불제로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밭농업 구조개선이나 다원적 기능 발휘, 지역자원 보전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불방식은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되, 제주 밭농업의 구조개혁과 다원적 기능 발휘 등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설계 시 고려사항을 감안하는 경우 ‘고정지불’과 ‘가산지불’을 양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고정지불은 현행 네 가지

직불제를 근거로 지불하되, 친환경농업(저투입)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전체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가는 밭과 초지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단가, 논은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을 단가로 한다.

또한 가산지불은 고정지불에 추가하며, 개별프로그램의 이행조건 준수와 연계하여 지불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구조개혁, 경관형성, 자원보전, 다원적 기능 발휘, 소득증대 등을 유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조합하여 실시된다면 농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가산지불 프로그램은 이상과 같은 유형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등 네 가지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밭농업 직불제는 밭농업의 다양한 품목이나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는 경우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장차 경영단위 직불제로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밭농업 구조개선이나 다원적 기능 발휘, 지역자원 보전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불방식은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되, 제주 밭농업의 구조개혁과 다원적 기능 발휘 등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설계 시 고려사항을 감안하는 경우 ‘고정지불’과 ‘가산지불’을 양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고정지불은 현행 네 가지 직불제를 근거로 지불하되, 친환경농업(저투입)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전체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가는 밭과 초지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단가, 논은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을 단가로 한다. 또한 가산지불은 고정지불에 추가하며, 개별프로그램의 이행조건 준수와 연계하여 지불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구조개혁, 경관형성, 자원보전, 다원적 기능 발휘, 소득증대 등을 유도한다.

따라서 가산지불 프로그램으로는 ①친환경농업형, ②구조개혁형, ③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경관보전형, ④소득증대형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조합하여 실시된다면 농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가산지불 프로그램은 이상과 같은 유형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5.12 새만금 농업지역 개발방안 연구

연구자: 오내원, 박시현, 우병준, 김정섭, 허윤진, 김창호, 김영단
연구기간: 2007. 10 ~ 2008. 11

1. 연구의 목적

새만금 간척지는 2006년에 방조제와 배수갑문 공사가 끝나고 방수제와 토지조성 공사를 앞두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부토지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정부는 새만금의 다목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등에 2차에 걸쳐 연구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정부 방침은 새만금간척지를 농업지역뿐만 아니라 산업, 관광, 도시, 에너지단지, 환경용지 등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농업용지는 전체 토지의 30%인 8,570ha로 조정되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기본방침에 따라 설정된 농업용지의 이용 방안과 최적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제2장과 3장에서는 경제사회여건 변화 전망에 기초하여 새만금 농업지역개발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관련 개발계획, 선행연구, 외국의 간척지 개발 사례를 참고하였다.

제4장에서는 비전에 부합하는 농업지역개발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과거 수도권 위주의 농업을 벗어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군 및 작부체계의 선정과 타당성 분석, 미래지향적 농산업클러스터와 농촌관광사업 구상, 농촌마을 등 주거지역 조성 방안을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발 아이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능별 적정규모와 위치, 단계별 개발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3. 연구결과

가. 개발목표와 비전 설정

관련 계획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새만금 농업개발의 주요한 구성 요소를 ① 대규모, 다목적, 효율적인 식량생산기지, ②친환경·고품질 농산물재배단지, ③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비한 바이오에너지작물 재배 단지, ④농업과 제조업, 연구기능이 결합한 첨단농산업클러스터, ⑤환경, 생태를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 단지로 추출하였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국가와 지역발전과의 부합성, 경제·기술적 타당성을 기초로 평가하여 핵심요소를 압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전을 「인간·가치·환경이 함께 하는 복합농산업단지」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클러스터, 생태·환경 중심의 그린투어리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나. 농업용지 기능 구성과 면적 배분

새만금 농업개발에 도입하여야 할 기능을 크게 농업생산, 농촌관광, 지원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농업생산은 국내외 식량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복합곡물단지,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자본·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는 원예단지로 구분하였다. 새만금 농업지역의 생태, 경관,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으로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지원기능으로는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농촌마을을 배치하였다. 한시적으로 설치될 묘목장과 유보용지의 개발계획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각 기능별 목적과 구성 요소, 규모는 아래와 같다.

- 복합곡물단지(4,700ha)
 - 토지이용극대화과 안정된 식량기지 확보, 규모화·기계화 영농
 - 논 기반 식량작물을 재배하되, 동계 맥류와 경관작물 재배
- 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570ha)
 - 경종과 연계한 친환경축산을 실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
 - 한우, 낙농, 승마 단지와 조사료포
- 원예단지(2,600ha)
 - 자본/기술집약형 첨단 수출농업단지
 - 시설채소와 화훼 생산단지
- 농업테마파크(100ha)
 - 친환경, 생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업관광의 중심지
 - 전시, 관람, 체험, 휴양, 교육 시설
- 첨단농업시험단지(170ha)
 - 첨단농업기술과 육종, 친환경농업 기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견인
 - 연구시설과 시험포, 교육시설
- 농산업클러스터(300ha)
 - 농업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수출지향형 식품산업 유치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 자재 및 설비, 수확 후 처리, 유통산업이 입지한 지원센터와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가공산업단지
- 농촌마을(130ha)
 - 직주근접의 원칙에 입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근거지 형성

- 8개 마을을 조성하되, 생태건축과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갖춘 에코빌리지를 1-2개소 도입

다. 단계적 개발방안 등 마스터플랜

농업용지 개발은 방수제 건설 시점과 농업용지 이용 정착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1단계는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방수제 완공 시점까지, 2단계는 방수제 완공 이후인 2016~2020년까지, 3단계는 2021년 이후 농업용지 이용 정착 단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새만금 토지의 처분은 임대분양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용도지구별로 사용 조건 - 농업용인 경우 작목이나 농법, 비농업용지의 경우 당초 예정 용도 - 에 대한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시하였다. 임대차기간은 복합곡물단지는 현재처럼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되, 시설투자가 필요한 축산과 시설원예 부지, 비농업 용도의 토지는 경영안정을 위해 20년 내외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5.13 대구광역시 도시근교농업 종합발전대책 연구

연구자: 박문호, 국승용, 윤병석, 이문호, 김태균, 조재환
연구기간: 2007. 11 ~ 2008.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하에서 광역시 전체 및 각 지역별로 처한 농업·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근교농업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①정부의 『농업·농촌 발전대책』 119조 투융자계획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의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②현 시점에서의 농업·농촌의 부존자원 등의 실태조사 이후 대구광역시의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 ③특화작목(상품)의 선택 및 집중 육성 방안 모색·제시 ④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득이 보장되는 부문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은 ①정부의 『농업·농촌 발전대책』 119조 투융자계획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의 농업·농촌발전방향을 설정하고 ②현 시점에서의 농업·농촌의 부존자원 등의 실태조사 이후 대구광역시의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 ③특화작목(상품)의 선택 및 집중 육성 방안 모색·제시 ④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득이 보장되는 부문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 대구광역시 농업·농촌의 SWOT분석

- 강점으로는 팔공산과 비슬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이 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 그리고 농산물의 가공과 관광이 연계된 복합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임. 또한 대구 및 경북권의 농산물 소비지 유통거점 등 대규모 소비지가 입지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약점으로는 고지가, 영세규모의 농산업으로 인하여 규모화 영농이 곤란하다는 점이 있음. 또한 부재지주 중심의 농지소유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며, 농업 인력이 고령화되어 선진농업 수용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농산업의 추진력을 얻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음.
- 기회(Opportunity)요인으로는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확대, 신선편이 식품의 수요증대로 인한 친환경 농업수요의 증대와 도시민들의 테마관광, 체험관광 등 관광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위협(Threat)요인으로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급속한 도시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의 난개발 우려를 들 수 있음.

□ 대구광역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 대구광역시 농업·농촌의 장기발전 비전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녹색산업화”로 설정함. 이를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다운 자연환경의 개발 및 보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함.
- 목표달성을 위하여 농산업의 혁신과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한 농업, 농촌, 농업인 3개 분야와 지역특화품목의 복합산업화, 친환경 생태·관광농업기반의 구축,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시스템 개발 등의 7개 과제를 설정함.
 - 지역특화품목의 복합산업화
 - 친환경 생태·관광농업기반의 구축
 -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지원의 활성화
 - 농촌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

- 도·농 교류형 농업·농촌 관광프로그램 개발
- 농업·농촌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는 매력 공간 창조
-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시스템 개발

□ 사업개발 내용

권역	발 전 방 향
팔공산·금호강 권역	대구 인근산업 거점육성 팔공산 친환경 농업체험관광벨트 구축 팔공산 산림휴양 및 문화시설 확충 화훼산업 특구조성
비슬산·낙동강 권역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한우 생산·유통체계 구축 농업·농촌 체험단지 조성 현품 IC 인근 농식품 유통단지 조성
대구광역시 공통 권역	동부권 종합유통센터 설립 대구 농산물 중심의 학교급식체계 구축 축산 브랜드육 타운 조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공동브랜드 마케팅 추진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시스템

5.14 평택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자: 황의식, 국승용, 성주인, 조용원
연구기간: 2007. 12 ~ 2008. 11

1. 연구의 목적

- 평택시는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농림투융자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됨.
- 평택시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하에서 시 전체 및 각 읍·면이 가진 농업, 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시 전체를 총괄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농업·농촌의 미래 모습과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와 영향에 대해 전망함.
- 평택시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평택시 인구 및 경지이용 현황, 평택시 산지유통 현황, 평택시 농촌지역 생활환경 현황에 대해 조사함.
-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생산자들의 요구사항과 방향설정, 평택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함.

- 평택시 농업과 농촌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 농업생산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농지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의 역할이 있음.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비경제적 가치를 평가함.
- 평택시 농업농촌의 미래비전은 도시화, 산업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과 경관을 제공하는 농업·농촌으로서 유지, 발전하는 것으로 설정함. 또한 평택시 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3. 연구결과

- 평택시 농업·농촌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첨단농업단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산지유통회사, 농식품 R&D 기반강화, 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전략을 제시함.
-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농업단지 조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방식의 발전전략을 제시함. 클러스터형 발전전략은 참여부문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자체 내부 성장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임.
- 평택시 산지유통을 전담하는 산지유통주체를 먼저 육성하고 이 조직을 통해 산지유통시설과 브랜드 관리를 맡김으로써 산지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함.
- 농업발전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기술개발, 혁신 및 인력육성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임. 평택시 농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 R&D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농산물시장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경영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평택시 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을 강화함.
- 농촌지역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추진함. 평택시 농촌개발전략은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농업을 담당하는 일터이면서 지역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일터로서 가치를 높이도록 만들어야 함.

5.15 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자: 오내원, 채광석, 이명헌

연구기간: 2007. 11 ~ 2008. 6

1. 연구의 목적

WTO와 FTA 협상을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농업보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농업정책은 가격지지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직접지불제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농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농가에 분산·지급되고 있어 소득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된 직불제가 쌀 농업에 편중되어 있어 축산이나 시설원예와 같은 품목에 대한 소득안정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점,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기본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불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소득보전과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과급영향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발전의 과제 속에서 향후 직접지불제의 방향, 특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제2장에서는 UR 이후 도입된 직접지불제 관련 법제도와 개별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리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직접지불제가 농업구조변화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분석하여 직불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소득안정직불제에 관한 최근의 제도변화와 평가를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품목횡단적 직접지불제와 미국이 최근 통과시킨 새로운 농업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농정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직접지불제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방향을 검토한 후, 대상농가와 품목, 소득지표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 다른 직불제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3. 연구결과

직불제가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품목별 소득보전에서 농가단위 소득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앞으로 주요국과의 FTA가 체결되고 DDA 타결이 이루어지면, 개별적인 개방조치와 품목별 소득변동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모호해지면서 전체 농업의 소득감소와 불안정성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직접피해의 보상만으로 농가의 소득 변동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방 이후 농업소득 전체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 소득보전은 피해를 입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연계성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직불제가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연계하지 않아야 하지만 생산비연계로 한번 전환하면 다시 생산연계로 돌아오기 어려우므로(비가역적) 신중하여야 한다. 향후 국제 농산물 수급상황의 불안정성과 교역조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식량자급률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당분간 생산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품목연계보다는 생산의 유지나 농지의 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소득보전보다는 경영안정/리스크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정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전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이다. 전업농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 확대와 함께 자연재해, 시장가격 변동 등 농업경영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민간의 금융·보험시장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불제를 평균적인 소득보전을 넘어 경영위기의 대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전국 평균 가격과 단수를 기준으로 기준조수입을 설정하고,当年 평균조수입이 기준조수입보다 작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한다. 단, 품목별 조수입의 변동을 농가 단위에서 합산하여 시행한다.

안정화 대상 소득지표로는 농업조수입과 농업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소득과약을 위한 통계치는 몇몇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낮아 농업소득을 지표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농업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으나, 축산과 가온형 시설원예에서는 조수입에서 사료비와 유류비를 공제한 조정수입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비목은 경영비 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이 심하며 통계치의 확보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동기준을 90%로 하고 보전비율은 소득감소 비율의 크기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동기준이 너무 높으면 농가의 책임의식이 저하되고 비농업부문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 발동기준이 낮으면 경영안정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평균보전률을 80%로 하되 소득하락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기준조수입과 추산조수입의 차액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10-20%인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차액의 70%, 20-30%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차액의 80%와 조수입의 7%, 30%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차액의 90%와 조수입의 15%를 지급한다. 이 때 과거의 직불금 등을 기준조수입에 포함한다.

정책대상은 전 농가에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득안정직불제가 전업농을

주목표로 설정되었지만, 대상 농가의 규모나 연령을 인위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산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포함하되, 법인 소유의 경영농지와 법인 명의의 임차계약 농지만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소득안정직불제 프로그램에 신청서와 함께 가입금을 납입하며, 프로그램 관리기관이 농가등록사항과 신청서를 검증하여 가입을 승인한다.

농가계층 간, 저소득 도시근로자가구와의 형평성, 전업농의 실질적 소득보전 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지급상한을 5천만원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거의 모든 농가(99.6%)가 50%까지 조수입이 하락할 경우에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한 상한이 된다.

농가 단위의 정책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나 통계치 확보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평균 가격과 단수 등 통계치 확보가 용이한 축산(낙농 제외), 과수와 콩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들 품목은 한미FTA로 비교적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채소와 시설원예, 특작에 대해서는 검증 방법이 마련되는 대로 포함하기로 한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기본적으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 발효 시기에 FTA피해보전직불제를 대체하여 도입할 수 있다. 농업소득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인 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정직불금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보조이므로 이는 별도로 하고, 변동직불제는 정책목적이 유사하므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 직불제의 소득보전 수준에 차이가 많으므로 바로 통합은 어렵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이 재산정될 2013년 새로운 여건 속에서 통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16 희생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업경영희생 지원방안 연구

연구자: 황의식, 정호근, 조용원
연구기간: 2007. 12 ~ 2008. 3

1. 연구의 목적

- 농가파산의 위험이 도래한다고 해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와 같은 과거의 지원방식으로 농가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 따라서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부실농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적절한 가격에 농가의 자산을 매각하여 농가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새로운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하지만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번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농가부채대책의 체계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이번 연구에서는 농가유형별로 농가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부문 신용회복 제도를 검토함. 또한 벤치마킹 사례로 미국의 가족농어업인 채무조정제도를 조사함.

- 농업부문의 시장개방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농업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음. 농가부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농가를 부채 규모와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함.
 - 부채대책이 필요한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채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농가를 추출하여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함.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규모가 큰 유형에 위치할 확률이 높으므로 부채비율은 중요한 지표가 됨.
- 농가경영회생지원방향의 설정을 위해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과 기타 제도와 차별성을 부각시킴.
 - 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주는 농업분야에 한정된 ‘농업인의 부채조정’ 특별지원법이 필요함.
 - 워크아웃방식의 농가경영회생지원대책은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부실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산경매로 몰려 혈값에 자산을 상실하는 문제를 개선하며 적절한 가격에 농가의 자산을 매각하여 농가 스스로 부채를 축소하는 방안임.
 - 농가경영회생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실농가가 지원을 신청하면 평가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함.

3. 연구결과

- 농가경영회생 지원대상 농가의 범위에 따라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이 규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임. 지원대상농가로는 부채문제가 심각한 농가로서 농업을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가를 일차적으로 선정해야 함.
- 농업용 부채만을 한정하여 지원대상 부채로 설정함. 또한 농지의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도록 함. 이후 농가가 회생하여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 농가경영회생위원회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농가에 자구계획 수정을 권고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명시함.
- 지원농가가 쉽게 회생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후관리 내용은 지역과 농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농가의 자구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해야 함.
 - 지원농가가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파악하여 조치하거나 경영회생위원회에 보고하여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사후관리인을 선정함.

5.17 농협중앙회 자회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황의식, 허주녕, 채광석
연구기간: 2008. 7 ~ 11

1. 연구의 목적

- 선진국에서도 농산물 시장 자유화에 대응하여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도 많이 제시되었음.
- 협동조합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함. 농협중앙회에서도 많은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경영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농업경제부문에 (주)농협유통을 비롯한 14개 자회사가 있고, 축산경제에 농협사료와 목우촌이 있으며, 신용사업부문에 3개, 교육지원사업부문에 6개 등 총 21개 자회사(손자회사 제외)를 경영하고 있음.
- 반면, 종합유통센터의 일부, 하나로마트사업, 공판장사업 등은 사내분사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협의 경제사업 특히 유통사업

활성화가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회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런데 농협중앙회 자회사는 세분되어 난립되어 있고, 수익성도 낮으며, 전문경영인 체제가 미흡하다는 등 당초의 목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 자회사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농협의 경제사업, 유통사업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특히 농산물 유통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자회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개발 내용

- 협동조합에서의 자회사화의 이론적 검토
 - 자회사화에 대한 전통적 논쟁
 - 협동조합 사업환경의 변화
 - 협동조합 조직유형의 다양화
-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운용현황
 - 자회사 현황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에서 자회사 위치
 - 농협자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 농협중앙회 자회사 관리감독체제
- 선진국 협동조합의 자회사 운영사례
 - 일본 전농의 사업체제와 자회사 사업의 현황과 자회사체제 실태조사
 - 독일농협의 자회사 바이바 사례

- 유럽 농업협동조합에서 자회사체제에 대한 조사: (예)네덜란드 그리너리(주)와 협동조합인 그리너리 BV의 관계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 일선조합 설문조사 분석
- 농협중앙회에서 자회사 활성화 방안
 - 사업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화
 - 자회사 활성화 방안
 - 중앙회 자회사에 일선조합 공동투자 확대
 - 자회사 관리감독 개선방안

3. 연구결과

- 이 연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체제의 효율적인 개편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의 성과를 얻고 나아가서는 유통사업 강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임.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체제의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방향을 얻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사업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마련하게 될 것임.
- 보다 효율적인 자회사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앙회사업과 일선농협 사업의 경합관계, 경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됨. 자회사 운영에서 일선조합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두 사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자회사체제를 도출함. 이러한 사업 경합관계의 해소에 따라 농협이 하나의 그룹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써 일선조합의 산지유통사업과 중앙회 도매 및 소매유통사업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게 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개편함으로써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지만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이용 조합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운영방안을 유지하도록 함. 농협자회사의 출자와 지배구조 개선방향 등에 대한 농협법상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적 틀의 기초를 제공함.

5.18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박문호, 김정섭, 허주녕
연구기간: 2008. 10 ~ 12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하도록, 정착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 내용은 첫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정책의 의의와 필요성을 농어촌 인구 변화의 추이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측면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둘째, 귀농 및 귀촌 공동체 또는 사회집단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국내외 실태 및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결과

- 농가인구 및 경영주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후계자 보유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영승계의 가능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지역의 과소화 유발에 따른 폐해

- 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구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가구의 소비, 복지 등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농산업의 지속성과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 재촌농가의 농업인력 재생산 기반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 쌓았고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귀농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도 귀농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농어촌 이주 도시민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의 농촌생활에 따른 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했다.
 -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종전의 귀농교육 및 귀농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현지 정착과 관련한 쾌적한 정주환경까지를 고려한 종합지원방식으로서 처음 시도되는 귀농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농어촌뉴타운”이 낙후된 주변지역의 고령농업인과 융화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동참하는 선진적인 지역만들기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주택, 생활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의 각종 혜택이 집중될 경우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기존마을과 격리된 독립형 주택단지는 기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 10개의 귀농사례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귀농자 집단의 형성이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지되어야 함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전업적인 농업활동만으로는 귀농자 가구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

에서 겸업소득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연락처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 정착단계에 접어든 귀농자 집단들이 지역사회에서 영농활동 외에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앞의 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몇 가지 제공한다.
 - 첫째, 도시에서 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얻은 귀농자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귀중한 인적 자본으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 둘째, 사례들에서 현저하게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귀농자들의 활동 내용은 ‘도농교류’, ‘귀농·귀촌 지원활동’, ‘농업생산자 조직 참여’, ‘마을단위 개발사업 참여’ 등이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귀농하기 전에 영위했던 도시적 생활의 경험과 귀농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귀농 이후에 도농교류나 귀농·귀촌 지원 활동과 같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동기와 역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셋째, 마을 단위의 귀농자 공동체나 개별 귀농자 사례와는 달리 읍·면 내에 상당수의 귀농자들이 존재하는 거점형 귀농 사례들(진안-1, 홍성, 남원)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활동이 현저하다. 이는 마을 수준을 넘어서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속한 읍·면 수준 지역사회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 한편, 전문가 토론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과정의 단계별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야 한다.
 - 둘째, 사업추진 지역의 기존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셋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주거, 경제활동, 지역사회통합 등 다각도의

-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넷째, 귀농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주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주 후 적응과정을 돕는 데에는 민간부문의 전문가 또는 NGO의 참여가 필요하다.
 - 다섯째, 귀농자들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체에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성공적인 지역 내 정착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먼저,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귀농은 개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기반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이므로 오랜 기간의 숙고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귀농 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와 물적 지원이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입주 전’과 ‘입주 후’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단계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 입주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 이주하려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보(영농기반 확보 가능성, 생활에 필요한 의료·교육 등 서비스 공급 실태)
 - 기초적인 영농 기술
 - 지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관한 정보
 - 주택, 경관 등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입주 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 적합한 품목 선정과 재배(또는 사육) 기술에 대한 심화된 교육(예: 지역 영농조직에서의 인턴 연수제도)
 -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농지, 농기계 등)

-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 귀농가구의 취업소득 기회(예: 지역사회 문화·복지·교육·평생학습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비농업 부문 취업 알선)
 - 기존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 지역사회 정착 과정 중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수시적 상담과 조언(예: 귀농자 멘토링)
- 둘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조성될 농어촌뉴타운의 입주자들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민들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 양성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당초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 전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이해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 기존 주민과 입주예정자 간 친교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와 주민 간 친교 프로그램(예: 만남의 날 행사 등)
 - 기존 주민이 주도하는 입주자에 대한 지역이해 프로그램(예: 지역투어 및 상담 등)
 - 농어촌뉴타운에 조성될 커뮤니티 공동시설의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기존 주민과 입주예정자의 협력적 설계 활동
 - 기존 주민의 소득증대 기회 증진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구 인근 권역에서 각종 소득개발 정책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와 기존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득사업 지원 프로그램(예: 특화작물단지 조성, 공동농식품 가공·유통 법인 창립 지원 등)
 - 기존 주민의 복지·문화·교육여건 개선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구 인근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관련 개발사업 연계 추진(예: 거점면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의 인적 역량을 활용한 ‘자치적 복지 프로그램’ (예: 방과 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 재가노인 복지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 셋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담당 조직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어촌뉴타운 조성에 따르는 하드웨어 정비(부지 확보 및 건축과 관련된 과업)
 - 지역사회 주민 및 지역 밖의 잠재적 입주자에 대한 홍보
 - 입주자의 입주 전·후 단계 소프트웨어적 지원(각종 상담, 교육, 자금지원 등과 관련된 과업)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검토와 조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외 민간부문 단체, 주민, 입주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농촌 시·군의 어느 한 실과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처럼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전담할 부서 또는 TF팀을 구성하고 민간부문과 협력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예: 진안군의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5.19 KREI-ASMO 2008 운용·개발 연구

연구자: 조영수, 이대섭, 김태훈, 박상미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 국내외 농업환경과 정책이 최근 빠르게 변함에 따라 KREI-ASMO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 또는 ASMO를 대체할 농업부문 모형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를 수행
- 대내외적인 모형 관련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에서 개발되고 있는(부분적으로 완성된) 모형의 과도기적 운용

2. 연구개발 내용

- 2008년에는 「KREI-ASMO 운용·개발 연구」를 모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수행함으로써 ①「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를 통한 모형 개발사업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②연구원 내외의 모형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
-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분석하여 모형의 민감도, 반응 방향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새로운 모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조

3. 연구결과

가. KASMO 검토사항

- 경종작물의 경우 기존의 경지배분모형에서 벗어나 품목별 재배면적합수를 개별적으로 추정. 재배시기가 비슷하여 경합되는 품목들의 가격 또는 수익성(기대순소득)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품목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나, 품목이 40여개로 대폭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품목 각각의 면적반응과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전체면적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총 32개 품목에 대해 수입수요함수가 도입되어 있으나, 수입관련 자료의 세분화 및 추가적인 축적이 필요. 즉, 일부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는 있지만 필요한 경우 수입형태별(신선, 가공 등), 수입국가별로 관련 자료를 세분류하여 수입수요함수를 확대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TRQ 대상품목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고, 쿼터 내외도입물량에 대한 상이한 관세율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설정에 대한 고려 필요
-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민감도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작업의 지속적인 수행 필요
 -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모형에 외생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경제변수에 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설정·분석함으로써 모형의 반응 정도, 방향성을 검토·개선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KASMO에는 부분적으로 정책관련 변수들이 도입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정책변수의 추가적인 개발과 도입 필요
 - 국제협상 특히 DDA, FTA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다자간 내지 양자협상에 대한 모형의 분석 적합성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나. 향후 과제

- 전망 및 정책실험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모형(econometric model)은 경제이

- 론과 실제현상에 보다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 특히 ‘자료수집 - 추정 - 구조조정 - 전망 - 결과평가 - 모형보완’의 일련의 작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향후 새로운 방정식 또는 정책변수를 도입하거나 또는 모형의 구조를 전환할 때 기준 전망결과 뿐만 아니라 정책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의 비교·검토 등 광범위한 접근 필요
 - KASMO는 방정식 546개, 항등식 813개, 내생변수 1,359개, 외생변수 358개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모형이므로 이러한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운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
- 모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품목 전문가들의 판단과 모형 결과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모형 운용자와 이들 간의 지속적인 토의 및 협력 필요

5.20 OECD-Aglink 2008 운용·개발 연구

연구자: 조영수, 이용호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 OECD 사무국의 Aglink 모형을 도입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능력 제고
- OECD 회원국으로써 사무국의 작업에 대응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
 - OECD 사무국과의 협력 지속(모형개발 및 통계자료 정비작업 지원)
 - Aglink 모형의 유지·개발 및 모형의 활용과 관련된 회의 대응(OECD Commodity Group Meeting, Aglink User Group Meeting)

2. 연구개발 내용

-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국제곡물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미친 영향을 밀, 잡곡, 유지종자 등 주요 곡물을 대상으로 분석
- 이상기후로 말미암은 주요 곡물의 생산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러한 기후변화가 향후 국제곡물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또한 도출된 시나리오별 국제곡물가격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시장의 변화가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 제시

3. 연구결과

-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시장 수급 변동 분석
 - 기후변화가 세계 곡물시장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밀, 잡곡,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주요 생산국의 단수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1(기준 단수전망치 5% 상향 조정 + 이상기후에 따른 단수 충격)의 경우 밀, 잡곡, 유지종자 국제가격은 기준전망 대비 평균 각각 1.3%, 3.9%, 3.8% 감소함.
 - 시나리오 2(기준 단수전망치 5% 하향 조정 + 이상기후에 따른 단수 충격)의 경우는 각각 6.1%, 10.4%, 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축산부문 파급 영향 분석
 - 배합사료가격은 시나리오 1의 경우 축종별로 기준전망 대비 평균 2.5%~3.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축종별로 기준전망 대비 평균 6.1%~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류 및 계란 생산량은 시나리오 1의 경우 배합사료가격이 하락하여 경영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기준전망 대비 평균 0.3%~1.3% 증가하고, 시나리오 2의 경우는 반대로 생산이 위축되어 기준전망 대비 평균 0.7%~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원유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생산량이 기준전망 대비 미미한 수준 하락하고, 시나리오 2의 경우엔 평균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지가격은 시나리오1의 경우 육류 및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축종별로 기준전망 대비 평균 0.5%~1.9% 하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시나리오 2의 경우는 가격이 평균 1.1%~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유농가수취가격은 시나리오 1의 경우 배합사료가격 하락으로 경영여건이 호전된 상황이 반영되어 기준전망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된 시나리오 2의 경우엔 가격이 평균적으로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액은 시나리오 1의 경우 원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육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준전망 대비 평균 0.2% 감소하고, 시나리오2의 경우는 원유를 제외한 모든 육류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

구하고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생산액이 기준전망에 비해 평균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와 소득은 시나리오 1의 경우 생산액은 기준전망 대비 감소했으나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평균 각각 2.0%, 2.2% 증가하고, 경영여건이 악화된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생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준전망 대비 평균 각각 4.3%,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6. 국제 농업 연구



6.1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 연도)

연구자: 최세균, 신유선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유럽, 미주 등의 지역화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자유무역지역, 경제공동체,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경쟁력, 관세장벽 등을 분석하고, 교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 변화와 국가별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농업부문의 협력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동아시아 FTA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GTAP 모형에 의하면 동아시아 FTA로 역내 국가들의 GDP는 한국 2.68%, 일본 1.41%, 중국 0.46%, ASEAN 0.7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가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기존의 역내 교역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아시아 역내 곡물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은 쌀과 옥수수 정도에 불과하다. 쌀은 중국과 ASEAN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2005년 동아시아 역내 쌀 교역 규모는 연평균 5억 9,000만 달러이다. ASEAN과 중국은 장립종과 중·단립종으로 분리된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단립종 시장에서는 중국이 ASEAN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GTAP과 GSIM으로 쌀의 시장개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쌀 수출은 2억 9,000만 달러(GTAP)에서 2억 5,000만 달러(GSIM) 증가하고, ASEAN의 쌀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GTAP)에서 6,000만 달러(GSIM)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각각 7.6%, 9.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증가는 각각 8,200만 달러,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GSIM 모형에 의한 역내 농산물 교역 변화도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GTAP 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출 증가는 중국 2억 5,000만 달러, ASEAN 6,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쌀 수입 증가는 한국 5,200만 달러, 일본 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나 GTAP 모형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교역 증가는 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교역은 중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교역 증대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4,0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일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온대성 과일과 열대성 과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3개국은 모두 동남아시아 시장에 온대성 과일을 수출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는 열대성 과일을 동북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의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온대성 과일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한국과 중국의 배, 중국의 사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SEAN은 바나나의 역내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의 경우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과일류 수출은 사과와 배 각각 1,000만 달러, 포도 600만 달러 규모이다. 한국의 사과, 배 수출은 각각 100만 달러 증가하고, 포도 수출은 1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바나나 수출 증가는 600만 달러 수준이며, 파인애플 수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중국이 수출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양념채소 역내 수출 규모는 마늘 1억 5,000만 달러, 고추 7,000만 달러, 양파 4,300만 달러 수준이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마늘 수출은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1,500만 달러). 중국의 양과 수출도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54%가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이다.

육류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가축질병 문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거의 없다.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역내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내에서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돼지고기에 있어서 일본 및 ASEAN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닭고기의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다. 한국은 돼지고기를 일본과 ASEAN에 수출하고, 닭고기를 중국과 ASEAN으로부터 수입한다. 중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ASEAN에 수출하지만 닭고기는 ASEAN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한다. ASEAN은 닭고기를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돼지고기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교역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 FTA로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일본 및 ASEAN 시장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육류의 교역 변화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연구결과

동아시아 FTA에 의한 중국의 수출 증가는 50억 달러, 수입 증가는 15억 달러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쌀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를 기초로 한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역내 보상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쌀, 사과와 배 등 일부 온대성 과일, 양념채소 등이 양자간 FTA에서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FTA 협상에 있어서는 일부 민감품목만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대상으로 남게 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기타 품목은 실질적인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동아시아 FTA 협상 이전에 역내 교역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산업 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FTA 등 시장통합 협상 이전에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필요하다. 동식물검역, 통관절차, 규격, 표시, 표준 등을 조화시키고 정보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적절한 기구를 역내에 설치함으로써 시장통합의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FTA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따른 유해 식품 및 유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 유해 병해충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통의 표시, 규격, 인증 등 통관 및 유통 관련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부존 정도, 기술발전 정도, 농업의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부존자원 집약도가 다르고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구조조정도 상호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 교역 활성화 잠재력과 필요성은 높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의 보완 및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유전자원 교류, 저장·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단일시장을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 사업 전개 필요하다. 역내 국가들의 유용한 유전자원 교환 및 활용, 친환경 농법 관련 기술, 유통 및 가공 기술 등의 교류 등은 교역원활화와 경제통합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6.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연구자: 김영훈, 권태진, 남민지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 주요 농림산물 반입 현황을 정리한다. 둘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셋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 실태를 품목군 별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실태와 소비실태를 파악해 반입과 관련된 문제를 도출한다. 다섯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농업부문의 기본 입장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추이와 반입 실태,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과 소비 실태, 관련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현황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반입현황을 정리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실태는 제도적인 고찰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둘러싼 기본입장과 관련제도, 그리고 반입관리방식 등을 고찰해 정리했다. 북한산 농림산물 국내 유통은 국영무역대상 품목과 일반 품목으로 구분해 고찰했으며, 소비 실태는 소비자 조사를 토대로 구매 실태와 선호를 분석해 보았다.

3. 연구결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남북교류 확대라는 대북정책의 입장과 국내 시장 안정화라는 농업정책의 입장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에 의하면 남북한 교역은 내국 간 거래이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법,’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은 포괄승인품목으로서 무관세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입장에서는 국내 농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으로나마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입장을 반영해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물품(통일부 고시)’에서는 189개 품목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특별히 지정해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반입과 유통에서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반입승인품목의 지정과 반입승인단계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밖에 통관 및 물품인수 과정의 문제와 유통 과정의 문제는 관리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장기적인 농업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자유로운 반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점차 제거한다. 둘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수립한다. 셋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증대에 따른 국내 해당농가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간에 교역을 촉진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규범이 완비되고 안정성이 증명될 때까지 현행 반입관리제도의 틀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단기적인 농업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농림산물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남북한 당국자 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북한산 농림

산물 반입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원산지 증명과 확인과 관련된 문제 해결,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는 등 물류비 절감, 이들 문제를 논의할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 등이다. 북한과의 공동 노력과는 별도로 국내의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북한과의 공동 노력과는 별도로 국내의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 제도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우선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조정과 승인절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식량작물, 육류, 유제품 등 식량용 농축산물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반입금지품목으로 따로 관리하는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대상 품목과 유사·대체관계에 있는 품목들 중 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있다. 향후 국내 수급 동향, 현행 농산물 관세제도의 문제점, 포괄승인품목에 대한 민간의 반입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의견 접수와 수렴 창구가 단일화 되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 반입 승인 시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국내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관측이 실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여부 결정에 관측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농림산물 품목 중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될 경우 해당 북한산 반입물량을 공급량에 반영한다면 연간 반입한도물량의 증량이 가능해지며 남북한 교역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반입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농림산물과 육로 운송으로 반입되는 농림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순 반입 시의 한도물량과는 별도로 반입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국영무역품목의 경우 협력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북한산 농림산물 유통업자와 소비자 면접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있다. 우선 국영무역대상 품목의 국내유통 단계에서는 품위가 낮고 정선상태 및

포장이 불량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수도 지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선과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해 계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교역이 가진 고유의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협의뿐 아니라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반입관리제도가 더 심화되어야 한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유통업체 및 최종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최근 원산지 표시제도가 강화되어 북한산 농림산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반입 및 유통 참여자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3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 구축 및 전망

연구자: 이대섭, 성명환, 전형진, 윤형현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자포니카 쌀 주요 수출국인 이집트가 잠정적으로 수출중단을 선언하면서 2008년 4월부터 자포니카 쌀 가격이 급등추세를 보였다. 자포니카 쌀 수출입국의 수급 실태와 국제 무역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들의 수출입 및 수급 분석을 통해 국제시장가격 및 수급 전망치를 제공하는 자포니카 쌀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은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및 국별 수급 전망부문, 그리고 국제시장 수급전망부문으로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각 국별 하부모델은 재배면적, 단수, 일인당 소비량, 이월량, 수출국 수입량, 수입국 수출량, 농가판매가격을 추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기타 외생변수인 기타 소비량은 과거 10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외생으로 처리하였다.

재고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자국 정책에 의한 목표 재고량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월량이 국내 및 국제가격의 추이에 따라 반응하는 국가들은 계량경제학적 추정에 근거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각 국별 모형은 총공급량과

총수요량이 같은 시점에서 각 국별 균형가격이 도출되는 구조를 반영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국별 하부모형에서 도출된 수출입량이 국제 시장에 반입되어 총 수출량과 총 수입량이 같을 때 국제 자포니카 쌀 가격(California No. 1)이 결정된다.

3. 연구결과

추정된 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성치는 미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배면적에 대한 가격 탄성치는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 가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탄성치 절대값이 작게 나타난 것도 주목해할 점이다.

국제 자포니카 쌀 생산량은 2006년 5천 804만 톤에서 2019년에는 6천 429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2006년 1,205만 ha에서 2009년 1,211만 ha로 정점에 이른 후 일본과 한국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2019년 1,197만 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요국들의 단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입량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50만 톤과 248만 톤 정도로 전망되었다. 반면 수출량은 193만 톤, 207만 톤으로 수입 필요량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차이가 국제시장가격을 상승하게 만든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의 잠정적인 수출중단 조치로 인한 수출량 감소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 자포니카 쌀의 소비량은 2006년 5,459만 톤에서 2007년 5,433만 톤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5,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증가분은 중국의 식용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수출량이 수입국에서 필요한 수입량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자포니카 쌀 산업의 전체 재고량은 2006년 517만 톤에서 2007년부터 하락하여 480만 톤에서 476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자포니카 쌀 가격은 2006년 톤당 538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2007년 468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이집트의 잠정적인 수출중단 조치가 발표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 1,06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는 톤당 785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톤당 61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같은 특이한 시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자포니카 쌀 가격은 전망된 가격보다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연구자: 전형진, 어명근, 리경호
연구기간: 2007. 1 ~ 11

1. 연구의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농산물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내 농산물 공급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곡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주산지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주산지 분포의 특성, 변동 요인과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기 상황 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농산물(쌀, 밀, 옥수수, 대두, 사과, 배, 양념채소류)에 대해서 1980~2006년 동안의 성별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활용하여 수급 상황과 주산지 분포 및 변동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첫째, 국내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농산물(쌀, 밀, 옥수수, 대두, 사과, 배, 양념채소류)의 수급 상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중국은 넓은 국토면적과 다양한 자연조건으로 농업 생산의 지역특화(regional specialization)가 뚜렷하다.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경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지역들이 동질화되고 지역 간 차이가 평균화되어 현실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농업지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농업생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셋째, 중국의 농업지역을 6개 지역, 31개 성(자치구, 시)으로 구분한 데 기초하여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대 작물의 주산지 변동 현황 및 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13개 식량주산지 성(자치구, 시)을 대상으로 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품목별 비교우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중국의 농업지역을 6개 지역, 31개 성(자치구, 시)으로 구분한 데 기초하여 과실류(사과, 배),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당근의 주산지 변동 현황 및 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품목별 주산지 변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4대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사과, 배 등 과실류는 성별 통계가 완비되어 있어 분석상의 제약이 없다. 그러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당근은 성별 시계열 통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식량작물, 과실류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채소류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주요 수입지역인 산둥성의 생산 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동향을 정리하였다. 사과와 배는 31개 성(자치구, 시)을 대상으로 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품목별 비교우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섯째, 품목별 주산지 시·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로 대표성을 지닌 1개 시·현을 선정하여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農村經濟研究中心)에 현지조사를 위탁하였다. 위탁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품목별 주산지 시·현의 형성 요인을 비롯해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 품목별 주산지 변동 특성 도출, 변동 요인 분석 등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1980년 이후 중국의 쌀 생산은 남다북소(南多北少)의 주산지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산지가 점차 북부지역(특히 동북3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남부지역의 주요 품종인 장립종의 소비가 감소하고, 북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중단립종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중단립종 쌀은 소비 증가와 수익성 향상으로 동북지역의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북(東北)과 화중(華中)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중단립종 쌀 생산지역으로 점차 화중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의 생산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중지역의 감소성과 동북지역의 흑룡강성은 중단립종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이며 생산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밀 생산은 동북지역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고 전통적인 주산지인 화북지역의 황회해(黃淮海) 평야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화북지역에 속하는 하남성, 산둥성, 하북성은 중국의 3대 밀 주산지로 재배면적 점유율이 약 47%로 주산지의 생산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은 동북3성-내몽고-화북(華北)-서남(西南)지역을 잇는 소위 '옥수수 생산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북과 동북지역은 중국 최대의 옥수수 주산지로 1980년 이후 약 65%의 재배면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밀, 옥수수, 원예작물 간 경합이 심한 화북지역의 점유율은 다소 감소하고 동북과 서북(西北)지역은 증가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옥수수 주산지가 동북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길림성이 전통적 주산지였던 하북성, 산둥성을 제치고 최대 옥수수 주산지로 부상하였다.

동북과 화북지역은 중국 최대의 대두 생산지역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북지역(특히 흑룡강성)의 생산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쌀, 밀, 옥수수, 대두와 중단립종 쌀 등 5개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1980~2006년 동안의 주산지 간 비교우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에서 지역 간 비교우위가 발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사과와 배 생산은 전통적인 주산지였던 발해만지역(화북 일부 및 요녕성)의 생산 집중화가 약화되는 가운데 주산지가 이동,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과 주산지는 사과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는 황토고원지역에 속한 섬서성과 서북지역 성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 주산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특히 서부지역에 위치한 성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점유율 증가는 중국 정부가 서부지역 농촌의 생태환경 복원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서부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황토고원지역을 포함하는 서부지역의 과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1990년대 이후 건설용지 수요 증가와 노동력 비용 상승으로 근교 채소 생산은 쇠퇴하고, 농업지역에 주산지가 형성되어 채소 생산의 규모화와 전업화, 구역화가 이루어졌고 이들 주산지는 수출기지로 발전하였다. 산동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채소 주산지이자 수출기지로서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된 농산업화 모델을 통해 생산의 집중화와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산동성 내 양념채소류의 주산지 변동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 노동집약적 농산물인 채소류의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주요 작물의 주산지 변동은 자연지리적 조건의 우위 또는 열위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품목별 상대수익성도 농가와 지역의 작목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주산지 육성 정책의 의미가 약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은 대표적인 주산지 육성 정책으로서 품목별 주산지 형성과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산지 육성 정책을 통해 주산지의 생산 집중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업+생산기지+농가’가 연계된 농산업화 경영을 발전시켜 품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 수출산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북지역(특히 흑룡강성)은 중단립종 쌀의 주산지로서 생산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동북지역 중단립종 쌀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위협요인이다. 향후 관세화 전환과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동북지역 중단립종 쌀이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 자

급을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필요농지 확보차원에서 주산지 지정 및 육성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들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업화(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밀, 대두는 사료용 및 가공용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수급에서 중국산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작황과 수급 동향, 중국 정부의 식량수출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입선의 다변화 등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양념채소를 비롯한 채소류는 대부분 중국 산동성의 대규모 채소 주산지(또는 수출기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중국산 양념채소류 수입이 국내 수급사정상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 장벽 등에 의한 수입물량 제한보다는 수입농산물 안전성 제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주산지(예를 들어 산동성)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검사기관 설치 또는 현지 주재 검사관 파견 등 산지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엄격하고 효율적인 수입검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업화 경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시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6.5 2008 OECD 농업분야 논의 대응

연구자: 송주호, 정호근, 윤형현
연구기간: 2008. 3 ~ 12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농업분야에서 OECD 농업·무역국 산하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업·무역 작업반, 농업·환경작업반 등)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OECD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농업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국제적인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와 학계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OECD 논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에 OECD 주재 농무관 자리가 없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도 OECD 담당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들이 OECD 논의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OECD 농업분야의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OECD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는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회의(연 3회)와 농업위원회(연 2회)에 참석하여 논의된 의제를 분석하고 논의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각 농업의제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3. 연구결과

KREI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OECD와 공동으로 4월 3일 서초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OECD 무역농업국의 카멜 카힐 과장 외 3인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PSE, PEM, 환경지표 등 OECD에서 각국의 농업 정책을 분석하는 모형을 비롯해 OECD의 정책목적 달성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OECD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농정개혁과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농정 개혁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OECD 사무국직원들은 워크숍 하루 전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한국농정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다음날에는 낙농가, RPC 공장, 원예시설단지, 관광농원 숙박 등 농촌현장을 견학하고 한국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제150차 농업위원회 회의(2008. 5. 13~15)에서는 2009~2010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바이오 연료 지원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농업위원회 심층 평가, 농업과 환경, 농업세계포럼 등이 논의되었다. 2009~2010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논의결과 농업정책 개혁 영역, 농업무역 영역, 농업환경영역 등 3개 영역에 10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이 확정되었다. 농업위원회 평가보고서 초안은 위원회의 작업이 적절성과 효율성은 보통이고, 유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농업위원회와 농업환경작업반의 임무안이 승인되었다.

제151차 농업위원회 회의(2008. 11. 18~19)에서는 농업위원회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농업위원회의 시장작업반 산하 농정작업반(APM) 산하 2개의 품목그룹(육류낙농그룹 & 곡물사료설탕그룹)을 하나의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으로 통합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Part II 사업 중 연구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Research Program: CRP)에 대한 평가에서 CRP 활동의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2010년 농업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주제로 ‘식품과 농업: 글로벌 도전과 기회’, ‘식품과 농업의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정책’, ‘지속적인 미래를 위한 식품과 농업정책’에 대해 선호를 나타냈다. “세계화가 식품체제와 공공정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심포지엄이 2009년 3월 30~31일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2009년 농업위원회 산하 각종 작업반 등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제45차 APM 회의(2008. 2.19~20)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의 농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개혁을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농정개혁 평가보고서』가 공개 승인되었다. 디커플링, 타게팅, 농가소득문제를 성공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칙을 기술한 『정책설계 및 집행에 관한 종합보고서』 역시 공개 승인되었다. 농촌경제에서 농가와 농식품분야의 역할, 농업의 위험관리정책, 바이오 연료 지원정책에 관한 경제적 평가, PSE 관련 제안 등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46차 APM 회의(2008. 5. 20-21)에서는 2008~2017 OECD-FAO 농업전망에서 2017년까지 곡물, 유지작물의 수급전망과 가격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회원국 농정평가보고서는 금년은 요약본만이 발표되는 해로, 2007년 %PSE는 23%로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식품체인에서의 표준, PSE 지표 개선, 일본 농정에 대한 평가초안, 농촌지역경제에서의 농식품분야와 농가의 역할에 대한 국가별 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47차 APM 회의(2008. 10. 13~15)에서는 사무국이 제출한 농업에서의 계약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은 낮은 회수율 및 기술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을 지적하였다. 농식품 부문의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해서 관련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분석내용이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물에 관한 PSE 측정의 대상은 ‘집행’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생산농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식습관과 건강, 영양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 보고서가 논의되었고 최적 위험관리에 대한 논의결과 공개승인이 보류되었다.

6.6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자: 이대섭, 주현정, 최세균
연구기간: 2007. 4 ~ 2008. 2

1. 연구의 목적

농업분야 등 민감 산업의 집중적인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내외 협상전략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산물은 수출 지향적이며 자유 시장체제를 옹호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생산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정책이 1980년대부터 폐지되어 최근에는 완전경쟁시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쇠고기, 와인, 낙농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주요 교역국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모형에서는 품목별로 수입품과 국산간의 대체효과,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기타 국가 간의 수입선 변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모형 내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 부문의 수입 가공식품과 국산 (신선)농산물 간의 대체관계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 연구결과

파급효과 분석의 기준 추정치(baseline)는 한·미 FTA 타결조건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한·호주 및 뉴질랜드 FTA 타결조건을 한·미 FTA의 관세인하만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기준 추정치와 시나리오 추정치의 차이를 한·호주 및 뉴질랜드 FTA에 따른 과급영향으로 정의하였다.

한·호주 및 뉴질랜드 FTA에 따른 과급영향 분석 결과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초기연도(2009년) 52억원, 5년 차에 394억원, 10년차에 9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행 초기연도(2009년)부터 이행 5년차(2013년)까지의 평균 총 생산 감소액은 176억원, 이행 6년 차(2014년)부터 이행 10년차(2018년)까지의 평균 총 생산 감소액은 789억원, 10년 평균 총 생산 감소액은 48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6.7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연구자: 어명근, 전형진, 김윤식, 리경호
연구기간: 2007. 4 ~ 2008. 2

1. 연구의 목적

한·중 FTA 협상 시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연착륙하기 위한 효과적인 양허 전략 수립에 필요한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중국의 농업 개황
-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 한·중 농산물 경쟁력 분석
- 중국의 FTA 농산물 양허사례
- 민감농산물 선정과 양허전략

3. 연구결과

한·중 양국은 2007년 3월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 중 최종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만큼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에서 비중이 큰 주요 농산

물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양허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광대한 토지와 저렴한 인건비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으로 대두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농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토지집약적인 곡물과 면화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노동집약적 농산물인 채소와 과일 재배면적과 육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시장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예상대로 거의 모든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6단위 기준 농축산물 690개 품목에 대하여 2004~2006년 기간 상대국 시장의 MCA 지수를 계측한 결과 중국의 한국시장 MCA 평균지수는 1.6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중국시장 MCA 평균지수는 0.2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없었다. 중국 농축산물 가운데 236개 품목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 농축산물은 40개만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비교우위가 확고한 품목은 중국이 166개인데 비해 한국은 16개로 중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국 간 FTA 체결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허 제외 등 특별조치가 요구되는 민감 농산물을 폭넓게 선정하고 각 품목별로 적절한 양허 방안 등 효과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FTA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중 FTA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 생산액과 변동계수(CV), 경쟁력, 그리고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37개의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그 중 쌀은 WTO에서도 유일하게 관세화를 유예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므로 관세 철폐 예외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품목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관세 일부 인하 또는 장기간 양허, 관세율 쿼터(TRQ) 제공 조건부 현행 관세 유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는

전체 품목이 아닌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FTA’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와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기적인 검토와 조율을 거쳐 양허 품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미 FTA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준의 선결 조건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농업부문 협상의 첫번째 전략은 사전에 FTA 양허 품목을 일정한 범위로 국한하는 ‘제한적 FTA’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다. 중국과 같이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 FTA 체결 시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므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양허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FTA’로 시작해야 한다.

한·중 FTA 농업협상의 두 번째 전략은 FTA 체결 이후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최소한의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연착륙(soft-landing)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도농 간 소득 격차 등 농업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 양허 협상의 세 번째 전략은 FTA 체결 이후 양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농업부문 내에서도 상호 ‘양허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내에서의 상호 양허에 따른 이익이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내 특화를 통한 분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는 농업경쟁력이 우위에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 토지가 광활한 국가에 비해서는 곡물류 등의 비교우위를 이미 상실하여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체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6.8 한·GCC FTA 협상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자: 임송수, 신유선
연구기간: 2007. 7 ~ 2008. 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GCC 회원국의 농업구조와 무역정책,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GCC 간 FTA 체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협상 전략과 국내 대응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 GCC 농업구조와 무역제도
 - 회원국별 주요 농업지표 비교
 - 농산물 무역 동향
 - 관세구조와 무역장벽
- 외국과 GCC의 FTA 협상 동향과 시사점
 - 외국과 FTA 협상 동향
 - 외국과 FTA 협상의 쟁점 및 시사점
-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 주요 품목별 경쟁력 분석

- 주요 품목별 국내영향 분석 및 전망

○ FTA 협상 전략 수립 방안

- 민감 품목 선정 방안

- 양허 전략 수립

3. 연구결과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GCC 간의 FTA 협상 대비를 위한 농업부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해 다루고 있다.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GCC와의 협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한-GCC 간 FT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이해관계는 양국 모두 크지 않으며, 농산물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아 주요 협상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②미니멀리스트(minimalist) 원칙에 따라 농업 분야는 양국의 민감품목이나 부문에 대한 양허를 최소화하거나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GCC와 FTA 체결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은 주로 가공식품과 기호품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품목의 시장접근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④부가가치 기준에 따른 원산지 기준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처지에서 오히려 수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GCC의 재수출 견제와 국내산 제품의 원활한 수출 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GCC와 FTA에서 SG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SG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9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연구자: 권태진, 마상진, 남민지
연구기간: 2008. 4 ~ 8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09~2018년간 10년을 목표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대외협력, 대학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의 기본 방향과 비전 제시
 - 대학의 역할과 비전
 - 발전 방향과 전략
- 대학운영 방안
 - 대학 및 학과 통·폐합, 모집단위 개선
 - 교수 및 직원 업적평가 개선
 - 공간·시설·기자재 관리
 - 재정 및 행정서비스
 - 부속기관의 운영

- 교육, 연구, 대외협력
 - 교육·연구 환경 개선
 - 학생선발 방법 개선
 - 특성화 및 국제화 추진
- 학생지도
 - 학생 후생복지
 - 교육 및 진로 지도

3. 연구결과

경북대학교 농생대는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서 지리적, 산업적, 제도적, 내부적 환경 측면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반면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지역은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업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라 농업정책 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농업생명산업은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 제도적인 면에서 대학 자율화와 정보의 공개,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 향후 대학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경북대학교 농생대 구성원 내부에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대학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학교 농생대의 주된 임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농업생명과학 기술의 개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공유, 학생의 자기 계발과 진로 제시,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농생대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농생대의 비전을 경북대학교의 중기 발전 목표인 GLOBAL100 실현을 위한 농업생명과학 교육 및 연구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생대의 발전목표를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소, 국가 발전과 인류 행복을 추구하는 지식 발전소,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보중계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경북대학교 농생대의 기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인력 양성 ②통합 지식체계 확립과 신지식 창조 ③경북대학교 발전 전략과의 조화를 통한 실천적 발전 ④수요자 지향적 대학 운영

기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발전전략 1: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강화

- 인력 양성계획은 연구 인력, 산업계 인력, 후계 농업인 양성의 3축으로 설정
-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
- 영농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 우수 교수 영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 수요자 지향적 학생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졸업생에 대한 평생 학습제도 도입
- 대구캠퍼스(연구 및 산업계 인력 육성), 상주캠퍼스(축산 및 생태환경), 군위 캠퍼스(후계농업인 육성과 국제농업개발)의 특성화 강화

○ 발전전략 2: 전통 및 첨단 학문의 조화를 통한 연구 성과 확대

- 첨단 생명공학과 전통 농업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
- 농업 및 생명과학 분야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기술 개발
-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농업과학 연구
-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능력 향상과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식품 영양, 위생, 가공, 저장, 유통 등 식품 관련 분야의 협력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 연구 역량 강화
- 지방 농정 지원을 위한 연구협력체계 구축
- SCI/SSCI 등 우수 논문 발표 건수 증대와 연구비 지원 확대
- 대형 연구비 수혜 확대와 연구자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 지식 및 정보의 축적, 활용, 이전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발전전략 3: 산관학 협력 및 국제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정 지원체계 구축
 -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교류 확대
 - 농업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와 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외국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및 연구협력 강화
 - 개도국의 농업 관련 공직자 및 농업인 연수단 훈련 확대

- 발전전략 4: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원 확보
 - 학장 책임운영제 도입을 통한 대학 운영의 효율화
 -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교직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 교수의 업적평가 기준 강화와 질적 평가요소의 비중 확대
 - 연구 지원인력의 능력 배양과 동기 부여
 - 대학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 증대

- 발전전략 5: 시설 확충 및 복지 증진
 - 교육·연구 공간 및 시설 확충
 - 정보화 촉진을 위한 HW 및 SW 보강
 -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증진
 - 학생 장학금 수혜 확대

이와 같은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 실천과제 1: 교육 및 인력 육성
 - 지역의 국립 농업생명과학대학 본연의 역할 수행
 - 산업계 인력 양성과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 후계농업인 양성 프로그램은 통합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후계자

육성정책과 연계

- 산업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생명과학(BT), 식품산업, 농촌개발의 세 분야를 중점 운영하고 전공분야의 취업률 증대
 - 현재의 농생대 학부 전공을 응용생명과학부, 농업인력개발학부, 농촌개발학부의 세 개 중심축으로 운영
- 실천과제 2: 연구 성과 확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농학연구
 -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용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 산업 간 협력체계 강화
 - 농생대 내 관련 전공분야의 조직 통합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연구
 - 대형 연구비 수주를 통한 첨단 생명과학 연구 강화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장학금 제도 확대와 외국 유학생의 유치
 - 연구 지원시스템의 강화와 연구 결과의 성과관리 강화
 - 우수 연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체계 마련
- 실천과제 3: 대외협력 및 봉사
- 농업생명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경북대학교 농생대의 중심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지원 강화와 농업후계인력 육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지역의 농업생명과학 관련 대학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
 - 지역 관련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 바이오벤처타운 조성을 통한 농업벤처기업 유치와 육성
 - 개발도상국 공직자 연수 확대와 해외농업개발 프로그램 참여
- 실천과제 4: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 확보
- 학장의 소속 부설기관 및 학과 평가, 교수 및 직원 평가, 예산 배분권 강화 등 권한 확대와 책임운영제 도입
 -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비한 대학 운영 방식의 효율화와 재원의 안정적 확보
 -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개편과 보상체계 도입

- 실천과제 5: 시설 확충 및 복지 증진
 - 대학의 특성화와 캠퍼스 차별화를 통한 시설 및 공간의 활용도 증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시설 개선과 장학금 수혜 폭 확대

- 실천과제 6: 발전전략의 실천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
 -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매년 엄격하게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확정 → 연차평가 → 평가결과의 반영 → 평가항목 및 지표 조정 → 평가 순으로 평가체계를 확립하되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단계별 평가 실시
 - 가능한 평가지표를 계량화하고 평가대상에 따라 전수평가 또는 샘플평가 실시
 - 내부평가, 자체평가, 수요자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며 평가의 목적, 내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매뉴얼 작성

6.10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연구자: 어명근, 전형진, 리경호
연구기간: 2008. 8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와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협상 논리를 도출하는 한편 양국 간 농업부문의 현안에 대하여 향후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한·중 FTA 협상 시 농업부문의 쟁점을 원산지 규정(ROO), 동식물 검역(SPS),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SG)의 세 가지 분야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에 나타난 원산지 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양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확인 절차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한 데 비해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확인 절차도 중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검증 방식도 중국은 간접검증 위주이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양국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FTA 협정에서 SPS 관련 조항을 장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WTO/SPS 협정에 회원국들의 SPS 관련 권한과 의무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SPS 관련 분쟁해결 절차도 WTO와 FTA의 분쟁해결 규정이 상이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 체결 협상에서 SPS 분야의 중요한 예상 쟁점으로 지역화(regionalization)를 들 수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 칠레 및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 협정에 지역화를 명시하고 있다. WTO/SPS 협정에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 각국은 검역규정에 지역화 개념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를 구제역과 과실과리 등 동식물검역상 수입 제한지역으로 분류해 왔다. 따라서 중국과 FTA 협상 시 중국 측이 SPS 규정의 지역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SG 규정에 대해서는 첫째, 농산물 SG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FTA 협정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농산물 특별 SG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칠레 및 미국과의 FTA 협정에 별도의 농산물 SG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특별 SG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WTO 협정에서도 별도의 농산물 특별 SG(SSG)를 제정한 것은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산물 SG 조항의 본래 취지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시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돌발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FTA 협정상 SG 조치에 대해서는 발동요건을 간소화하는 대신 발동기간은 가능한 한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SG 조치는 양국 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의 FTA 체결 시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국한하여 농산물 SG 대상품목을 선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협정과 같이 SG 대상품목을 부속서에 명시하고 각각의 발동 기준물량과 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상대국의 신뢰를 얻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한·중 FTA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현안으로 산업 내 무역 가능성과 중국의 곡물류 수출규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양국간 농업부문 내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분업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어도 농업 부문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어 국제 곡물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 시 한국의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 이후에도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 생산 기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FTA 관세 양허 시 광범위하게 특별취급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13억 인구의 식량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하였다. 앞으로도 국내 곡물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2005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농수산물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여 우리나라 식품 소비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중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곡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결과

이 연구 결과 도출한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으로 민감품목 특별 취급과 대중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양국 간 농업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민감품목은 선정과정에서 생산액과 부가가치 비중, 국내외 가격차와 관세율, 그리고 자급률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최종 선정된 민감품목을 경쟁력 유무와 검역상 수입규제 여부 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 시 민감품목은 DDA 협상 결과 특별품목(SP)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허 제외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대중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 사회의 공식적인 제도는 물론 비공식적인 관행과 규제의 배경 등을 파악하고 특히 중국 사회의 핵심계층인 당과 관료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산 신선 및 가공농산물의 목표시장을 중국의 고소득 계층으로 한정하고 품질 및 안전성 제고와 기능성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산,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 선호 특성에 착안하여 휴대전화기 등 전자제품의 고급품 이미지가 한국산 농산물에 이입될 수 있도록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덕 경영과 친환경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들이 한국산 농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의 중국 내 점포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고급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고소득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농업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농업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국 간 농업협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협력분야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성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식품안전성 관련 통상 마찰을 축소하는 의미에 서라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및 선적단계까지 위생조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질검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6.11 DDA 농업협상 쟁점과 대응방향

연구자: 임송수, 신유선
연구기간: 2007. 5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DDA 농업협상 분야별 내용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 목적은 ①모델리티(Modalties) 협상 의제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우리 농업부문에 주는 시사점과 잠재적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② 미국과 EU가 협상 대응과 농정개혁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국내보조 조치의 협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 모델리티 협상 추진 동향과 내용
 - 협상 추진 동향
 - 모델리티 개정안의 내용과 특징

- 시장접근 분야의 영향 분석과 협상 시사점
 - 민감 품목·특별품목과 관련된 제안 분석과 시사점
 - 관세감축 방식의 제안 분석과 시사점

-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 국내보조 분야의 영향 분석과 협상 시사점
 - 무역왜곡보조 규율에 대한 제안 분석과 시사점
 - 허용보조 관련 제안 분석과 시사점
 -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 수출경쟁 분야의 영향 분석과 협상 시사점
 - 국영무역·수입관리제도와 관련된 제안 분석과 시사점
 - 수출보조·수출신용 감축에 관한 제안 분석과 시사점
 -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 미국의 농정변화와 협상의 관계 분석
 - 미국의 2007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보조조치와 WTO 규율의 관계
 - 협상 시사점
- EU의 농정개혁 이슈와 협상의 관계 분석
 - 2003년과 2007년 농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의미
 - 2003년 이후 농정개혁 조치와 WTO 규율의 관계
 - 협상 시사점
-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 분야별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 주요국과 양자협상 전략

3. 연구결과

가. 시장접근 분야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처지에서 보면 모델리티 개정안은 급격하고도 다양한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에 따라 양허관세는 최대 73%(개도국은 49%)까지 감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면 평균 관세는 25%(평균 62% 감축)이고 최대 감축률에서는 21%(68% 감축)이다. 개도국의 최소 및 최대 감축률 아래 평균 관세는 각각 38%(40% 감축)와 36%(44% 감축)를 기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탄성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관세감축에 따른 생산액 감소규모가 큰 품목들은 선진국 가정 아래 인삼 48%, 마늘과 팔 각각 44%, 닭고기 40%, 개도국 가정 아래 인삼 34%, 마늘 31%, 팔 30%, 닭고기 27%이다.

민감품목으로서 세번의 4~8%로 선정하여 일반 감축공식보다 1/3~2/3만큼 덜 감축하되, 쿼터를 소비량 대비 2~6%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시장접근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실품목 또는 세번 기준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후자의 경우 국내 소비량 추정 자료를 활용하여 쿼터 증량을 산출할 것인가가 기술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 가정 아래 54~66%, 개도국이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관한 가정에 따라 최소 38~44% 또는 31~40%로 분석되었다. 생산액 감소폭은 선진국 가정 아래 인삼 26%, 마늘과 팔 각각 23%, 닭고기 21% 순으로 높고, 개도국이면 인삼 18%, 마늘 16%, 팔 15%, 닭고기 14%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가정 아래 생산액 감소폭이 10% 미만인 품목은 포도, 토마토, 딸기, 감자, 대두, 보리, 복숭아이고,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액 감소폭은 각각 14%와 10%를 기록하였다. 개도국 가정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고추, 보리, 감귤의 생산액 감소폭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에 대해 산출한 쿼터 증량(세번 기준 소비량의 5% 가정)이 최소 쿼터증량 요건(실품목 소비량 대비 2% 가정)보다 작은 품목은 조란, 감자, 양파, 마늘, 녹두·팥, 밤, 보리, 옥수수, 메밀이다.

개도국의 특별품목은 세번의 8~20%로 제시되었으며, 관세 감축률은 최소 0%에서 최대 25%로 제안하였다. 일반품목 관세감축과 견주어 특별품목으로 말미암아 얻는 관세효과는 가정에 따라 최소 9%, 최대 25% 포인트로 나타났다.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로는 가격과 물량 기준 발동이 모두 제시되었으나, 가격기준의 발동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구제조치도 제한된다. 물량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개월 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양파로 18회(개월)이고, 돼지고

기(냉장) 14회, 김치 11회, 쪽파 10회, 감자와 멜론이 각각 9회 순이다. 가격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양파 14회(개월), 소고기(기타) 11회, 쪽파 10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선진국 전제 아래 특별세이프가드(SSG)가 곧바로 없어지거나 세번의 1.5%로 제한되면, 대상 품목 수는 최대 22개로 축소되어 SSG 활용이 제약될 것이다. 모델리티 개정안은 개도국의 감소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 2/3 의무법칙을 적용하면 세번의 2% 또는 최대 29개 품목으로, 이는 2008년 대상 품목 수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열대작물은 민감품목 선정에서 배제되며, 일반품목보다 더 큰 감축률을 적용받게 된다. 예시된 열대작물, HS 6단위로 94개 품목에다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면, 평균 양허관세는 초기 114%에서 대안에 따라 평균 13% 또는 16%로 급격히 감축되었다.

쿼터 내 관세 감축에 관한 제안은 일반 감축률 적용부터 폐지 또는 영세율 적용까지 다양하며, 미충족 쿼터는 재배분 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쿼터 충족률은 69%이고, 100% 이상 충족한 비중은 44%로 산출되었다. 충족률 0%를 기록한 품목 대부분은 수입수요 부족이나 검역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쿼터 내 관세가 폐지되거나 미충족 쿼터를 재배분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것이다. 쿼터 관리방식과 쿼터 충족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경사관세는 가공 농산물의 감축률을 해당 일반품목 감축 구간보다 한 구간 높여 그 감축률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제안하였다. 주요 대상 품목은 토마토, 오이류, 참깨 정도이며, 이 가운데 오이류의 경사조치로 추가 수입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보조 분야

선진국 기준 적용 시 OTDS 감축한도가 개별보조 합계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감축 부담은 없으나 개도국 기준 시 De minimis 50% 감축 적용 시 최대 1조 1,311억원, 60% 감축 시 최대 7,647억원의 추가감축 부담이 있어 De minimis에서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품목별 AMS 상한 기준기간은 3가지 대안이 있으므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1995~2000년 평균지급액 기준이 대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쌀 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AMS 한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경우 AMS 규모가 크면 블루박스 한도 적용으로 블루박스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블루박스로의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블루박스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델리티 초안에서 문제가 된 비연계소득보조,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의 경우 예외적인 기준 기간 경신(update) 요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수용가능하다.

다. 수출경쟁 분야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국들의 식량안보측면에서 수출제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및 자료 제공 의무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라.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과 전략

민감품목의 선정 과제는 실품목 위주로 되어 있는 품목을 이행계획서 기준인 HS 10단위 품목으로 세분하여 설정하는 것과, 민감품목의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하는 쿼터 보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이다. 세번 기준 민감품목 선정에는 산업계와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쿼터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이론에 따라 산출한 관세감축의 쿼터 상당치를 산출하여 비교해야 한다. 쿼터 상당치 산출 결과, 소비량 기준으로 쿼터를 증량할 때에 감귤과 양파의 물량이 과도한 반면에 고추와 땅콩은 그 기준보다 낮아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보조 분야의 양허계획서는 미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쌀에 대한 충분한 보조 확보가 필요하다면, 품목별 AMS 상한 설정 대안 중 1995~2000년을 기준연도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보조에서 직불로 전환한 양정정책을 반영하려면 충분한 블루박스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체제 등의 신축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도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별품목, 최빈개도국, 소규모 취약국, 면화와 관련하여 신축적인 양허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6.12 대북 식량지원 효과와 정책과제

연구자: 김영훈, 성명환, 남민지
연구기간: 2007. 7 ~ 2008. 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북 식량지원 현황과 효과를 정리하고 향후 효과적인 식량 지원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북 식량지원 실태를 정리하였다. 둘째, 북한의 식량 수급과 남한의 곡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를 논의하였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북 식량지원 과정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대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는 두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산 쌀 지원과 재고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 쌀시장에 대한 효과이다.

대북 식량지원이 본격화된 2000년 이래 식량지원은 연간 50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량에서 남한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효과가 잘 드러난다. 곡물 지원 규모가 작았던 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매년 부족량의 20%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특히 2003~2005년 기간에는 부족량의 40% 이상을 우리나라의 식량지원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식량지원이 꾸준히 추진된 최근 8년간 우리나라의 곡물 지원은 총량으로 볼 때 북한 식량 부족의 29% 정도를 메운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배급기준을 토대로 지원식량의 수혜 인구 추산도 가능하다. 2000년부터 지원한 식량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8만 7천 톤이다. 이 양은 매년 210만여 명의 성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이다(성인 1인 1일 500g 배급 기준). 식량 지원분을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분배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00~2007년 기간 대북 식량지원의 연간 평균치 38만여 톤은 6세 이하의 아동과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정상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된다. 대북 식량 지원규모를 생산량, 소요량, 부족량과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규모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대북 식량지원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산 쌀 지원으로 농가판매가격은 연평균 1.3%, 소비자가격은 평균 1.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북 쌀 지원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정부 지출 변화도 추정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총 7,142억원의 생산자 후생 증가 효과가 나타난 반면 소비자의 후생 손실은 9,90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기간에 국내산 쌀의 대북 지원에 따른 정부 순지출은 2조 4,703억원(식량차관의 상환을 미리 계상)으로 추정되었다.

계측된 정부의 순지출 대부분은 우리나라 쌀 생산자인 농민과 쌀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부의 순지출 부분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부분도 있다. 대북 식량지원 당시 책정한 차관가격과 실제 국제가격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한으로 이전된 것이며, 2006년의 무상지원에 따른 정부지출 역시 전액 북한으로 이전된 부분에 해당된다.

선진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대개 식량지원 신청, 지원식량 사용 및 분배계획,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평가, 피드백 단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 경제민주화 로드맵 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수원국의 인도적 상황 호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우리도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13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연구자: 권태진, 김영훈, 남민지
연구기간: 2008. 6 ~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남북한 사이의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정비, 경제협력 기반 및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경제협력 활성화 대책은 경제협력의 주체인 기업인은 물론 남북한 당국자 차원에서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 대북 정책 기조
 - 경제협력사업 정책 방향

- 농수산 분야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
 - 경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 남한의 경제협력 관련 법, 제도 현황
 - 북한의 경제협력 관련 법, 제도 현황

- 경협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과 과제
 -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 추진의 문제점
 - 경협기반 및 제도
 - 남북경협의 저해 요인 분석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의 추진 대책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협력사업 내용
 - 당국 간 합의된 협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대책
 - 새로이 추진할 경협사업의 발굴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과 지원 방안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 남북경협의 원칙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3.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며 남북경협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농수산 부문의 경협은 초기에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협 환경은 열악하고 새로이 구축하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는 남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당국자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남북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경제 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은 331건이며 이 중 11건은 승인이 취소되었다. 승인을 받은 사업 중 259건은 개성공단 사업이며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77건이다. 이 중에서 현재 유효한 사업

은 50여건 정도이다. 지금까지 농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은 총 21이며 이 중 4건은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17건만 유효하다. 이 중 개성공단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4건이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10건도 되지 않는다.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남북한 당국은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마련하고 2003년 8월 18일부터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청산결제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가 있다. 이러한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은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 합의서에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도 실행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실제 경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개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등 다수의 대외경제 법제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이러한 법제는 외국에만 적용될 뿐 남한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에 대해서도 외국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욱 호혜적인 수준의 대외경제 법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농수산 분야의 남북경협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다. 농수산 분야는 자연환경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농수산물은 생산 지역이나 시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힘들다. 또한 농수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큰 데 비해 가격이 싸며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농수산 분야의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교역이나 경협을 추진할 때 다른 분야보다도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경협사업자가 당면하는 현실적인 제약은 주로 북한 측의 문제에 기인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 면도 없지 않다. 경협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 상

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사교환을 하는 초기 단계부터 통일부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받는 과정, 북측 상대방과의 가격 결정, 방북, 물류, 생산물 판매, 대금결제, 사업 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어려움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제 환경이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경협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한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경협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요인이다.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농수산 분야의 협력사업도 적지 않다.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비롯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회의를 통해 남북한은 농수산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당국 간 합의된 내용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부터 실행에 옮기되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당국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지만 가능하면 민간기업인이 중심이 되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생과 공영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합치된다. 민간의 경협은 경협사업자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협력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경제성 이외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경협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면 무리하게 경협을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지원 성격의 사업을 지속하다가 점차 계약생산 또는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성격의 협력은 장차 경협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과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농수산 분야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초를 긴 안목에서 설정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은 상생과 공영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두

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농수산 분야의 협력은 우선 협력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협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형태, 추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 분야의 사업과는 달리 농수산 분야는 자연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수산 분야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경협이 성공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품질이 쉽게 손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 때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물류 및 유통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경협이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어려우며 남북한 당국자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는 경협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6자회담 참가국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협이 활성화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 북한지원협력기금을 설치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6.14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영향 및 대 EU 수출가능성 분석

연구자: 최세균, 신유선
연구기간: 2008. 9 ~ 11

1. 연구의 목적

- 한국과 EU는 2008년 11월 현재 일곱 차례의 한-EU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였고, 한 차례 정도의 공식 협상을 더 진행하고 협상을 종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EU FTA 협상은 2009년 상반기에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협상 타결에 대비한 시장개방 영향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현재 미양허 상태의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양허전략 수립에 필요한 품목별 영향 분석, 타결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 계측이 주요 연구목적임. 또한 FTA 체결로 EU 시장의 개방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여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수출 증대로 인한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음.

2. 연구개발 내용

- 한국과 EU의 농산물 교역은 한국의 대 EU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대 EU 농산물 수출은 연간 5천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수입은 19억 달러에 달함.
 - 수출 품목은 라면을 포함한 면류, 담배, 설탕과자 등 가공식품이 많으며, 신선 농산물은 사과, 배 정도에 불과함. 수출 상위 15개 품목이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함. 한-EU FTA에 따른 대 EU 수출 증대 가능성 분석은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음.
 - 한-EU FTA로 인한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탄성치를 이용한 계산과 KREI-ASMO 모형을 이용한 추정 등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음.
- 피해 추정 대상 품목은 우리나라가 EU에 양허한 내용에 따라 선정하였기 때문에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등의 품목은 제외되었음. 또한 한-미 FTA에 추가적인 영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EU 농산물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제외되었음.
 - 따라서 피해 계측 대상 품목은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곡물 가운데 감자 전분, 토마토, 키위, 포도 등임.

3. 연구결과

- 수입수요 탄성치에 의한 분석 결과 주요 7개 품목에 대하여 2,450억원 정도의 생산액 피해가 예상되며, KREI-ASMO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는 농업부문 전반에 대하여 2,600억원 정도의 생산액 감소가 전망됨.
 -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의 피해 규모 1조원에 비해 작은 것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EU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수출 증가는 주요 15개 품목에 대하여 최대 수출 실적 기준 5천만 달러, 최근 수출 실적 기준 700만 달러, 평균 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FTA로 인한 잠재교역 증가를 추정한 결과 1,354만 달러로 나타났음. 잠재 교역 증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EU의 관세 감축에 따라 EU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출 증대의 최대치로 볼 수 있음.

6.15 KREI 북한농업동향

연구자: 권태진, 김영훈, 남민지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 농업개혁, 남한의 대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함께 농업에 대한 기초정보, 북한의 농정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 갱신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 농업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물과 함께 상당 수준의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왔으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함께 빠른 남북관계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보의 갱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동시에 수요자에게 북한의 농업 실상을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북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포커스: 북한 농업, 경제상황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 분석

동향분석

- 농업관련 보도동향 요약: 분기별 농업관련 보도동향 요약

- 북한 주요 신문의 농업관련 보도동향
 -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발췌·요약
 - 북한 농업관련 국내외 보도 동향
 - 「로동신문」, 「민주조선」의 보도 내용과 이들 신문을 인용한 보도 내용을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 및 방송의 북한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일자별로 발췌·요약
 - 농업일지
 - 북한농업 관련 동향을 일자별로 정리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을 4개 분야(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대 북한 지원 동향, 교류협력사업 동향, 대 북한 지원 및 경험정책)로 분류하여 소개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농업교류협력 동향
 - 국제기구 및 NGO, 개별국가들의 북한농업에 대한 지원 실적,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의 동향 소개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27개 기상 관측지역의 기후 값(일최저기온,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월평균기온, 강수량 등) 분석
 - 농업용어 해설
 - 북한의 농업용어 해설을 통해 북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 기타 농업자료 수록

3. 연구결과

- 포커스
-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북한의 식량 문제(제10권 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과제(제10권 제2호)

- 대북 농업개발협력 정책 방향(제10권 제3호)
-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제10권 제4호)

□ 동향분석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을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전국의 협동농장에 지시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자체적인 농사짓기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도입, 영농물자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2006년 핵 실험으로 중단되었던 대북 식량차관을 2007년 재개하더니 2008년에는 다시 중단하였다. 1999년 이후 매년 30~35톤씩 무상으로 제공되던 비료 지원도 2008년 처음으로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북 정책의 추진 원칙으로서 실용과 생산성 추구,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2007년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곡물 생산량 부족,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국제사회의 원조 감소에 따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내 곡물 수급이 가장 불안하였으며 시장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대량 아사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곡물 지원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자체 보유 곡물의 재고 조절을 통해 고난의 행군과 버금갈 정도의 식량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다.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 중단으로 심각한 비료 부족 현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008년은 좋은 기상조건으로 인해 북한은 평년작에 근접하는 수준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정부 차원의 남북한 경협은 거의 중단되었으나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되었으며 물자의 반출입도 2007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의 통행 제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철수 등 2008년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한 해였다.

6.16 중국농업동향

연 구 자: 전형진, 리경호, 남민지
연구기간: 2007. 1 ~ 12

1. 연구의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농림수산물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적자폭도 확대되었고, 국내 농림수산물 수급에서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의존도 심화되었다. 현재 한중 FTA 협상의 전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어 중국과의 FTA 협상 시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되면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더욱 더 증가하고 국내 농업의 중국 농업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농업이 중국 농업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 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분기별 동향보고서로 분산함으로써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중국농업동향』 보고서 체제는 ‘농업정책 브리핑’,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정 연구 이슈’, ‘정책자료’, ‘농업통계’ 등 5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농업정책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현안에 대해 정책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사점,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경제동향'은 중국 통계당국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농산물 생산, 유통, 가격, 소비, 무역 동향 및 농촌·농가경제 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농정연구 이슈'는 중국 내 주요 농정연구기관의 농정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정책자료'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주요 법률, 행정법규, 규칙 등의 자료와 중국농업 관련 국내외 보고서, 논문 등 정보가 치가 있는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농업통계'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 중국 농업·농촌경제 관련 주요 농업통계를 정리하였다.

3. 연구결과

- 연구원 홈페이지 '중국농업정보' 홈페이지상의 정보 제공
- 『중국농업동향』 보고서 발행: E09-2008-01~03, 매월 700부, 각권 140여 페이지
- 농업정책 브리핑
 - 2008년 농정방향과 시사점(제1권 제1호)
 - 곡물수출 제한조치의 과급영향 및 전망(제1권 제1호)
 - 제1, 2차 농업센서스 주요 결과 비교(제1권 제1호)
 - 식품안전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제1권 제1호)
 - 식량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특성(제1권 제2호)
 -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제1권 제2호)
 - “일촌일품(一村一品)”의 발전 현황과 전망(제1권 제2호)
 - 중국의 농업자원 현황과 시사점(제1권 제3호)
 - 중국의 파프리카 산업과 한국산 수출가능성(제1권 제3호)
- 농정연구이슈
 - 중국 농업경제학 연구 동향(제1권 제1호)
 - 중국의 DDA 농업협상 대응방향(제1권 제2호)
 - 식량 직접지불제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제1권 제2호)

-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4가지 모델(제1권 제3호)
- 농촌 토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제1권 제3호)

- 정책자료
 -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1권 제1호)
 -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제1권 제1호)
 - 『식품안전법(초안)』 (제1권 제2호)
 -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 (제1권 제2호)
 - 《전국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 (제1권 제3호)
 - 《중국 식품 및 영양 발전 요강(2001~2010)》 (제1권 제3호)
 - 《중국의 농산물 품질안전 현황》 (제1권 제3호)
 -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 개요(제1권 제3호)

7. 산림정책연구



7.1 목재의 수급 모형 구축 및 전망

연구자: 이상민, 장철수, 김경덕
연구기간: 2008.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주어진 국토자원에서 산림의 이용가치를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산림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목재시장을 품목시장과 원목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급을 분석한 후, 서로의 수급관계를 이용하여 두 시장을 연결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목재 품목은 중간재 성격을 띠므로 최종 상품의 수익 극대화 과정에서 도출되는 원료의 파생수요를 추정하였으며, 동시에 공급함수를 추정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수급의 균형을 찾았다. 이렇게 구해진 해는 제품별 원목 투입비율을 적용하여 원목으로 환산하고 모든 제품의 원목 투입량을 합하여 우리나라 전체 목제품 시장의 원목 수요량을 구하였다. 목제품 시장의 원목 수요량을 국내재 공급량과 비교하여 부족한 양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연구결과

코호트 모형을 통해 추정된 영급별 산림면적으로 국내재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전망 기간 내에서는 충분히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관리와 상품성을 높이는 수증개발 또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6영급 재적의 20%만 벌채하여도 2050년 원목 수요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모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대부분의 목제품 시장 자료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연립방정식으로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나, 실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재시장의 특성인 동태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회귀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된 변수로 인하여 모형의 안정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의 전반적인 전망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코호트 모형의 경우,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된 수치가 일부 원자료에서 발견되었으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모형구축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에 설계되었던 적정벌기령에 관한 최적제어(optimal control) 문제를 원목 공급 부문에 포함하여 목재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7.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연구자: 이경일

연구기간: 2008. 8 ~ 11

1. 연구의 목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와 관련하여 부담금이론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논리, 명칭, 부담금으로서의 성격, 부과방식,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으로의 귀속 후 사용에 따른 재원운용 등 제도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산림보전정책의 필요성과 그리고 정부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담금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고려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산림을 복구하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그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담금성격을 규명해 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제도와 특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농지보전부담금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음.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였는데 그 이전에 산지이용과 전용현황을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징수, 감

면, 사용 등에 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를 말함. 이러한 부담금은 몇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독일 연방재판소가 제시한 ①부과대상의 집단 동질성, ②부과목적과 대상자간의 물적 관련성, ③부과대상자의 목적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단책임, ④부담금의 집단을 위한 사용을 일반적으로 부담금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위의 네 가지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법적부담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와 유사한 농지보전부담금제도를 비교분석해 보았음.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명칭변경을 통해 부담금의 성격을 원인자부담금성격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금성격도 부여함으로써 본래의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였고 기금의 용도도 단순한 대체농지조성이라는 원상복구 소요사업비 충당은 물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광범위한 용도로 확대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관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명칭변경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의 면적은 1997년 고시(임업통계연보 중 가장 최근 고시)에 따르면 645만 2천ha으로 이중 보전산지의 면적은 497만 7천ha,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147만 5천ha 임. 산지의 전용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산지의 총 전용면적 평균은 8,371ha, 보전산지의 전용면적 평균은 1,828ha, 준보전산지의 전용면적 평균은 6,543ha 임. 대체로 전용용도는 도로, 골프장, 주거시설 등의 용도로 전용이 되었고 최근 5년 동안 산지전용을 가장 많이 한 지자체는 경기도로서 2007년도의 경우 총 산지전용면적 10,008ha 중 경기도가 36.61%인 2,640ha를 전용하였음.

- 최근 5년 동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액은 '03년도는 67,820백만원, '04년도는 80,764백만원, '05년도는 91,871백만원, '06년도는 86,646백만원, '07년도는 113,827백만원으로서 '06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운영 논리 강화라는 하드웨어적 문제와 제도운영에 대한 세부적 개선 필요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하드웨어적 문제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논리 강화 문제로서 제도의 지속적인 존치의 필요성과 보다 강화된 제도의 유지가 핵심문제임. 이 점은 다시 말해 규제완화 차원과 기업논리에 의한 준조세적 부담금의 축소요구로 정부부담금에 대한 감축 및 통폐합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 확보와 함께 현재 운영시스템에서 노정되는 문제를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소프트웨어적 문제는 이러한 큰 관점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사안별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제도의 존속과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하나로 모두 연결된 문제점이고 개선방안 역시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운영상의 개선필요성인 소프트웨어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액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둘째, 사업영역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셋째, 첫 번째 문제의 심화된 문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용과 관련하여 세입액과 세출액을 2000년 이후 비교하였을 때 세출액의 큰 증가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도의 적자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 넷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액은 부과단가가 매년 변동사항이 크지 않아 일정하게 증가하고, 산지전용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논리 강화를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존치당위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존치에 따른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함.
-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명칭변경 검토필요성, 둘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방식에 현실화, 셋째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의 개선필요성, 넷째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 운용구조 개선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지관리제도의 새로운 콘셉트 도입필요성임.

3. 연구결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를 가능한 축소하여 관리하려는 부담금제도의 하나로써 이해하려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존속과 이를 보완하여 실현해야 하는 데에는 현 세대뿐만이 아닌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환경자산 상속책임,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차원에서 증대되는 산림의 가치존속,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정책으로서의 산림관리가 필요함에 있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는 산지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환경재화로서 산림의 필수불가결한 성격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인한 산림의 희소성에 의한 가치향상과 전 국민적인 보건·휴양수요증대, 생태적인 산림복구를 통한 산지보전 필요성 등 시대적 부합정책의 일환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제도운영의 점검을 통하여 보다 강화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조세 형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함에 있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과논리를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도의 명칭변경, 부과단가 인상을 통한 부과방식의 현실화, 감면대상과 감면율의 축소와 확고한 일관성 유지, 재원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다루었으며 이를 산림청 정책담당자들에게 용역보고서 형식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7.3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보급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

연구자: 석현덕, 김성주
연구기간: 2008. 9 ~ 12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질계 에너지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펠릿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연구하고, 이를 위해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확대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산물수집체계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국제유가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인 펠릿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세계 펠릿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과 국내 유통되고 있는 펠릿산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펠릿 생산 및 열 병합발전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칩, 펠릿, 바이오에탄올 등 목재 및 목질계 에너지의 자원육성과 산물수집의 근원적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국내에서 연간 20만ha의 산림을 관리하여 10만ha의 산물을 바이오매스 고체 연료(펠릿 등)로 만들게 되면 273,684톤의 난방유가 절약되고, 4,418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 99만톤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가 있으며, 숲 가꾸기 작업 실시로 인하여 연간 2만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펠릿 생산의 재무분석 결과 기계설비의 70%를 보조하는 가정 하에서 바이오매스 원자재의 단가가 낮은 경우는 숲 가꾸기 산물수집에 대한 정부보조가 50% 이상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매스 원자재의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가 65% 이상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펠릿 생산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편익)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숲 가꾸기 산물수집단가 차이에 관계없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 가동율이 가장 불량한 조건에서는 숲 가꾸기 산물수집단가가 높은 경우의 경유대체효과에 대한 수익성은 없으나 나머지 효과들에 대한 수익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숲 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펠릿 생산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하여 숲 가꾸기 산물 수집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 또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숲 가꾸기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대 생산하는데 있어서 산지개발밀도가 낮고, 개별산주와 소반단위의 영림계획으로 집단화된 단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산물수집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작업도로망 배치와 시설비 지원, 집재장비 지원 및 기계화 집재인력 양성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작업공정별 품셈 개발과 지역별 경영계획 운영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공정별 품셈 개발에 있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5개 생산 작업시스템으로 분류하여 생산비용을 분석한 결과, 작업당 거리에 따라 m^3 당 총 비용이 변화하지만 5개 작업 시스템 중 인력 집재 작업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4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1/3차 연도)

연구자: 석현덕, 장철수, 이경일, 김영단, 김현근
연구기간: 2008. 4 ~ 12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안중심으로 과제를 분류하여 1년차에는 경영주체육성문제, 2년차에는 산림산업문제, 3년차에는 임업부문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금년도 연구의 목표는 산림산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림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주체의 육성과 이에 도움이 되는 종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구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편에서는 산림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육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2편은 임업경영주체가 견실해 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제1편 산림경영주체의 육성방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임업경영주체의 실태 및 유형화, 제2장에서는 임업경영체 정책수요 조사, 제3장에서는 선진 임업국의 경영조직 육성 사례, 제4장에서는 임업경영체의 육성방향, 제5장에서는 임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제2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개선 방안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특징, 제2장에서는 운영 현황 및 설문 결과, 제3장에서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3. 연구결과

가. 산림경영주체의 육성 방안

□ 경영주체의 유형화

- 경영주체의 유형은 크게 기본 유형과 잠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본 유형은 임가 경영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형 임가, 준전업형 임가, 전업형 임가, 고소득형 임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잠재 유형은 독자적 경영의사가 없는 영세 산주, 경영의사는 있으나 시간과 자본이 부족한 산주, 그리고 비소재 산주 등 임업참여 희망 임가와 대리경영 희망 임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선진국형 임정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임업 활동 임가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지원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임업경영체의 정책수요 조사결과

- 임업경영체의 상당수는 확대경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종사가능 연수도 충분하며, 후계자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임업경영체의 경우에는 현상유지 또는 축소경영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임업경영체의 여건에 맞는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별지원에 있어서는 보험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일부 임가의 경우에는 교육·의료비, 생계비 등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됨.
- 차별화된 지원시책이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차별정책의 기준으로 경영규모에 따른 차별지원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차적으로는 경영규모 이외에 전업정도, 품목, 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임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경영장부의 기록은 대부분 간이 기록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임업경영체 등록 전 경영장부 기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지원 분야는 전업인 및 경영규모화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지원을 추진하되, 임산물 재해보험 지원, 산촌 관광사업 지원,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정책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진임업국의 경영조직의 시사점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지속적인 경영의욕이 필요함. 또한 현재의 목재가격으로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업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데 개인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안형 집약화 사업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체가 지역산림의 경영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량을 확보한 후,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임업기계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목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집약화로 인한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안형 집약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산주와의 대화와 협상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대리경영시스템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뉴질랜드 사유림 전문경영회사(PF OLSEN LTD.)는 우리나라의 산림조합과 유사한 형태이나 산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로비 활동은 하지않으며, 정부사업을 대행 또는 정부자금으로 운영되지도 않음. 순수하게 사유림경영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산주의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문기업체제로 되어 있어 향후 대리경영형 임업경영 발전모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산림경영주체의 육성 방향

- 임업경영체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영체별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임업경영체는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우리 농림업의 근간은 가족중심이지만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는 법인경영체나 대리경영체 등 다양한 조직경영체가 필요함. 현재의 임가, 임업경영체, 산주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영목적, 수익구조, 경영주체의 연령, 산지의 소유목적 등을 고려해서 정책대상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로 효과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함.

1) 전업형 임가

- 전업형 임가는 현재 임산물(목재 포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된 임가와 경영체, 또는 현재는 전업정도 높지 않지만 향후 전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임가, 즉 전업지향 임가를 대상으로 함(경영주체 유형구분에서 고소득 전업임가, 전업형 임가, 준전업형임가의 일부가 여기에 속함).
-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적용하되, 경영의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할 정도의 경영규모 확보, 전문성을 갖춘 기술수준, 스스로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경영기법 도입 등이 요구됨. 전업형 임가는 가능하면 품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임가를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나 소량 다품종으로 어느 정도 생산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임가도 대상이 됨.

2) 부업형 임가

- 부업형 임가는 경영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품목을 경작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립하는 수준에서 임업을 부업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함(경영주체 유형구분에서 준전업형임가, 중소형임가의 일부가 여기에 속함).
-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 위주, 즉 소득보전차원의 정책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함. 주요 지원분야는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득원 개발, 겸업 중심 지원정책 등에 지원되어야 하고 직접지불제와 같은 소득 보전중심의 지원정책이 유효함.

3) 법인경영체

- 법인경영체는 조직경영체로서 산주나 임업인들이 협업체 또는 경영체를 만

들어서 조직화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임. 조직경영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한두개 품목을 중심으로 경영체를 조직하는 품목별 경영체가 가장 많은 형태이고 이와 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소량 다품종의 임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역경영체도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조직경영체임(경영주체 유형구분의 기본유형에 속한 고소득 전업임가, 전업형 임가, 준전업형임가, 중소형임가와 더불어 잠재유형구분에 포함 된 임가 모두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음).

- 법인경영체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전업형 임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모두 유효함.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인경영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함. 즉 법인경영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4) 대리경영체

- 대리경영체는 조직경영체의 한 방식으로 구성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보다는 현재의 대리경영시스템과 같이 경영을 산립조합이나 임업법인과 같이 전문적인 경영조직체에 위탁하는 방식임.
- 소규모 경영을 하지 않는 산지와 부채산주의 산지를 규모화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리경영체와 같이 조직경영체가 대리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임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1) 임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 임업경영체 등록제는 모든 임업정책의 시발점으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등록제를 통해 임업 경영의지가 있는 경영체를 식별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체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체등록제는 정책지원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직접지불제 시행

- 임업부문의 직접지불제 도입은 먼저 산에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단기소득임산물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조직 임업경영체 구축 활성화

- 밤이나 표고버섯과 같은 품목별로 전문화가 가능한 것은 현재 농업에서 영농법인으로 조직경영체를 육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임업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법인경영체의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다만 특정 품목에 집중된 단일품종 중심의 조직경영체 방식은 단기임산물과 같이 대부분이 대량생산보다는 소량으로 여러 품종을 생산하는 임업에서는 한계가 있음.
- 특정품목보다는 마을이나 지역을 엮어서 경영단위를 만드는 지역단위 법인경영체 또는 품목횡단적 법인경영체는 단일품목중심의 조직경영체와는 다르게 소규모 다품종을 시기와 재배기간을 달리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임업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경영단위가 될 수 있음. 마을 단위의 임업경영은 생산비 절감효과도 있지만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더라도 단지화로 인해 단일품목으로 경영규모를 넓힌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로 법인경영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적인 브랜드화도 가능함. 지역단위 법인경영체는 경영체의 리더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존재가 중요하므로 우선 지역의 경영리더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다만 지역의 경영리더가 없는 경우는 지역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함.
- 제안형 집약경영시스템은 산주들에게 실제로 지역의 산림을 집약화하여 경영했을 때 나타날 경영성과를 근거로 산주를 설득하여 경영규모를 늘려서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임. 집약 대리경영시스템의 주체는 지역산림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산림소유자를 대신해서 집약화될 지역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직접 경영에 참여함. 제안형 집약대리사업에 있어서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은 산림소유자에게 미래의 경

영 비전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경영수지결과를 계산하여 대리사업 또는 대리경영을 산주에게 제안하는 것임. 이를 토대로 산림경영을 수탁함으로써 지역의 산림을 모아 집약적으로 사업을 함.

4) 농림사업시행시침서 개정

- 임업경영주체를 정책상의 육성대상별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농림사업시행시침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사업별로 지원대상의 선정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하며 임업경영체별로 해당사업을 적시하여 지원사업을 명확히 해야 함.
- 주요 개정내용은 경영주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상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내용변경이 필요함. 정책대상 경영주체별로 지원대상이 구분되어야 할 것은 사업대상자와 지원자격 및 요건에서 현재의 요건보다 세분화하여 자격요건 유무를 경영주체별로 명확하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도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영주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함. 정책사업별로 사전에 지원대상경영주체를 제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와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서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음.

나.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개선 방안

□ 농림수산업분야 주요정책자금 비교에 따른 시사점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총규모(2008년)는 약 475억으로 농업종합자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임. 임업인을 포함한 산림사업의 취약성, 종합자금의 취급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종합자금의 규모 확대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 기관용자액은 총규모의 42%로, 농업종합자금의 87%에 비하면 아직 활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기관용자의 확대는 대출

취급기관의 상호금융을 통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율적인 책임제를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이러한 기관용자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대출 유형은 크게 시설, 개보수, 운전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것임. 사업의 종류보다는 사업자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경우는 산림사업, 단기산림소득, 목재 생산·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대출 기준이 사업자의 목적보다도 사업 종류에 기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자율에 있어서도 농업종합자금은 3%로 동일하나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경우에는 1.5~4.0%로 다양함. 향후에는 대출 조건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사업자 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용자금 집행율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성 등으로 2005년 109%, 2006년 109%, 2007년 95%의 수준임. 그러나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경우 임업인 담보물의 취약성, 산림사업의 영세성, 신청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용자금 집행율은 2005년 71%, 2006년 40%, 2007년 70%의 수준임. 집행률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성과지표는 주지표로 자금 지원율, 부지표로 경영 개선실적, 대출 연체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경우 주지표로 임가소득 증가율, 부지표로 용자금 집행율과 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음. 임가소득 증가율은 전체 임가소득과 관련된 지표로 종합자금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함. 용자금 집행률,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재무적인 관점과 사업적인 관점 등 종합자금 이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정책수혜자 설문 결과 및 개선효과 분석

1) 만족도 점수 및 개선 효과

-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한 전체집단의 만족도는 79.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 용자사업에 대한 만족도(79.7점)가 보조수반 용자사업에 대한

만족도(79.3점)보다 0.4점 높게 나타남.

- 만족도 점수는 2004년 80.2점에서 2005년 77.9점으로 낮아졌으나, 2006년 78.3점, 2007년 80.6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문항별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보조수반 용자사업과 순수 용자사업 간 변화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2) 간편성 점수 및 개선효과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집행과정상 행정절차 및 구비조건에 전체집단의 대한 간편 정도는 74.1점으로, 보조수반 용자사업(74.5점)이 순수 용자사업(73.6점)보다 0.9점 높게 나타남.
- 간편성 점수는 2004년 73.9점에서 2005년 73.4점으로 낮아졌고 2006년 74.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7년에는 72.6점으로 다시 낮아짐. 집행과정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평균 인식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보조수반 용자사업과 순수 용자사업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제도개선 요구도 점수

- 제도개선의 요구도 점수는 80.3점으로 나타났으며, 순수 용자사업(81.5점)이 보조수반 용자사업(79.5점)보다 2.0점 높게 나타남.
- 요구도 점수는 2004년 80.3점, 2005년 79.7점, 2006년 79.8점, 2007년 80.2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변화는 크지 않았음.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선정절차 강화 및 적기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대상자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하고 담보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임가소득 증대 및 산림사업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선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보조금과 융자금 비율 조정

- 융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융자 비율을 확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융자 비율을 줄이고 보조와 자부담만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조수반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받은 후 소액 융자금은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순수 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소액 대출은 지양하고, 부득이 소액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조정하여 중도포기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3) 사업통합 및 지원조건 조정

- 단기산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원조건, 융자한도, 융자기간 등도 지나치게 상이함. 농업종합자금에서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편리성을 우선시 하고 있음. 산림사업종합자금이 있어서도 목적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조건을 단순화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음. 시설자금은 운영자금에 비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현 금리를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이차보전자금 유동성 확대

- 이차보전자금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금융 관련 신상품 개발이 필요함.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는 고객 맞춤형 상품과 산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타금융기관의 우수상품을 산림조합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변동금리상품 등 신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노력이 필요함.

5) 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에 대한 회계 및 관리시스템, 여신심사·평가시스템 등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자금 취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채권종합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연체자에 대한 감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정책자금의 전반적인 부실화를 감소시켜야 함. 또한 신용 대출 한도 및 담보물 감정, 대출가능액 사정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채권확보를 위한 농신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협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첫째, 표고자금이나 기타 임산물 생산자금은 대상자가 사업실행 후 대출 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갖추는데 불만사항이 많으므로 현재보다 폭넓게 증빙서류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실수요자 선정 및 자금 필요시기에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융자사업 중 보조금이 포함되는 융자금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사전융자가 가능하도록 관계일선에서의 변화가 필요함. 셋째, 대출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가의 소득보전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보다 강화하여 경영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7) 협회 할당 또는 추천제의 개선

-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자금 중 조경수생산자금과 분재상산자금의 경우 융자금의 70%는 협회원에게, 30%는 비회원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현 협회추천제(전문임업인육성의 경우 선정권자는 산림조합장)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회추천의 집행절차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융자안내 등 담당직원의 교육 강화

- 산림조합 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반복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조합의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지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차보전 대상사업은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속히 사업 및 융자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업인의 가장 취약한 채권확보의 경우에도 농신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9) 사후평가모델의 전환

- 현재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성과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에는 임가소득 증가율(%)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차적인 지표에는 용자금 집행률(%)과 만족도(%)가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임가소득 증가율은 임업분야의 전체 임가소득과 관련된 지표로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함. 또한 20여 개에 달하는 세부적인 산림사업의 효과를 용자금 집행률과 만족도의 통합적인 지표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종합자금의 집행과 산림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균형성과지표(BSC)는 민간부문에 먼저 적용되어 왔지만 공공부문에서의 많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적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에서 BSC를 이용하여 정책자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정성적·정량적 성과지표가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했기 때문임.
- 산림사업종합자금 성과평가에 있어 BSC의 적용단계는 『현황과약 ⇨ 비전 및 전략과약 ⇨ 관점의 수립 ⇨ 관점별 전략목표의 규정 ⇨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의 파악 ⇨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설정 ⇨ 가중치 결정』의 방법론을 따름.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성과지표를 이러한 BSC의 방법론에 맞도록 적용시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7.5 임업분야 FTA 협상 대응 방안 연구: 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걸프만협력체(GCC)

연구자: 이상민, 장철수, 김경덕, 이대섭, 한승용
연구기간: 2008. 4 ~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은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GCC의 경우 막대한 석유 달러를 바탕으로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므로 우리나라도 건설 수주 확대를 통한 목제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조속한 FTA체결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곧 협상이 개시될 걸프협력회의(GCC)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의 FTA 체결이 임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FTA를 통한 임업 부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우선 대상국의 임산업 현황과 수급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세감축이나 철폐에 따라 수출입이 늘어날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선정하였다. 대상국의 전체적인 관세감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하였는데, 관세적용형태, 품목의 세분화 정도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품목별 수입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를 조사한 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산하여 각 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품목별 수요함수의 가격 및 교차 탄력성, 공급함수의 가격탄력성 등을 이용한 부분균형분석을 실시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정성적 분석을 이용하여 주요품목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전문가 및 문헌을 조사를 통하여 국가별(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원목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정부조달시장 참여방안(GCC) 등을 제시하였으며, FTA 협상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연구결과를 이용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한국-뉴질랜드 FTA

수입되는 임산물 중 단기임산물은 교역비중이 있는 품목도 있으나 교역규모가 적어 우려할 만한 품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목재류에서는 원목(침엽수류)의 수입규모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재목(침엽수)과 목질재섬유판의 수입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수출품은 모두 1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8.6%로 2.6%인 뉴질랜드보다 약 3.3배 높다. 여러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기타(수피), 이끼와 지의, 목질재섬유판(밀도0.5~0.8), 파티클보드(기타), 성형판(침엽수류), 단판(침엽수류), 목질재기타섬유판(밀도0.5~0.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체결에 따라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고 가정할 경우, 제재목의 생산감소액은 34.1억~50.6억(0.4%), 섬유판 27.6억~29억(0.5%), 파티클보드 3천만~4천만(0.02%)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무관세 품목이 많고 실행관세율이 낮으므로 조기관세철폐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제재목과 합판·보드류에 대한 관세 철폐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뉴질랜드 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립투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러시아 FTA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단기임산물은 대부분 비중과 규모가 적다. 그러나 목재류에서는 원목(침엽수류)의 수입규모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재목(침엽수)의 수입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수출되는 단기임산물 가운데에는 고사리의 교역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재류는 섬유관의 교역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OSB 및 웨이퍼보드(기타)는 대 러시아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8.6%로 13.1%인 러시아보다 4.5% 낮다. 종합적인 경쟁력 분석 결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제재목(침엽수)과 성형판(침엽수) 등이다. 협상 체결에 따라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주요 목재류의 생산감소액은 제재목이 33.8억~50.3억(0.4%)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합판, 섬유관, 파티클보드는 영향이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러시아의 임산업 구조와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원목수출세 부과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협상 시 고려할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목재 가공산업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제재목과 합판·보드류에 대한 관세 철폐는 최대한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러시아의 투자여건 개선 및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협력방안이 필요하겠다.

다. 한국-호주 FTA

호주에서 수입되는 단기임산물 중 기타견과류(잣, 은행, 기타)의 교역규모와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류에서는 원목(기타침엽수류), 칩상·삭편상의 목재(활엽수류), 목질재섬유관 등의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를 넘으며, 수입의존도도 높다. 수출품 중에는 기타섬유관 만이 1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8.6%로 2.9%인 뉴질랜드보다 약 3배 높다. 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기타견과류(잣, 은행, 기타), 칩상·삭편상의 목재(활엽수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주요 목재류의 생산감소액은 제재목 4.4억~6.5억(0.05%), 섬유관 46.1억~48.5억(0.8%), 파티클보드 14.6억~19.4억(0.7%) 정도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주의 임산업 구조와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고관세 품목인 잣 등의 견과류와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합판·보드류에 대한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기타견과류에 대한 관세 인하는 수용하되

제재목과 합판·보드류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협상 입장을 견지해야 하겠다. 아울러 호주 현지투자 시 한국 투자자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한국-GCC FTA

GCC로부터 수입되는 임산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품목 중 단기임산물 중에는 표고버섯이 있으나 1만 달러 미만으로인 나타났고, 목재류에서는 칩엽수합판, 케이스·상자·포장용기, 목질재섬유판(밀도0.5~0.8) 등이 10만 달러 이상의 교역규모를 나타냈다. 한국의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 8.6%는 사우디를 기준으로 한 세율 5.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산물 종류별 평균 실행세율을 비교해 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은 한국이 17.4%로 사우디 4.2%보다 높으나, 석재류와 목재류의 경우 사우디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수출입 품목이 FTA 체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CC와의 임산물 수출입이 거의 없어 FTA 체결로 인한 영향 측정은 불가능하였다.

GCC시장의 지속적인 건설업 성장으로 한국 목재류의 수출을 기대되므로 FTA협상에서 합판·보드류에 대해 과감하게 관세철폐를 주장하여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규정과 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7.6 2008년 재정사업 모니터링 연구(산림보호국)

연구자: 석현덕, 장철수, 이경일, 김영단, 김현근
연구기간: 2008. 5 ~ 11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산림청 산림보호국 주요 5개 산림사업의 시행과 재정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추진 역량, 현장 품질, 정책수혜자 만족도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핵심 체크사항을 선정하여 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향후 정책품질의 향상과 발전적인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모니터링 평가 결과, 각 대상 사업별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 생태 숲 조성

-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기존 조성된 생태 숲의 견학 및 관계자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한 정보수집 항목, 정책시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항목, 관계자들과의 정보교환 실적 항목, 담당공무원의 정책 시행을 위한 정보 및 지침 제공 항목, 기술 향상 노력정도 항목 등은 [보통] 이었음.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계획의 적정성 부문과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대체로 [보통] 이었으며 사업설계 부문에서는 일부 항목이 [미흡] 하였음.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4.1점]으로 비교적 높았음.
- 향후에는 생태 숲 본래 목적이 왜곡되지 않게 유도하기 위해 생태 숲 조성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사업지의 선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생태 숲 관련 관계자들 간 교류증진 및 확대를 통하여 생태 숲 조성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산림헬기 운영

-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하였음.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산불발생 저감을 위한 단축체계 항목은 [보통] 이었음.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4.7점]으로 매우 높았음.
- 향후에는 예산 확충을 통한 산불진화대원 운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불진화에 있어 지상 및 공중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산불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 산림청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방사업

-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의 효율적인 구성 정도 항목, 현장, 교육 등 기술향상을 위한 실적 항목은 [보통] 이었음.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사업설계와 현지사정과의 부합여부 항목은 [보통] 이었으며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발전시킨 실적 항목은 [미흡] 하였음.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4.1점]으로 비교적 높았음.
- 향후에는 사업 설계 시 충분한 사전협의와 현지 조사를 통한 현지여건 반영으로 사방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노력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임도시설

-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사업목표 및 계획에 맞는 예산편성, 효과적인 예산배분을 위한 실적 항목, 기술 향상을 위한 실적 항목은 [보통] 이었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의 효율적인 구성 항목은 [미흡] 하였음.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시공업체의 노력 항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발전시킨 실적 항목은 [보통] 이었으며 시공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여부 항목은 [미흡] 하였음.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4.0점]으로 비교적 높았음.
- 향후에는 시·군 간, 관리주체별, 구간별 임도시설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임도기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임도시설의 다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병해충 방제

-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자원배분의 적정성 항목이 [보통] 이었음.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피해목 수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 항목, 목표달성을 위한 약제·장비들의 사전 확보 항목, 방제작업 참여자의 작업에 대한 책임감 항목은 [보통] 이었으며 방제사업에 대한 효과

항목, 조사 등 사후관리 노력 항목은 [미흡] 하였음.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4.2점]으로 비교적 높았음.
- 향후에는 병해충 발생패턴이 군소적 발생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 단위 면적을 방제하기보다는 군소적인 발생지를 방제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군소별 방제가 가능한 직영 방제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방제업체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2차 피해를 예방하여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제사업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은 환류과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나 대부분 중·장기 과제이므로 향후 관계기관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7.7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재정성과 모니터링

연구자: 석현덕, 김성주
연구기간: 2008. 8 ~ 12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산림청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과 재정 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 기준을 정책추진 역량, 현장 품질, 정책수혜자 만족도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핵심 체크사항을 선정하여 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반영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품질 향상과 발전적인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모니터링 평가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추진역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관계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협의실적이 다소 미흡하며, 정책시행을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품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양호] 하였으나 사업설계 시 선정위원과 사업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투명성 유지 및 소득지원품목의 평형성이 다소 미흡하며, 사후관리에 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수혜자 만족도는 15.0점 만점 중 [11.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향후 정책수혜자 선정 시 지원품목 및 지원범위의 폭넓은 확대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에는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지 않게 유도하기 위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사 하는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사업 계획과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방문과 감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불어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은 환류과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나 대부분 중·장기 과제이므로 향후 관계기관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7.8 2008 임업관측(밤)

연구자: 장철수, 석현덕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임업관측(밤)의 주요 목적은 정보가 부족한 생산농가들에게 밤 작황 및 생산을 포함해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밤 시장과 수출입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주요 관측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과 실제 재배실태, 지역별 생육동향 및 단수, 병충해 동향, 추정생산량과 유통량, 가격동향과 전망, 수출입 동향과 전망, 기상전망 등이다.

3. 연구결과

가. 정보수집

주산지의 표본 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대해서는 월보발행 전달 말에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재배의향면적, 생육동향, 작황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 자문위원 및 통신원 23명에 대해서는 전화와 우편설문을 병행하여 지역별 밤 재배동향과 작황, 병충해상황 등을 심층 조사하였다. 금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지역 생산량 및 평균 응답횟수, 연령, 재배경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

가와 지역별 자문위원 및 통신원을 일부 교체하였다. 밤의 산지가격에 대해서는 지역별 자문위원과 통신원 및 밤 수집을 담당하는 산림조합, 농협 등을 통해, 그리고 소비지가격에 대해서는 중부시장과 산림조합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출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산림조합, 관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생산은 중국, 소비는 일본에 대해 자료를 인터넷과 현지 농수산물유통공사지국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나. 관측정보 분석

조사 자료를 집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모형분석 및 예측작업이 이루어진 후 월보 발행 달의 9일을 전·후하여 중앙관측자문회의를 현지 또는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하여 월보 초안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금년에는 중앙관측자문위원 가운데 수입 부문을 산림조합중앙회 유통담당 그리고 산지유통은 부여 밤 영농조합대표 등으로 일부 교체·보완하였다. 중앙관측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재조사와 보완을 하고 재분석을 통해 월보를 작성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다. 관측정보 분산

밤 관측정보는 연간 7회(3, 5, 7, 8, 9, 10, 11월) 월보를 발행하였다. 이 가운데 8월과 10월은 밤의 특성을 감안하여 속보를 발행하였다. 월보 발행 달의 15일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연구원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인쇄된 월보는 밤 주산지의 표본 농가,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중앙자문위원, 산림조합 및 단위농협, 산림청, 산림과학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지역 울림회, 전국 밤 재배자협회, 지역단위 생산자협회 등을 포함한 밤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에게 발송된다.

2008년도에는 발행 달에 3,400부를 발행하여 연간 총 23,800부를 송부함으로써 지역의 수요에 대처하였다. 또한 농업전문지, 각종 언론을 통해 관측정보가 제공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의 관측정보에 농업관측정보와 함께 임업관측정보란을 개설하여 월보와 연차동향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발행 달의 월보를 PDF 형식으로도 제공하여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의 관측월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도 인터넷 발송을 하였다.

라. 생산자의식조사

표본 농가 등을 포함하여 총 100명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하여 밤 관측결과에 대한 생산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측결과가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90.87%로 높았으며, 가격결정(46.4%), 판매시기결정(28.4%), 재배관리결정(12.4%), 생산면적조정(0.5%) 순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정보의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98.9%가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수요로서는 가공분야(78.1%), 생산기반조성(5.6%), 유통분야(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68%), 기능성 연구 및 홍보(26.8%), 기타(5.2%)로 가공제품의 개발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주요 건의사항으로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내수진작을 통한 가격안정, 다양한 밤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 친환경재배기술 보급 및 확대,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변화,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 지원, 병해충방제 기술개발 및 품종 개발, 노령화 등 임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으로 나타났다.

7.9 2008 임업관측(표고버섯)

연구자: 장철수, 석현덕, 김영단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임업관측(표고버섯)의 주요 목적은 정보가 부족한 생산농가들에게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표고버섯 시장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진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주요 관측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과 실제 재배실태, 지역별 생육동향 및 단수, 병충해 동향, 추정생산량과 유통량, 가격동향과 전망, 수출입 동향과 전망, 기상전망 등이다.

3. 연구결과

가. 정보수집

주산지의 표본 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에 대해서는 월보발행 전달 말에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재배의향, 생육상황,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고, 30명의 지역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화와 우편설문을 병행하여 지역별 표고버섯 재배동향과 작황, 병충해 상황 등을 심층 조사하였다. 금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지역 생산량 및 평균 응답횟수, 연령, 재배경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가와 지역

별 지역위원을 일부 교체하였다. 표고버섯의 가격에 대해서는 가락시장, 농협, 산림조합 유통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출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생산동향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현지 농수산물유통공사지국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나. 관측정보 분석

조사 자료를 집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통계분석 및 예측작업을 수행한 후 월보 발행월 9일을 전·후하여 중앙관측자문회의를 현지 또는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하여 관측월보 초안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금년에는 중앙자문위원 가운데 재배부문의 위원을 일부 교체·보완하였다. 중앙관측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재조사와 보완을 하고 재분석을 통해 월보를 작성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다. 관측정보 분산

표고버섯 관측월보는 연간 8회(3월~11월, 8월 제외)에 걸쳐 발행되었다. “임업관측(표고버섯)”은 월보 발행 월 15일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연구원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인쇄된 월보는 주산지의 산림조합 및 농협, 작목반, 표본 농가, 자문위원 및 통신원, 지자체 등으로 발송되었다. 또한 버섯신문 등 농림업전문지에 임업관측월보의 내용이 게재되었고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기타 임업 유관기관 관련자에게 주요 내용이 전자메일로 발송되었다.

2008년도에는 발행 달에 3,400부를 발행하여 연간 27,200부를 송부함으로써 지역의 수요에 대처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의 관측정보에 농업관측정보와 함께 임업관측정보란을 개설하여 월보와 연차동향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발행 달의 월보를 PDF 형식으로도 제공하여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의 관측월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도 인터넷 발송을 하였다.

라. 생산자의식조사

표본 농가 등을 포함하여 총 100명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하여 표고버섯 관측 결과에 대한 생산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측결과가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매우 높았으며, 가격결정(46.2%), 재배 관리(35.2%), 판매시기 결정(11.1%), 재배면적 조정(7.5%)순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부문에 있어서는 재배동향(43.8%), 가격동향(24.7%), 수출입(18.5%), 기상 전망(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정보의 신뢰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며 (91.8%), 현 8회의 발간횟수에 대해서는 적당하다(84.0%)는 의견이 많았다. 표고버섯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종균 및 재배 등 기술 개발 (91.9%), 유통(4%), 가공(3%), 표고자목공급(1%)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 수요로서는 표고버섯 기능성 연구 및 홍보(66.3%), 가공제품 개발 (23.5%), 판로개척 등 기타(10.2%)로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우량종균 개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수입 원산지 표시 강화, 안정적인 표고자목 공급 및 톱밥재배 지원 강화, 기술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활성화 등 판로개척 다양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7.10 2008 임업관측(대추 · 뽕은감)

연구자: 장철수, 석현덕, 김현근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임업관측(대추 · 뽕은감)의 주요 목적은 정보가 부족한 생산농가들에게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추 · 뽕은감 시장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 전망 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주요 관측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과 실제 재배실태, 지역별 생육동향 및 단 수, 병충해 동향, 추정생산량과 유통량, 가격동향과 전망, 수출입 동향과 전망, 기상전망 등이다.

3. 연구결과

가. 정보수집

주산지의 표본 농가 250호(예비농가 50호 포함)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 하여 재배의향, 생육상황,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고, 43명의 지역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재배규모와 작황을 심층 조사하였다. 금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지역 생산량 및 평균 응답횟수, 연령, 재배경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가와 지역별 자문위원을 일부 교체하였다. 대추 · 뽕은감의 산지가격 및 소비지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산림조합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출입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시장동향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나. 관측정보 분석

조사 자료를 집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모형분석 및 예측작업을 수행한 후, 월보 발행 달의 9일을 전·후하여 중앙관측자문회의를 현지 또는 우리연구원에서 개최하여 월보 초안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금년도에는 중앙관측자문위원 가운데 산지유통 부문에 상주곶감발전협의회 회장 및 보은 대추연합회 회장 등으로 일부 교체·보완하였다. 중앙관측자문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재조사와 보완을 하고 재분석을 통해 월보를 작성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다. 관측정보 분산

대추·뽕은감 관측월보는 연간 5회(4, 8, 9, 10, 11월) 월보를 발행하였다. “임업관측(대추·뽕은감)”은 월보 발행 달의 15일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연구원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인쇄된 월보는 대추·뽕은감 주산지의 표본 농가,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중앙자문위원, 산림조합 및 단위농협, 산림청, 산림과학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지역단위 생산자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을 포함한 대추·뽕은감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에게 발송된다. 또한 농업전문지에 임업관측월보의 내용이 게재되었고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기타 임업 유관기관 관련자에게 주요 내용이 전자메일로 발송되었다.

2008년도에는 발행 달에 2,300부를 발행하여 연간 총 11,500부를 송부함으로써 지역의 수요에 대처하였다. 또한 농업전문지, 각종언론을 통해 관측정보가 제공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의 관측정보에 농업관측정보와 함께 임업관측정보란을 개설하여 월보와 연차동향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발행 달의 월보를 PDF 형식으로도 제공하여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의 관측월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도 인터넷 발송을 하였다.

라. 생산자의식조사

표본 농가 등을 포함하여 총 100명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하여 대추·뽕은감 관측결과에 대한 생산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측결과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97.8%로 매우 높았으며, 가격동향(44.2%), 전체적인 동향(28.2%), 재배동향과 수출입 전망이 각각(10.4%) 순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정보의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신뢰가 58.5%, 보통이 41.6%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제공정보의 전문화, 지역통신원 등의 보강,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꾸준한 내실화추진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추·뽕은감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수요의 우선순위는 판로확보지원(32.3%), 유통지원(26.0%), 생산기반조성(2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성 연구 및 홍보(68.8%), 다양한 가공제품개발(18.8%), 기타(12.5%)로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주요 건의사항으로서는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강화, 가격 안정화,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 직거래 등 판로 개척 다양화, 유통 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홍보활동 지원, 수입 원산지 표시 철저, 병충해 방제기술 개발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동향 분석 연구



8.1 세계농업정보

연 구 자: 이명기

연구기간: 2008. 1 ~ 12

1. 연구의 목적

- WTO 체제에서 세계 각국의 농업, 농정, 농산물 무역 등에 관한 동향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농업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급변하고 긴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행정기관, 연구자, 생산자, 기업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입안을 비롯하여, 농업경영, 기업 활동, 농산물무역 증진, 국제 농업협력 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정보수집

- 국내 전문가에 대해 집필 의뢰하여 정보입수
- 외국의 농업관련 각종 자료 및 문헌 검색을 통해 수집
- 국내 및 각국 농업관련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입수
- 농업분야 유관기관의 해외출장복명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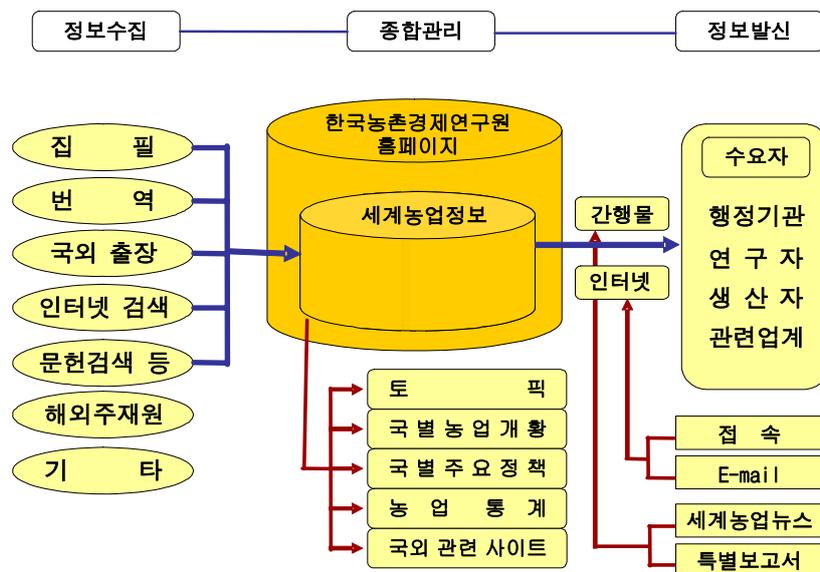
□ 제공 정보

- 국별 농업·관련산업 개황 및 뉴스
- 주요국의 농업정책 분석 및 뉴스
-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 동향 및 전망
- 세계 및 미국 축산물수급 동향 및 전망
- WTO, FAO, OECD 등 국제기구 논의동향 등
- 세계 주요국 농업 통계

□ 정보의 제공 및 공유방법

- KREI 홈페이지에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설치, 정보 제공
- 홈페이지 자료는 보완·분류하여 ‘(월간)세계농업’ 간행, 배포
- 축적된 정보는 국별, 주제별, 품목별 등으로 DB를 구축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

< 세계농업정보 운영체계 >



3. 연구결과

- 세계농업정보 홈페이지상의 정보제공
 - KREI세계농업: 115편
 - 세계농업브리핑: 401회
 - 국내외 수집자료: 167회

- (월간)세계농업 간행: M 45-89~100, 매월 780부, 각권 약 140페이지

9. 기 획 조 정 실



9.1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조사

연구자: 김동원, 박혜진
연구기간: 2008. 9 ~ 11

1. 연구의 목적

- 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2. 연구개발 내용

- 2008년도 조사는 2006년에 이어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포함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 국제 원유값 급등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 국제 곡물값 폭등 등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던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인식과 의식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 이 조사보고서는 정책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8년 9월 한달간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임.

-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 순위로 ‘시장개방 대책’을 꼽았으며, 농업인은 그 다음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시민은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주문하였음.
- 정부의 수출농업 추진에 대해 농업인 과반수 이상(60.2%)이 ‘수출농업은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함.
-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인의 96.5%가 ‘농자재값 상승으로 영농비가 30%이상 상승’하였다고 응답해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도시민들은 육류와 곡물 구입 시 ‘원산지’를 우선 고려해 구입하고, 채소와 과일, 수산물, 외식 시에는 ‘품질과 맛’을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음. 수입 식품 구입의향에 대해 ‘수입쌀’은 6.2%, ‘미국산 쇠고기’ 10.6%로 낮은 구입 의향을 나타냈으며, 호주산 쇠고기 19.0%, 수입과일 21.4%, 수입 가공식품 14.5% 등으로 나타남.
-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도시민들은 30.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할 수 없어서’가 36.2%,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가 35.6% 등으로 나타났음.
- 식품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는 도시민은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산지 표시제 강화 조치에 대하여 45.4%가 ‘실효성이 있다’, 21.4%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음.
- 현재 거주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0.0%, 도시민은 49.8%로 19.8%p의 도-농 격차를 보였음.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도 농업인은 13.1%가 삶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했지만 도시민의 19.3%에 비해 6.2%p 낮음을 보였음.
-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시민 73.3%가 ‘찬성’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또한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도시민도 85.6%로 높게 나타났음.
- 10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한 도시민은 2006년 33.5%, 2008년 29.4%로 긍정적인 전망이 낮아지고 있으며, 농업인은 18.0%에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음.

-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은 93.5%로 2006년 조사결과보다 중요성 인식 비율이 5.4%p 증가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농업보호와 농촌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는 40.5%가 ‘찬성’해 2006년 52.8%에 비해 지지도가 약화되는 추세임.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농업보호 의식도 지난해와 비슷한 60.4% 수준에 그쳐 하락추세에 있음.
- ‘농산물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안전성과 가격 우선’이라는 도시민은 61.3%로 나타났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 구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38.0%로 2006년보다 2.0%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곡물자급률을 훨씬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006년(59.5%)까지 하락했으나 식량자급률에 대한 중요성 홍보 등을 통해 2008년 71.7%까지 상승함.
- 이밖에,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2.2%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8.4%, ‘승계할 것’이라는 응답은 8.0%에 그쳐 영농승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납세자로서의 직접 지원 의지는 매년 약화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을 꼽고 있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식품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 노력이 요구됨.

2008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8.1~12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9. 2.

발 행 2009. 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